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1-02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 전현준 · 박영자 · 윤철기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1-02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 전현준 · 박영자 · 윤철기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10,000원

ISBN 978-89-8479-682-9 9334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2-11-02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통일연구원
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한양대학교
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임 강 택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팀장)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박 형 중 선임연구위원 박 영 자 연구교수(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윤 철 기 연구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장 형 수 교수 김 석 진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임 을 출 연구부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 종 무 소장 김 태 균 조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송 정 호 조교수(우석대)
	국토연구원	이 상 준 선임연구위원 김 경 술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김 영 훈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차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전현준 박영자 윤철기

I. 서론	1
II.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5
1. 당 부패	8
가. 최고위 당간부 부패	8
나. 조직 및 국가 부패	14
다. 도당 행정부장, 당비서, 지배인, 조직부 지도원 부패	15
라. 물건구입 부정과 국가재산 약취	16
마. 원조미 편취	17
바. 간부직책의 차이에 따른 부패	20
사. 기구개편을 통한 부패	21
아. 30만 달러 축재 운동	22
자. 간부 부패의 차이와 뇌물 공유	23
차. 이권다툼	24
카. 권력계층의 부유층화	25
타. 부패의 일상화	25
2. 군 부패	26
가. 군부 부패의 일반화	26
나. 군 상층부 부패	28
다. 후방총국, 폭풍군단, 정찰총국 부패	29
라. 군대 내 입당 및 휴가 부패	31
마. 군대의 도둑질	31
바. 군관 부패	32
사. 여군 성상납	33
아. 군부의 외화벌이 독식	33
자. 군기밀 판매	34

목차

3. 정부(보위·보안) 부패	34
가. 인민보안부 각 부서의 부패	34
나. 국가보위부의 부패	36
다. 교육 부패	37
라. 비사그루빠 부패	40
마. 기관 부패의 광역화	42
바. 자재유출과 고리대금업	50
사. 남한 관련 비리	51
아. 꽃제비와 보안원의 유착	53
자. 국경지역 부패	54
차. 손전화 및 CD 관련 부패	55
카. 장마당 부패 사슬	56
타. 돈세탁 부패	57
파. 여행증 부패	57
4. 사법 부패	58
가. 사면권 오용	58
나. 뇌물에 의한 감형	59
5. 사회 부패	60
가. 사회단체	60
나. 일반인	62
6.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	64
가. 뉴턴의 4법칙	64
나. 부패기준	64
다. 과제수행 여건차이 때문에 부패발생	65
라. 실적주의가 부패원인	65
마. 부패처벌의 이중 잣대	66
바. 부패의 기회비용	67
사. 남간부의 자포자기	68
아. 행정간부들의 불만	68

III.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71
1. 머리말: 시간과 방법론	73
2. 왜 평양인가? ‘후견-피후견’ 및 ‘체제적 부패’의 전형(典刑)	75
가. 북한시스템의 원형(原型) 도시	75
나. 기이한 풍요와 통치술	77
다. 평양 내 계층분화	78
라. 뇌물-부패 및 연계 양상	80
3. 지역별 ‘권력-부 네트워크’ 환경: 지역-행위자 차이와 특징	82
가. 북한 지역-행위자 차이	82
나. 평양 내외 지역 차이	83
다. 특징과 의식 차이	85
4.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권력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	86
가. 이윤창출의 기제	86
나. 보호와 특혜	90
다. 후견자 부패인식	91
5.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93
가. 뇌물(고이기)과 선물	94
나.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영향력 행사	98
다. 파트너십: 알쌈	99
라. 피후견자 부패인식	102
6. 맺음말: 진화경로와 ‘공생-균열의 프랙탈’	103
가. 영향력 게임: 각기 더 풍요하고 안전한 이익추구	105
나.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가능성	106
다. 공생-균열의 프랙탈	107

목차

IV.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113
1. 북한에서 체제적 부패	115
2. 체제적 부패의 원천으로서의 렌트	117
가. 계획경제에서 렌트 양상의 변화: 계획의 시장의존 현상과 렌트추구	118
나. 시장화와 렌트: 저발전 사회의 구조적 특성	120
다. 외연적 렌트	122
3. 렌트와 체제적 부패	125
가. 계획의 시장의존형 렌트추구	125
나. 관료와 돈주의 유착	128
다. 외화벌이와 워크	131
라. 관료의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	133
마. 대외원조의 사적 전용	135
4. 북한의 정치와 경제	138
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강화	138
나. 새로운 지배수단, 시장: 시장화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142
V.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149
1. 머리말	151
2. 세계은행의 부패인식과 반부패 정책	153
가. 세계은행에서 부패문제의 주요 관심사화	153
나. 체제이행 국가에서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154
다. 반부패 조치	157
라. 거버넌스와 반부패	159
3. 세계은행 반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162
가. 칸의 개발도상국 부패만연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논리	163
나. 웨드만의 부패유형의 구별	168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전현준 박영자 윤철기

4.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169
가. IBRD의 반부패 전략	170
나. 부패 척결 의지의 부재	171
다. 북한 부패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필요	172
라. 북한의 부패 감축과 정권 생존의 갈등	173
마. 북한 부패 감소를 위한 장기 시야	175
참고문헌	1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5



표·그림목차

<표 II-1>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69
<표 IV-1>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148
<그림 IV-1>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144
<그림 IV-2>	북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변화추이	146



I 서론

북한에서 부패는 체제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만연은 내부적으로 반(反)개혁적 이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설령 모니터링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반부패 전략과 대외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참작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의 연구 성과를 북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도이다. 부패 연구는 국제학계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오고 있지만, 이 문제를 북한에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는 1990년대 중반의 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대북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북한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부패가 전 사회에 만연하여 체제 작동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통합적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부패만연 실태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그것을 유형화함으로써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를 통해 북한 부패양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패양상을 세 가지 접근을 통해 분류하고 분석한다. 첫째, 1차년도의 부패유형화를 기준으로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패 사례를 정리한다. 여기서는 북한에서 부패는 매우 다양하여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부패가 존재함을 서술한다. 둘째, 부패망이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에 착안하여 후견-피후견론을 적용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부패망을 연구한다. 여기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평양에서의 부패와 관련한 후견자와 피후견자의 행위 구조와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부패양상과 네트워크를 서술한다. 셋째, 부패가 북한체제 전체에 스며들어

I
II
III
IV
V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 부패의 특성을 알아본다. 북한체제의 경우 계획과 시장이라는 제도적 수준에서 렌트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패에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패가 체제화된다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북한 부패에 대한 반부패 전략을 시론적으로 모색한다. 본 연구가 대북지원과 관련한 국제협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 한다.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은 국제학계의 반부패 정책연구의 성과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업계에 표준이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을 북한에 적용할 때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반부패 정책의 대강을 소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처방에 비판적인 논의를 대비시켜 본다.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저발전국가가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세계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개념의 반부패 정책이 얼마나 부패를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얼마나 유효한 처방인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세계은행의 처방이 반드시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부패 감소를 위한 정책내용 및 장기적 도정을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지를 서술한다.



II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북한관료들의 부패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뇌물은 기본이고 착취와 도적질, 돈세탁, 차액 착복, 외부 지원품 유용, 군기밀 판매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패 종류가 존재한다. 이 글은 북한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의 경험적 양태를 서술한다. 부패의 유형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연구가 있었다.¹ 이 연구는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부패의 양태를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이 연구를 참고로 하지만, 북한 부패양태에 직접 적용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여기서는 부패형태가 아닌 당·군·정·사법·사회 등 분야로 나누어 부패양상을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은 1차년도에서의 부패유형의 개념적 구분과는 차이가 있지만, 직접적·경험적 양태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여기서 제기한 여러 경험적 양태를 1차년도의 개념적 유형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장은 북한의 부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첫째, 부패가 일상화되고 준제도화되어 관료들의 죄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관료들의 부패 정도는 조직부·간부부·국가보위부·인민보안부·인민무력부 등 소위 힘이 있는 부서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중앙당 고위 관료들의 부패는 그 규모가 크다. 넷째, 중견간부들은 직책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한몫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 다섯째, 뇌물을 받은 관료는 50%는 자기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 50%는 타부서 지원과 국가사업에 사용한다. 여섯째, 여성들의 경우 입당이나 시장에서 장사를 위해 성을 상납하고 있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곱째, 군부는 선군정치를 이용하여 군소유 토지를 외화벌이 장소로 활용한다. 여덟째, 국가는 주택건설 등 각종 국가사업을 각 부처에 떠맡겨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아홉째, 관료들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I
II
III
IV
V

¹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0~36.

등 외부에서 지원한 식량이나 의약품을 착복한다. 열 번째, 고위간부들이 챙기는 가장 큰 뇌물은 은행대출에 대한 압력의 대가이다. 열한 번째, 장마당은 부패의 온상이다. 일반인들은 경제난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에 나선다. 열두 번째, 부패 타파를 핵심 업무 중의 하나로 하는 ‘비사그루빠’까지 부패하고 있다. 열세 번째, 사회분야에서는 부패만연으로 말미암아 북한 체제 유지의 근간인 생활총화가 무력화되고 있다. 열네 번째, 사법기관도 부패의 온상이며, 최근에는 김정은 등장과 함께 취해진 대사면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있다. 열다섯 번째, 교육과 관련한 부패도 많다. 열여섯 번째, 일반 사람들은 생계형 부패를 저지른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부패 실태를 당 부패, 군 부패, 정부(보위·보안) 부패, 사법 부패, 사회 부패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본다.

1. 당 부패

가. 최고위 당간부 부패

(1) 김정일 부패

“김정일한테도 고인다. 매해 1월 1일 김정일한테 2000만 달러 올리고, 2월 16일 때는 무조건 2160만 달러 올려야 한다. 무역은행이나 지도국들까지 합쳐서 그렇다. 부서별로 몇 만 달러가 떨어진다. 다 모아서 2000만 달러 올린다.”²

(2) 김경희 부패

“강원도 문천에 9월 21일 제련소가 있다. 외화벌이 사람들이 연, 아연정

² 북한이탈주민 6.

광, 물리브덴정광을 제련하기 위해 가득 갖다 놓는다. 그런데 김경희가 거기 한번 내려오면 아예 싹 다 녹아버린다. 김경희가 ‘현재 들어온 정광 수량 가지고 내려오라’라고 해서 가져다 놓으면 ‘이번에 4월 15일, 전국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사탕가루 보장용으로 이거 다 돌린다’ 그럼 다 끝이다. 거기 몇 백 톤씩 넣고서 돈 몇 만 달러의 괴가 나올 거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아예 나앉고 만다. 대신 당에 얼마만큼 기여했다는 기여증 종이 한 장 준다. 그걸 입에다 물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데서 많은 돈을 빚내서 정광을 생산해서 제련소 가서 넣었는데, 하루아침에 김경희가 와서 사탕가루 생산용으로 싹 다 빨아올려 간 거다.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진짜 왕부패들은 이놈들이다. 김정일이 예금돼 있는 돈을 써서 아이들 사탕가루 사주었는데 돈은 그런데서 다 빨아서 마련한다. 마지막에 녹는 건 하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도국들에서는 아리랑 축전 제발 안 했으면 하는 게 소원이다. 아리랑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꾸 아리랑 올 때마다 선물 좀 줘야지 하니까. 아, 그게 돈 간단치 않게 나간다. 아리랑 할 때마다 모든 의약품, 비품들, 그리고 아이들 간식 등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에 김정일이 기분이 좋으면 텔레비전 한 대씩 주라하면, 그게 뭐 김정일이가 주는 게 아니고 중앙당 재정경리부가 각 지도국에다 분담해 가지고 돈을 빨아 들여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패왕초는 고급 옷대가리들이다. ‘당일군들은 당당하게 먹고, 보위원들은 보이지 않게 먹고, 안전원들은 안전하게 먹는다’ 이런 식이다.”³

(3) 행정부 리영화 부장의 부패

“당행정부장은 내적으로는 장성택이 아니라 리영화가 한다.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전반 사업을 많이 관여한다. 명칭은 그저 당중앙위

³ 북한이탈주민 6.

원회 부장으로 나왔지만 리영화가 부장으로 정식 임명됐다. 행정부는 조직 부나 간부부처럼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중앙당 조직부 행정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소화시키기가 힘들다. 조직부 행정담당 권한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내려가서 누군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바친 뇌물을 먹는다.”⁴

(4) 장성택 매부 리태남의 부패

“지금 중앙당 비서로 있는 리태남이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할 때 2005년 도인가?(남한 언론은 1990년대 후반으로 보도) 순천시에 ‘돌두령사건’이라고 소문이 세계 났었다. 순천시의 화강석 광산을 개발한 지배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화를 네 번 갔다 온 사람이다. 교화를 네 번 갔다 온 사람인데, 사람이 상당히 수완꾼이고, 영리한 부류였다. 이 사람이 도무역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도당비서였던 리태남에게 10만 달러를 바쳤다. 리태남은 이 돈을 먹고 도무역은행 지배인에게 50만 달러 대출을 명령했다. 도은행 지배인은 도당 책임비서의 보증이고, 장성택의 매부이자 김정일의 사돈이라는 막강한 배후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대출 해주었다. 50만 달러를 대부해 주게 되면 다시 거기서 사례금으로 10만 달러를 리태남에게 준다. 리태남은 전화 한 번 해준 값으로 20만 달러를 거기서 꿀떡했다. 이게 간부들이 최종적으로 돈 받아먹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결국 돌두령하고 순천시당 책임비서랑 총살당했다. 순천검찰소장, 보안서장, 보위부장 다 돈 먹었다. 그 사람들 총살할 건 총살하고, 교화 보낼 건 교화 보내고 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리태남이는 다치지 못했다. 평남도 주민들 속에서 영향이 좀 나쁘니까, 중앙당으로 조동시켜서 중앙당 비서로 근무하고 있다.”⁵

⁴ 북한이탈주민 6.

(5) 전병호의 부패

“전병호 비서가 조선통일발전은행을 담당한다. 통일발전은행을 담당해 보는데, 그 통일발전은행 자체가 돈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중앙당 3호 청사는 통일발전은행을 이용한다. 김경희는 평천에 있는 대동아시아신용은행을 담당한다. 간부들이 돈을 챙기기 좋은 게 자금대출이다. 평균 30%의 커미션을 먹는다. 30%는 의례히 갖다 바치는 거고, 거기에는 문서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돈을 50만 달러를 대부받았으면, 내가 50만 달러를 대부받았다는 계약서를 다 쓰고 차용담보서를 다 쓰고 마지막에 간부들한테 가져다 준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지배인이 후에 문제가 제기될 때 전병호 비서나 리태남 비서가 전화해서 대부 처리해줬다고 말 못한다. 그 말 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죽는다. 그것도 제가 잡아먹을 확률이 되는 사람이라야 말한다.”⁶

(6) 홍석형의 부패

“홍석형이가 2011년 6월 체포됐다. 2010년 7월 함북도당 책임비서로부터 박남기 후임으로 당 계획재정부장으로 왔다. 2011년 3월 말경 김정일이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고 가면서 ‘함경북도 완전 오몰장이다’ 이렇게 결론되면서 최룡해와 김기남이 내려와서 대량 집중적인 검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홍석형이 책임비서할 때 중국에 개인 재산으로 약 170만 달러를 예금해놓은 것이 발각됐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스위스 은행에까지 예금해놨던 것이 드러났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2만 달러 이상 외국 은행에 예금을 시켜놨을 때는 앞으로 탈북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도로 보고, 보위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다.

⁵ 북한이탈주민 6.

⁶ 북한이탈주민 6.

4년 전부터 북한에서 손전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홍석형이 함북도 체신 관리국장하고 판매부장과 연결해서 손전화를 판매하고 나오는 수익금을 뇌물로 받았다. 그래서 돈을 축적한 도보위부장, 도체신관리국장 등 도급기관 사람들이 다 잡혀들어 갔다. 그중에서 4명은 총살되고 나머지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홍석형은 보위부 예심국에 들어가서 지금 예심을 받고 있다.”⁷

(7) 재정경리부장 리봉수의 월권

“중앙당 재정경리부장인 리봉수는 자기 아들, 자기 딸 다 중앙당 사택에 넣고, 그리고 이 북한은 또 뭐가 있냐면 중앙당 재정경리부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부터는 매일 아침이면 식료품 차가 간다. 그런데 자기 아들하고 딸, 사위까지도 중앙당 집에서 살게 하고 거기 매일 부식물 차를 돌렸다.”⁸

(8) 체신상 김학섭의 부패

“김학섭은 조쑤친선협회 위원장도 했고 체신상을 했다. 1998년 후반 그도 총살당했다. 그는 체신상을 하면서 북한의 통신설비를 개조한다고 스웨리에(스웨덴)에 가서 통신설비를 다 사왔다. 그런데 사올 때 스웨리에가 이미 쓰다가 버린 상품을 사왔다. 김학섭은 차액 70만 달러를 스웨리에 은행에 예금시켜 놨다. 근데 스웨리에 은행에서 고액 예금주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김학섭이 당첨되어 북한으로 통지가 왔다. 70만 달러 예금한 데서 16%인가 돈이 플러스되었다. 그래서 들켰다.”⁹

⁷ 북한이탈주민 6.

⁸ 북한이탈주민 6, 리봉수는 2004년 경질됨.

⁹ 북한이탈주민 6.

(9) 통일전선부 최승철의 부패

“한국과 많이 거래하던 통전부의 최승철 부부장도 2008년도에 잡혀가서 총살됐다. 통전부에서 최승철 부부장 이하 11명이 총살됐다. 남북협조 문제를 최승철이 책임져서 민경련, 민화협과 접촉하면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서비스 돈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서 받은 거를 당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 개인이 사취했다. 북한은 아무리 인맥관계가 있어서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으면 그건 당에 보고하고 바쳐야 된다.”¹⁰

(10) 부서별 직권 남용

“중앙당 부패도 크다. 중앙당 재정경리부라는 게 있다. 그 소속 냉동차가 2010년도 10월 달에 평양시부터 ‘216’ 번호판을 달고 라진시에 가서 김정일에게 줄 꽃게 선물을 신고 가다 우리 집에 들렸다. 평양에서 라진은 왕복 600km에 달한다. 그 조그만 선물을 싣기 위해 10톤 대형차가 왕복 3일 걸리는 데를 다녀오니 기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는가. 그 큰 차에 식량이라도 신고 다녔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낭비하니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¹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근로단체부·민방위부·경공업부 등은 각 부서가 자기 직권을 최대한 남용한다. 조직지도부면 당생활지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선전선동부는 선전선동 원칙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한다. 선전선동부에는 하부 단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부를 축적한다. 먹고살기 위해 식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한편 보위부, 보안원에게 주는 것은 군량미로 취급한다. 보안원에게 배급을 70%를 준다면, 보위

¹⁰ 북한이탈주민 6.

¹¹ 북한이탈주민 1.

부는 100%를 다 타는 기관이다.”¹²

나. 조직 및 국가 부패

“부패를 척결하는 데서 문제는 뇌물 중 25%의 공적인 사용이다. 25%가 책임비서나 조직비서가 위에 간부들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손님 접대하거나, 국가에서 공급이 못 되는 연료, 휘발유를 보충하거나 회의 조직, 지방 건설 등에 쓰였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 이것이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북한이 노동당이라든가 최고검찰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¹³

“부하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윗간부가 비법을 해서 아랫간부를 챙겨 줄 수밖에 없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간부들이 나가서 뭘 좀 달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군소리 없이 주지만 지금은 다르다. 만일 어떤 것을 주면 먹는 뭇이 줄어들니까 잘 주지 않는다. 직책에 따라 간부격차가 나는 것도 그 원인이다. 사민들은 부서 특성을 따지고, 이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냐를 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 주면 되겠네, 저 사람은 둘을 주면 되겠네, 이런 격차가 생긴다. 윗간부가 아랫간부들 내려다볼 때, 그리고 도당간부를 도당 책임비서가 보니까 조직부는 지도원 포함한 모든 인원이 잘 먹고, 일을 시킬 때 지장이 없다. 그런데 도당 총무부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가 일을 만가동을 시켜야 되겠는데 시킬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윗간부가 불법으로 들여온 일종식량을 그 사람들 챙겨 줄 수밖에 없다. 일종의 시스템이다. 방조를 해주는 거다. 리더십 발휘도 한다. 김정일도 그런 방식이었다.”¹⁴

¹² 북한이탈주민 5.

¹³ 북한이탈주민 5.

¹⁴ 북한이탈주민 5.

“북한 노동자 6만~7만 명이 러시아·중동·아프리카·중국 등에서 일하면서 연간 수익 달러 이상 벌어들인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공식 봉급의 3분의 1을 넘기 어렵다. 중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에 못 미치는 사례도 많다. 대부분의 돈은 김정일 일가를 비롯한 노동당 군부 행정부의 소수 특권층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뜯긴다.”¹⁵

다. 도당 행정부장, 당비서, 지배인, 조직부 지도원 부패

“도당 행정부장은 조직비서·선전비서·책임비서를 챙겨야 한다. 행정부장은 책임비서가 가장 활용을 하는 심복이다. 행정부장은 도당 책임비서의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사업까지 감당을 해줘야 된다. 도당 행정부장이 권력을 남용해서 외화를 축적하면 분배를 해야 한다. 만 달러를 취득했다면 50%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 50%에서 25%는 조직비서·책임비서 등 간부들 사생활에다가 진상을 하고 나머지 25%는 공적으로 사용한다.”¹⁶

“노동자들은 일감은 없어도 공장에 출근해야 된다. 그런데 나가서 얻을 게 없으니까 지배인 당비서한테 찾아가서 한 달 동안에 내가 어디에 나가서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면서 지배인한테다 아니면 당비서한테다 돈을 준다. 한 달에 자기 뭐 10만 원이 난다면 만 원 정도 톡 주면 시간 주는 거 후탈이 없다.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회적 동원이 많다. 함북도에는 어랑천발전소, 소금밭이 있다. 또 큰 공사에 공장기업소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야 한다. 거기 가면 2~3년 동안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몇 달씩 가야 되는데 거기가면 사람이 힘들다. 이럴 때 당비서, 지배인한테 못 가겠다 하고 돈을 주고 빠진다. 부정부패이다.”¹⁷

¹⁵ 권순환, “北 ‘외화벌이’ 뜯어먹기,” 『동아일보』, 2011년 5월 12일.

¹⁶ 북한이탈주민 5.

¹⁷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은 간부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 군급을 놓고 본다면 책임비서라서 보다는 하부말단 책임자라 해도 그 사람 머리에 달린 거다. 큰 권한을 쥐고 직업을 악용하지 못하면 또 못사는 사람도 있다.”¹⁸

“철저히 부서와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직부 지도원은 1년 식량을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 부부장이 그걸 하기가 힘들다.”¹⁹

“한 여성이 보위부 간부와 수시로 성관계를 맺고 빙두(마약을 일컫는 은어)를 넘겨받아 국경지역에서 팔았다. 이 여성은 2006년부터 양강도 혜산시와 삼지연군, 김형직군에서 마약을 팔아왔고 유통된 마약은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kg이나 된다. 이 여성은 당국에 체포됐을 때도 검찰소 검사나 도청년동맹 간부를 매수해 풀려났다.”²⁰

라. 물건구입 부정과 국가재산 약취

“당간부들이 돈을 축적하는 제일 험한 방법은 해외 나가서 뭘 사올 때 새것이 아닌 중고를 사고 나머지를 착복하는 것이다. 물병 하나 열 달러다 하면 네 달러에 사고 문건은 열 달러로 만든 후 여섯 달러는 내 주머니에 들어넣는다. 2004년경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에만 외화벌이 회사가 21개가 있었다. 2006년도인가 만수대창작사 창립 40돐에 만수대창작사 성원들에게 김정일이 100% 중국산 창흥텔레비를 한 대씩 선물을 주도록 지시했다. 만수대창작사에 있는 고려무역 회사하고 백호인가 회사 등 2개 회사 사원이 중국에 나가서 텔레비전을 샀는데 돈을 한 대당 중국에서 67달러인가로 샀다. 근데 그것을 중고로 사서 새것으로 포장하여 주었다. 중고는

¹⁸ 북한이탈주민 1.

¹⁹ 북한이탈주민 5.

²⁰ 노재현, “北간부 사생활 들여다보니 마약장사·불륜,” 『연합뉴스』, 2011년 12월 15일.

한 대당 27달러인가, 28달러였다. 그 차액은 2명이 챙겼다. 텔레비전을 받아 간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제대로 조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리하는 사람을 불렀고 수리공이 중고인 것을 발견했다. 2명은 체포됐는데 돈을 중국은행에다 예금시켜 놨다. 그 둘은 총살되었다. 도이칠란드에 가서 전동차를 수입한 7명도 총살되었다. 도이칠란드에서 수명이 다돼 폐차할 것을 수입하러 간 자들이 낮은 값으로 사왔다. 폐품을 비싼 값에 사온 걸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²¹

“간부들에게는 국가배급이 부식정도에 불과하다. 배급이 부실하니까 알곡 확보에 나선다. 4인 가족 1년 식량 마련이 가장 급선무이다. 도당조직부 간부의 경우 당생활지도 단위들을 이용을 해서 식량을 받든, 식량을 살수 있는 돈을 지원을 받든 대체 물자를 받든 한다. 결국 이것들은 100%가 개인재산이 아니라 국가재산이다. 지역당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식량 충당 방법은 각 시군 농촌리에서 식량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결국은 그것은 농장 텃밭에서 나오는 식량이지, 그게 떨어지는 식량이 아니다.”²²

“강자는 많이 먹고, 약자는 못 먹는 거다. 함북도당은 함북도가 500명이 되는 도당간부가 이제 식량을 얻어 들인다고 하면 결국은 함북도 안에 농촌 지역에서 국가에 공출이 돼서 들어 가야 될 국가식량을 손대는 거다. 그게 사적 식량은 아니다. 결국은 국가의 농업재산을 불법 취득하는 거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²³

마. 원조미 편취

“2000년대 후반에는 협조미 착복이 많아졌다. 북한 알곡보다는 협조미로

²¹ 북한이탈주민 6.

²² 북한이탈주민 5.

²³ 북한이탈주민 5.

들어오는 백미가 질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쌀이 인기이다. 어떻든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착복에 큰 힘이 들지 않는다.”²⁴

“구호물자가 들어오면 암시장으로 들어간다. 평양 서포에 가면 의약품 창고 큰 게 있는데 유엔에서 들어온 의약품 한 지함이 500달러이다. 500달러 한 지함이 창고에서 유출돼 나와서 개인 손에 들어가서 그게 늘어진면 한 2000달러씩 만들어진다. 약이나 모든 의료기구, 식량 등 유엔 지원품이 개인 손으로 유출돼서 돈벌이 수단이 된다. 주민들이 유엔 약이나 한국 약을 좋아한다. 큰 결핵병원에서는 유엔 행사를 한다. 환자 150명을 죽 세워 놓고 미국의 협회가 와서 매 사람들 사진 다 찍고, 그 사람들 가래를 그 자리에서 다 받아서 가져간다. 미국에 가져가면 그 6개월 동안에 매 사람들 사진하고 균을 배양한다. 그래서 그걸 죽이는 약을 만들어서 6개월 있다가 다시 와서 사진하고 대조를 하매 수여한다. 그 약이 1인당 2000달러다. 그 어간에 죽은 사람 뭇은 그대로 남는다. 이것이 원장을 통해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²⁵

“부모들이 없는 꽃제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 그렇다. 머저리들이나 죽은 거다. 남한에서랑 유엔에서랑 고난의 행군 시기에 쌀이랑 많이 줬다. 그게 다 인민들한테 하나도 안 갔다. 암시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군수물자 보장에나 들어갔다. 지원물자들이 암시장에 나온다. 양곡을 취급하는 양정과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암시장에 그렇게 나간다.”²⁶

“유엔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거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평민들한테 오는 건 없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유엔에서 나올 때 말 잘하면 밀가루 두 킬로씩 준다고 했다. 일상적으로 밀가루를 얼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²⁴ 북한이탈주민 5.

²⁵ 북한이탈주민 1.

²⁶ 북한이탈주민 1.

밀가루 두 킬로를 탔다. 초등학교에서 제 친구가 교사질 했다. 그는 식당에서 돈이 요구되면 기름을 도둑질해 팔았다. 아이들 주는 량에서 조절해 갖고 팔기도 했다. 그리고 유엔에서 온 물건들을 직원들이 먹거나, 원장은 군당간부들한테다 고인다.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 뭘 먹지 못해서 길바닥에, 땅바닥에 닿는 정도이다. 유엔에서 검열이 올 경우 아이들에게 이밥을 계속 먹는다고 노래처럼 암송하도록 교육한다.”²⁷

“북한주민들은 도둑질을 하거나 시장에서 비싸게 사야만 그 쌀을 먹을 수 있다. 한국의 대북 쌀 지원은 권력계층들의 부패만 키워주고 또 주민들의 반감만을 만들어 놓고 있다.”²⁸

“북한지역 전체가 지금 한마디로 장사로 유지된다고 해도 과오가 아닐 정도로 장사가 우선 기본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쌀 지원도 주고, 이번에도 밀가루 500톤을 올려가고 했는데, 대다수가 연관 기관 사람들 주머니에 다 들어간다. 그게 장마당으로 빠져나가고, 장마당에서 돈으로 전환돼서 들어간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식량지원을 현지까지 가보겠다 해서 현지까지 간다. 스무 킬로씩 줬다. 철수한 다음에 그 즉시로 가서 다 회수한다. 다만 본인들이 섭섭하지 않게 한 킬로 정도는 떨궈준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말은 못한다. 말하면 관리소에 보낸다. 북한에서는 현 정권 하에서 조금이라도 불만이라도 있다는 걸 표시하면 끝이다. 북한주민들은 ‘내가 굶어죽어도 우리 장군님만 죄기밥 잡숫지 않으면 된다’는 투철한 혁명신념들이 있다. 이제 박사님이 북한에 많이 다녀 봤어도 북한사람들의 심리를 모른다.”²⁹

²⁷ 북한이탈주민 2.

²⁸ 김민화, “北주민, 한국 쌀 지원하지 마세요,” 『이데일리』, 2011년 3월 5일.

²⁹ 북한이탈주민 6.

바. 간부직책의 차이에 따른 부패

“중앙당도 먹을알 있고 권력 있는 부서 즉, 중앙당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과, 간부부, 검열부 아니면 조직부 행정 등이 먹을 거 있다. 이 조직부나, 조직부 검열, 간부부, 당생활지도과 이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 돈을 꼭지로 굶는다고 그런다. 조직부 사람들은 계속 검열 나간다. 검열 나오면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이게 돼 있다. 조직부 검열은 그렇게 돼 있다. 간부부 1과는 당간부, 2과는 간부양성 이렇게 돼 있다. 인민경제대학하고 김일성고급당학교 이 두 개 대학만은 중앙당 조직부 간부 2과에서 추천서를 쓰게 돼 있다. 이 쏘트 하나 받는다는 게 만 달러 더 걸린다. 내가 김일성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받을 때, 이 사람들이 배치하는 데 1과하고 4과가 배치한다. 외무성이나 국제부 서양과에 배치받으면 내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배치문제로 해서 간부부는 조직부 검열부보다 더 안전하게 돈 먹는다. 군대도 같다. 별 하나 주는 것도 간부부가 한다. 당위원회 간부부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간부부는 노동자들과 일반 병사들까지는 책임지지 않지만, 군관들에 한해서는 간부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간부부에만 일단 들어가면 돈 걷어 모으는 자리이다.”³⁰

“힘의 차이, 직권의 차이에 따라 불법행위방식이 다르다. 도당행정부 지도원은 검찰, 재판소에, 보안에 자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걸 하다 보면 자연히 범법자들과 연결이 돼서 범법행위에 손을 대게 된다. 직권이 남용된다. 반드시 불법이 수반된다. 모든 부서 즉, 선전부, 조직부가 같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일을 한다. 아마 도당간부들이 굶어서 못 나온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지하는 탓에 반대로 굶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³⁰ 북한이탈주민 6.

다.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³¹

“식량을 충당하는 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든 건 아니다. 그런데 간부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도당간부가 400명이 된다고 하면 그 식량을 그저 걱정 없이 끌어들이 수 있는 사람이 400명 중에 많이 잡아야 한 50명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³²

“법기관들이 장사하는 거 가만 두면 참 잘살 수 있다. 사람이 자기 능력에 따라 정말 할 수 있는데 법관들은 물동량을 많이 나른다든지 돈이 많고 하면 그 집은 꼭 명중해서 친다. 북한에서는 돈이 많으면 죽어야 된다. 명절 같은 때는 법관들 많이 못살게 군다. 살려면 법관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평범한 날에도 담배 한 막대기 요구하고, 명절 같은 때는 지함 하나 해 달라고 한다. 지함에다 담배고 술이고 다 넣어야 한다. 그걸 안 해주면, 나중에 큰 장사할 때 법관에게 걸리면 더 많이 나가야 되니까 싫은데도 움직여 줘야 된다. 국경에 사는 법관들은 잘 사는데 내륙에 사는 법관들 집에 가보면 평민보다 더 못사는 사람도 있다.”³³

사. 기구개편을 통한 부패

“고위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축재를 하는가? 예를 들어 금강산지도국이 한참 있다 보면 그 역할은 똑같은데 명칭이 바뀐다. 북한은 기구개편을 많이 한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이유는 법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총국과 관련해서 한 4~5년 됐으면 검찰소 검열이 붙는 등 골짜한테 좀 다른 걸로 변경할 것이 논의된다. 김정일에게 제의서를 쓸 것이 논의된다. 북한은 다 제의서 놀음이다. 4~5년 동안 총국장직을 수행

³¹ 북한이탈주민 5.

³² 북한이탈주민 5.

³³ 북한이탈주민 2.

하면서 많은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열이 올 경우 크게 다칠 수가 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 검찰소, 보위사령부 등의 검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조선 안기부와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4~5년쯤 되면 제의서를 내어 조직을 바꾼다.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 조직을 해체시키고 발전적으로 기구를 다시 내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의한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역할은 똑같다. 간부들의 80~90%가 기발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제의서가 통과되도록 사전에 서기실 인맥들에게 상납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제의서가 올라가면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다. 김정일이 수표하는 건,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된다. 거기에 99%는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 한다.”³⁴

아. 30만 달러 축재 운동

“간부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생활 걱정도 없다. 다만 기득권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위해서 기회만 되면 더 챙긴다. 식량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거고 지방 같은 경우 간부들이 권력을 발휘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 축재하는 것이다. 생활비가 얼마나 되겠는가. 생활비가 충당되면 이제 축적이 들어간다. 본인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하고, 자식도 챙겨 줘야 된다. 도당행정부장은 그 지역당에서 권한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에 가 보거나 사무실에 가 보면 먹는 식량은 전혀 걱정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서 자식을 챙겨 주는 것, 즉, 대학생활비 대주는 것, 자식 시집장가 갈 때 준비하는 것 등이다.”³⁵

“우리 중급기관 간부들 속에서 지금 30만 달러 먹기 운동이 벌어졌다.

³⁴ 북한이탈주민 4.

³⁵ 북한이탈주민 5.

55살까지 30만 달러를 채우는 게 목표이다.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야 한다. 중앙당 간부부 사람들 같은 거는 30만 달러 1년이라도 모은다. 중앙당 부류 말고 보안성 국장 계열, 보안성 정치간부부 계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간부부 계열 등 중간급에서 돈을 조용하게 소리 안 나게 먹자고 하면 6~7년에 30만 달러 먹는다. 북한에 항간에 돌아가는 돈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니다. 돈은 밀집돼 있다. 함북도나 강원도 등에는 없다. 평양이나 신의주에 많다. 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로 노출 안 시킨다.”³⁶

자. 간부 부패의 차이와 뇌물 공유

“간부들 속에도 빈부차이가 많이 생긴다. 같은 비서라도 다 같은 개념이 아니다. 직급이 같은 부장이지만 어느 부서를 맡은 부장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부장이 10명인데 10명 생활기준이 다 틀리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부장이 생활하는 건 거의 비슷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기준 즉, 공급대상이 같았다. 부장급에 맞는 공급을 같이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서 10명의 생활수준이 다 각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1순위에 있는 사람하고 제일 하부층에 있는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 간부가 다양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를 지키려고 하면 본인만 아니라 위아래와 아귀가 맞아야 한다. 위에다 진상을 많이 해야지, 또 아래도 챙겨 줘야지, 이래 되면 부패 폭이 늘어난다. 자신 것 외에 하나 큰 덩어리를 위에다 섬겨야 된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행정부장이나 조직비서를 챙기는 것이다.”³⁷

“때로는 법관들도 불쌍하다. 이는 법관들과 얘기를 해보면 보위부라든가

³⁶ 북한이탈주민 6.

³⁷ 북한이탈주민 5.

보안서라든가 그 다음에 당기관 이런 데서도 딱 먹을 알이 없는 경우에는 불쌍하다. 권한이 있는 부서가 돼야 고이는 사람이 있는데 기타 부서들은 보위부에 총체적으로 똑같이 공급해주는 것 외에는 더 다른 게 없다. 한 달에 쌀 배급은 무조건 다 주는데 입쌀을 준다. 그리고 기름을 2킬로 준다.”³⁸

차. 이권다툼

“원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당간부들이 행정에 많이 개입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가 되었다. 만일 지역사업을 한다면 도·시·군당 책임비서들이 주관을 한다. 그건 불가피하다. 행정이 그걸 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이 개입한다. 이로 인해 당과 행정의 마찰문제가 생겼다. 대립, 갈등, 당간부 대 행정간부의 격차,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심한 알력 중의 하나가 행정간부의 직권을 당간부가 다루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결국은 생활수준까지 벌어진다. 당간부가 2개 먹으면, 행정간부는 하나 먹는다. 모든 단위에 들어가 봐도 같다. 군도 같다. 일반 농촌들에도 같다. 당간부가 권력을 끊임없이 남용을 하는 과정에 당간부의 권력이 그만큼 비대해지고, 그리고 또 북한체제의 속성상 모든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밑의 조건이 열악해진다. 일은 힘들어지고, 일은 안 되고, 행정간부가 그만큼 행정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행정간부가 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당간부가 행정대행을 하는 이유는 ‘당정책을 관철하겠다’는 목적과 일을 통해 이권을 챙기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도당 자체가 도 안의 경제사업을 거의 100% 맡아서 하게 된다.”³⁹

³⁸ 북한이탈주민 3.

³⁹ 북한이탈주민 5.

카. 권력계층의 부유층화

“권력층 생활수준이 가장 안정적이다. 등급을 매기면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게 간부들이다. 물론 가장 부자들은 무역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 특수 단위 분야 종사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퍼센트(%)는 너무 작은 것이니까 결국은 도 안에서 가장 생활이 부유하면서 안정적인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면 절대적으로 권력계층이다. 그런데 권력계층이 제가 직접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를 해서 자기 취득을 하니깐, 결국은 국가재산을 침범한 거다.”⁴⁰

타. 부패의 일상화

“솔직히 말해 부패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정상적인 흐름으로 돼 있다. 이제는 아래에서부터 우에까지 부패가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게 부패인지 아닌지 이제는 북한사람들 자체도 그 분간을 못한다. 응당한 걸로 본다. 솔직히 나도 북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누가 지금 대성구역보안서에 잡혀갔는데, 좀 꺼내주십시오’ 그럼…이게 북한에, ‘맨입에’ 이제 그건 거리낌없는 소리이다. ‘맨입에 그런 게 아니겠지,’ ‘아, 그야 응당…’ 그럼, 척 갖다 주면은 보고서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알았어’ 그럼 또 시행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부패라고 이제 말할 정도가 아니다.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일상적인 흐름이 그렇게 쪽 흘러왔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 개 벌어가지고서 일곱 개 고이고 세 개 먹어야 된다는 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도리로 생각한다. 이거 내가 생 착취당하누나, 이런 거 이제 인식을 못한다. 실례로 구역급에서 구역당 책임비서가 돈 바쁘면 시장에 가서 1인당 열 달러씩 모으라 하면

⁴⁰ 북한이탈주민 5.

잠깐 20만 달러 된다. 한 개 시장에 평균 한 2만 명씩 들어와 있는 걸로 본다. 평양시 시장에 등록하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숫자다. 그 사람들 열 달러씩 내라하면 다 낸다. 시장관리소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패에 대해 24시간 앉아서 당, 군사, 행정 뭐 하여튼 보안기관, 보위기관 각 부문별로 얘기하면 끝이 없다.”⁴¹

“지역당에서처럼 중앙당도 똑같은 시스템이다. 중앙당에서 내려와서 행하는 행실을 보면, 정도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거의 동일하다. 부패구조는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었다.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김정일이 그걸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걸 아예 꺾어버리기보다는 할 수 없이 수용을 해버린 거다. 이걸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한 거다. 부정부패 형식이 일종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제 한 개 시스템이 돼 버린 거다.”⁴²

2. 군 부패

가. 군부 부패의 일반화

“군부 부패가 사회보다 더 심하다. 2008년도 김정일이 ‘평양시에 저 집 사고 팔고가 많이 이뤄지는데 만 달러짜리 집을 과연 어떤 녀석들이 살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봐라’ 했더니 60%가 군대였다. 시장에 군품 군복류들이 많이 나온다. 군대에 쌀하고 부식물은 국가가 배정할 수 있게끔 보장해 준다. 그게 다 장마당으로 흘러나온다. 군대에서는 중대장은 중간중간 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다. 군대는 특히 정치부 사람들이 입당시켜준다는 항목 아래서 먹는다. 집집마다 뭐 전시들 집에 찾아다니면

⁴¹ 북한이탈주민 6.

⁴² 북한이탈주민 5.

서까지 먹는다. 북한에서는 군사복무 중에 입당 못하고 제대되는 것 이상의 제일 수치가 없다고 본다. 제대될 때 대학이라도 하다못해 전문학교라도 추천해 주는 걸 정치부에서 한다. 그 다음 제대될 때 대홍단농장이나 이런데 집단배치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인다. 군대 나갈 때, 군사동원부 앞에 그저 새까맣다. 거의 공개적으로 군대도 내가 필요한 부문에, 내가 안면이 있는 부문에 그 자식들을 내보낸다. 공식적으로 500달러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자식들은 금강산건설부대, 희천발전소건설부대, 전연 1군단, 2군단, 5군단 등에 배치된다.

북한에서 지금 아이들이 제일 가겠다고 하는 곳이 평양시 주변에 떨어질 수 있는 91훈련소, 평양시방어사령부, 공군 등이다. 공군은 허약 걸려서 귀향하는 군인들이 없다. 북한 공군은 4개 사단밖에 없다. 그 4개 사단이 비행장을 다 가지고 있고, 최근에 북한비행기가 연료가 없어서 제대로 뜨질 못하니까 그 비행장에 다 콩을 심었다. 그 콩으로 하루 한 끼씩은 비지를 해 먹인다. 공군부대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군부대에서는 허약 걸려 오는 게 없다. 해군은 좀 힘들다. 다만 해군은 바다출입을 통제하면서 물고기라도 빼앗아서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좀 낫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곳이 평양시 방어 군단인 3군단이다. 태평에 그 본부가 있다. 함북도 사람들은 9군단에, 량강도는 10군단에, 강원도는 6군단에, 황해도는 4군단에, 평안도는 8군단 보내려고 한다. 자기네 집에서 가까운 데 보내려 한다. 이때 돈을 고인다. 당군사동원부는 초모 기간 아니고는 돈 받아먹을 일이 없다. 그래서 초모 기간에는 군사동원부가 제일 부인다. 최근에는 군사동원부가 돈을 많이 축적했다. 군사동원부에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군사동원부 사람 식사도 한 끼 못 시키고, 돈도 한 푼 못 찢어주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금강산발전소 아니면 저 희천발전소, 아니면 8총국, 인민무력부 공병국에 간다. 2010년도부터는 도로국으로 편성됐다. 8총국이 도로 1군단, 무력부 공병국이 도로 2군단, 속도전청년돌

I
II
III
IV
V

격대가 도로 3군단으로 편성됐다. 일단 가면은 10년 동안을 삼하고 곡괭이 쥐고 일만 하고 제대한다.”⁴³

나. 군 상층부 부패

“인민무력부 본부 자체는 군부 산하 이름으로 외화별이 기지장이라고 해서 어깨에 대좌, 상좌, 별 달고 있는 게 가득하다. 이거 다 헛별이다. 총정 치국 간부부에 등록되지 않은 별들이다. 지금 돈만 고이면 하루아침에도 대좌 별 준다. 이렇게 임명된 기지장들이 지금 가득하다. 군단들, 사단들까지 다 같다. 신분증 자체는 사단에서까지 발급한다. 신분증 용지 갖다가 그제 공인현판 찍어가지고 주면 다이다. 군복은 그제 있는 거 그대로 후방부에서 타서 입히면 되는 거다. 뭐 지금 그런 현상이 말 못할 정도로 많다. 전국 각지에 새까맣다. 그들은 1년에 돈 얼마씩, 월에 돈 얼마씩 바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회나 내각은 그런 기지장 임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 기지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선군이랍시고 북한은 그 군대의 명의로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사단 주둔지역에 기지를 내온다. 그래 가지고 임명해 준다. 사단 위수구역 내 아낙에서 약초도 캐고 송이도 따서 팔아먹는다. 거간질도 해서 정치위원이나 사단장한테 돈을 갖다 바친다. 어떤 데는 연대까지도 다 그렇다. 북한의 일체 지도를 놓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군대 지역 아닌 게 없다. 군대들은 자기네 위수구역이라고 해서 떡 철조망 쳐놓고 그 안에서 진행하는 건 누구도 어찌지 못한다. 무력부에 보고하는 거는 사단에 군사장비강화를 위해서, 또 사단 병사들의 생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보고한다. 그럼 그것이 다이다. 국가에서 지금 군부식량을 제대로 보장 못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라. 너네 할 수 있는 쫓 하라’ 그런다. 지금 국경연선에 밀수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다 군대들

⁴³ 북한이탈주민 6.

통해서 나오는 거다. 군대가 지금 그렇게까지 됐다. 그런데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비법적인 거 다 해서 진짜 병사들을 먹이는 게 아니고, 지휘관들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관들이 가장 좋은 때이다.”⁴⁴

“군부는 기지장들이 사업하기 편하게 군 통행증을 무더기로 발급해 준다. 통행증 없어 가지고 철도원한테 단속되면 지저분하다. 그래서 장사하기 위해 그 허울 좋은 군수동원총국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군기관이니까 편해서였다. 군 통행증을 사용하는 대신 그거 10톤씩 내었다.”⁴⁵

“총정치국·총참모부 등 군부 우두머리들은 북한 돈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며 십만~수백만 달러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최고급 식당을 찾는 것도 모두 군부 우두머리들이다. 그만큼 북한 군부가 부패와 비리로 가득하다는 의미이다. 평양시 주민들 사이에선 “김정일 장군은 선군정치로 돈밖에 모르는 군대 장사꾼들을 키웠다,” “백성의 아들들을 인민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토비로 키웠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총정치국은 노동당이 관할하던 평양시 능라도 5·1경기장 관리권까지 넘겨받아 아리랑 공연 관람료 등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석탄·통나무 무역과 같은 알짜는 군부 소속 무역회사에만 허용돼 일반 무역기관들이 실적을 내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⁴⁶

다. 후방총국, 폭풍군단, 경찰총국 부패

“전창복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이 평양 아파트 건축공사 부진에 대한 과오를 추궁받고 2011년 11월경 해임됐다. 그 이유는 후방총국이 맡았던

⁴⁴ 북한이탈주민 6.

⁴⁵ 북한이탈주민 4.

⁴⁶ 최오남, “보위사령부, 대대적 검열실시해 김정은을 위한 군대숙청에 나서,” 『열린북한방송』, 2011년 1월 24일.

아파트의 건설속도가 지지부진해 후방총국장이 책임을 떠안은 것이다. 후방총국이 책임진 아파트 건설 부진 이유는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식량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빼돌려 공사가 지연됐고, 건설과정에서 군인들이 탈영을 비롯한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⁴⁷

“국경지역에서 대대적인 검열 선봉을 몰고 온 폭풍군단도 결국 뇌물수수라는 추한 말로를 보였다. 검거실적 경쟁까지 펼치며 무자비한 단속을 벌였던 폭풍군단 대원들은 검열 마감 시한을 앞두고 단속대상인 밀수꾼들에게 오히려 손을 벌렸다. 폭풍군단의 태도가 뇌물 단속에서 수수로 돌변하자 주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검열 마감 단계에 들어서면서 폭풍군단 검열성원들이 뇌물을 받으려고 압록강 주변 밀수꾼들의 집을 밤에 몰래 찾아다녔다. 철수를 앞둔 군관들은 조사과정에 알게 된 밀수꾼들을 찾아가 수박을 비롯한 과일, 당과류(사탕·과자) 등을 요구하거나 아이들의 옷과 신발도 주문하였다. 하전사(병사)들도 간부들의 감시를 피해 시계와 속옷 등을 부탁하였다. 추석명절을 앞둔 시점에 검열이 끝나 부대로 복귀하는 군관들이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물품들을 밀수꾼들에게 부탁하였다. 일부에서는 여죄를 트집 잡아 상당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위사령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구 차원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검열이나 중앙당, 도당 차원의 노동당 내부조직 검열까지 연이어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도 초기에는 지침에 따라 단속을 벌이지만 철수 직전에는 ‘잇속챙기기’에 바쁜 행태를 보여 왔다.”⁴⁸

“2009년부터 정찰총국은 외화벌이 및 대남동향 파악을 위해 최소 100여 명 이상의 주재원을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 중국에 진출하고 있던 단위는 크게 무역성·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인민무력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벌이 회사들이었다. 2009년부터 정찰총국 일꾼들이 중

⁴⁷ 이석영, “평양아파트 건설부진 후방총국장 해임,” 『DailyNK』, 2011년 11월 18일.

⁴⁸ 이석영, “검열태풍 몰아친 폭풍군단도 결국 뇌물에…,” 『DailyNK』, 2011년 9월 2일.

국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무척 어지러워졌다. 북한에서 정찰총국의 권력이 높아지다 보니 그쪽 일꾼들이 다른 단위에서 계약 중인 사업에 뛰어들어 대방을 가로채거나, 다른 단위 간부들의 뒷조사를 해서 평양에 보고서를 올려 상대방을 약화시킨 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사업권을 따낸다.”⁴⁹

라. 군대 내 입당 및 휴가 부패

“부대의 부대장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고 부대를 위한다는 건 크게 없다. 부대를 위한다고 할 때는 전사들을 다 혹사시킨다. 대대장이 어느 중대장보고 나무 10차를 마련하라고 해서 매 중대마다 한 차씩 주고 나머지는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 군대에는 한 번 입대하면 집에 가기 힘들다. 이를 이용해 부대장은 전사들을 몇 개월 또는 1년간을 병사집에 가서 놀도록 하고 엄청 많은 돈을 받는다. 집에 가서 군사복무하겠다는 집은 대개 돈도 좀 있고 간부일 경우가 많다. 장기휴가는 부모들한테서 천 달러, 이천 달러씩 받는다. 인민군대 가서 입당 못하면, 당원 못되면 사람 취급 안한다. 정치위원은 이를 이용해 입당시켜주고 몽칫돈 받아먹는다.”⁵⁰

마. 군대의 도둑질

“지금 북한은 일반 사민집들은 군대라면 다 무서워한다. 군인들이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군관들이 시간을 준다. 도둑질 잘 하는 아이들, 몸이 날쌌던 아이들 2~3명에게 시간을 주면서 한 달 동안에 뭐 얼마 벌어서 오라고 하면 잘사는 집을 봐줬다가 중기를 도둑질한다. 텔레비, DVD 등이다. 도둑질해서 장사꾼들한테 팔아 군관들한테 고인다. 지금 군대가 제일 부정부패가

⁴⁹ 박준형, “北 외화일군 자중지란…동료까지 팔아먹을 판,” 『DailyNK』, 2011년 8월 31일.

⁵⁰ 북한이탈주민 1.

심하다. 군대갈 때 좋은 곳에 배치시키기 위해 1년 전부터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했다. 평양이 제일 인기가 많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었다.”⁵¹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에서 기름이나 한약재용으로 잣을 찾기 시작하면서 잣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부터 잣나무 소유권을 두고 주민과 군부대의 마찰이 시작됐다. 지금 이곳은 군부대 잣나무, 저곳은 보안소 잣나무 식으로 영역을 나누게 됐다. 결국 힘없는 주민들만 국가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깊은 야산으로 찾아 들어가고 있다. 잣이 외화가 된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잣나무가 있는 산은 힘센 기관들의 차지가 됐고, 김정숙군 야산에는 교도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으며, 후창군(현 김형직군)에 있는 잣나무 산은 경비대 군인들이 지키고 서서 사람들을 통제했다.”⁵²

“군관들 생활은 다 하전사들 도둑질해 오는 걸로 먹고 산다. 그걸로 집에 TV도 놓고, 냉장고도 산다. 개네는 이제 나가서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개네 군대 애들은 조만간 잡히지 않는다. 개네가 너무 날래니까. 군관가족들은 그렇게 돈도 받고 그렇게 산다.”⁵³

바. 군관 부패

“강원도로 배치받으면 다 굶어죽는다고 한다. 해상 육전대나 잠수함 같은 곳은 부모들이 제일 싫어한다. 지금은 아들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자꾸 병나서 죽고 하니까 힘 있는 부모들은 돈을 들여 갖고 자식들한테 계속 찾아간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에게 돈 먹여서 후방부문에 좀 돌려놓는다. 앉아서 좀 할 수 있는 거, 경리 이런 걸 시키려고 한다. 군대 가는 건 아이들이 한 10년 동안 지옥살이 하는 거나 같다.”⁵⁴

⁵¹ 북한이탈주민 2.

⁵² 이석영, “보안원들 골목에서 잣 단속…군부대 잇속 챙기기 나서,” 『DailyNK』, 2011년 10월 20일.

⁵³ 북한이탈주민 2.

사. 여군 성상납

“군부에서 입당 할 수 있는 몫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정치지도원이다. 그 다음에 조직부 지도원들이다. 조직부 지도원들 눈에 들지 않으면 입당이 어렵기 때문에 여군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꿈쩍 못한다. 여군들 자체가 성상납을 별로 죄의식을 안 느낀다. 빨리 입당도 하고 좋으니까.”⁵⁵

아. 군부의 외화벌이 독식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는 최고의 기득권을 누렸다. 자체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해외 지사까지 거느리는가 하면 불법 무기 수출도 관장했다. 송이버섯, 조개부터 모래까지 남한 기업에 팔아 거액을 챙겼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따른 수입도 상당 부분 군부 몫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외화가 군부의 관리 아래 놓이다 보니 이를 둘러싼 이권다툼은 물론 부정부패가 만연해졌다는 점이다. 위조 달러나 마약, 가짜 담배 등 정권 차원에서 저질러지는 범죄 행위도 군부 실세들이 이를 통해 ‘검은자금’을 확보하려 들면서 더 확산됐다 는 주장도 있다. 군부의 모든 외화벌이사업은 배후에 인민군 총참모부가 있다. 인민무력부를 통해 국방예산을 배정받으면 총참모부는 무기 개발과 해외 무기 판매사업 등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입은 조선노동당과 내각에 일부만 보낸 채 자체적으로 운용해 왔다. 따라서 총참모부 핵심 인사들이 엄청난 돈을 빼돌려 왔다.”⁵⁶

“중국 단둥과 인접한 압록강 하류의 중국 동강과 북한 철산 앞바다에 일종의 어로구역이 형성되는데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려면 작은 배는 하

⁵⁴ 북한이탈주민 2.

⁵⁵ 북한이탈주민 4.

⁵⁶ 신창호, “北군부, 외화벌이 70%씩쓸어…버섯·모래까지 南에 팔아,” 『국민일보』, 2012년 7월 20일.

루에 1000위안(약 18만 5000원), 100톤 이상 큰 배는 1000달러(약 118만 원)를 내야 한다. 중국 선주는 ‘고기잡이 허가권을 내주는 기구는 북한의 철산 수산사무소가 아니라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라며 ‘현재 북한 측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좋아하지 않아 인민폐만 받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현 시세로는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건네면 2주간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내지 않는 어선은 압류된다’고 덧붙였다.”⁵⁷

자. 군기밀 판매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온 한 선교단체가 공개한 2005년 북한 인민군 전자전 참고자료에 의하면 상단에 ‘비밀’이라는 글씨가 적힌 이 자료는 탱크와 전투기에 레이더 포착을 피하기 위한 ‘텔스 페인트’를 발라 95%까지 전파를 흡수할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자료를 입수한 단체는 북한 인민군 관계자가 먼저 접근해 이 자료를 수천만 원에 사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⁵⁸

3. 정부(보위·보안) 부패

가. 인민보안부 각 부서의 부패

“인민보안부 자체는 부정축재로 운영되는 단위이다. 처음 배치됐을 때 부패방법을 배워준다. 담당보안원들한테 70달러씩 모아 바치라고 지시한다. 담당보안원들이 평균적으로 30개 인민반을 담당한다. 30개 인민반을 담당하는데 한 개 인민반에서 돈 많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씩만 포섭해서 내가 뇌물 받아도 70달러는 된다. 오늘은 7개 인민반만 돌면서 한 개 인민반에 가서 한 사람한테씩 열 달러씩만 받는다. 그럼 70달러 잠깐

⁵⁷ 신민재, “중어선들 뒷돈주고 北해역서 불법어로,” 『연합뉴스』, 2012년 6월 2일.

⁵⁸ 김대경, “北 전자전 교본입수…군사기밀도 팔아,” 『MBC』, 2010년 8월 23일.

맞춘다. 또 70달러만 받는 게 아니라 200달러를 모았다. 후에라도 제기되면 그때 두었던 돈에서 바친다. 보안성도 보면 총무국 같은 건 진짜 뇌물 못 받는다. 없다. 총무국장이 왕별 두알 달고도 100원짜리 통성담배 피운다. 양말도 발꼬락 나온 양말을 신고 다닌다. 집에 가보면 정말 순통강냉이밥을 먹는다. 그러나 보안성의 감찰국장은 대단하다. 보안성 자체가 불법투성이니까 감찰 나가면 돈 받았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고인다. 감찰국장은 일반회사 사장 같은 거는 대상도 안한다. 일반회사 사장들은 감찰국장까지 대상할 처지가 안 되는 거다. 대외본부총국장·락원지도국장·능라지도국장·경흥지도국장·모란지도국장 등 급수 있는 사람들이 감찰국장하고 대상한다. 나부터도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일하다 하나 잡혔다. 이거 살려야 된다고 할 때 시시하게 구역보안서장이나 담당감찰원이나 이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머리 숙이지 않는다. 감찰국장을 찾아간다. 그만큼 들어가는 량도 많다. 3천 달러 줘도 되는 문제지만, 감찰국장한테는 감찰국장의 뭇이 있기 때문에 한 만 달러 넣어준다.

보안성도 전투부서라는 게 있다. 감찰국·수사국 등이다. 직접 사람을 가서 잡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루빠로 편성돼서 나갈 수 있는 부서이다. 그러나 총무국·통신국·후방관리국은 그런대로 후방물자라도 다루니까 괜찮게 먹고 산다. 형사감정국은 크게 먹을알이 없다. 경비훈련국 같은 데는 사람들이 생활이 좀 막연하다. 또 교화국이나 예심국은 다 전투부서이다. 예심국은 회사사장들이 잡혀왔을 때 피고의 부인들이 와서 예심원을 만나서 잘못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한다. 여자는 자기 남편을 위해 성을 상납한다. 예심국은 좀 특이하다. 그 다음에 교화국은 면회를 때 몰래 면회시켜주고 뇌물 먹는다.”⁵⁹

⁵⁹ 북한이탈주민 6.

나. 국가보위부의 부패

(1) 허위 도난 신고

“2010년도에는 국가보위부산하 회사 사장으로 있던 최명철인가 하는 사람이 중국기관이 투자한 40만 달러를 기차 타고 오다가 잃어먹었다고 신고했다. 잃어먹은 걸 본 사람도 없다. 이 사람은 체포돼서 예심을 받았다. 이 사람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잃어먹지 않고 감춰냈던 것을 안다. 사기협잡도 정도가 있다. 이제는 북한사람들 자체가 ‘뒷잔등도 남이다’ 이런 개념이 세다. 남을 안 믿기 때문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서 꺼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는 돈을 감춰놓는 것도 얼마나 묘한지 모른다. 찾기 힘들게 감춰놓는 사람들이 많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이 사람은 12년 형을 받았는데 2만 달러 주고 7달 만에 출소했다. 이 사람은 예심단계를 거쳐서 검찰단계를 걸쳐서 재판을 받고 교화소 갔기 때문에 그 교화소하고만 사업하면 끝난다. 이후 1년 만에 완전 출소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평양에서 추방되어야 하는데 3만 달러를 먹여서 평양에서 추방 안 되고 그대로 살았다. 그 다음에 다시 2만 달러 먹여가지고 복당했다. 40만 달러 중 10만 달러를 쓰고 30만 달러를 번 것이다.”⁶⁰

(2) 통검소 보위부 책임검사 부패

“북한은 대외사업하기가 매우 힘들다. 중국 무역상을 국경연선에서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통검소 책임검사한테 200달러 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세관통과할 때 세관 통검소 책임검사원이나 아니면 통검소 보위원, 아니면 도보위부 반탐조 담당부원, 담당반탐지도원 등 셋 중에 한 사람한테 200달러만 주면서 ‘나

⁶⁰ 북한이탈주민 6.

오늘 면담해야 되는데, 면담 좀 하자'고 하면 끝난다. 금요일날까지만 세관을 여는데 하루에 평균 현금으로 천 달러하고 지함박스가 열 개는 들어온다. 북한의 무역이 70%가 신의주세관을 통해서 진행된다. 혜산이나 회령세관 들은 하루 종일 가도 조용하다. 그런데 신의주세관은 끊고 복잡하다. 책임감 사는 국가보위부 소속이다.”⁶¹

다. 교육 부패

(1) 교사배치 부정

“제일 불편스러운 것은 대학을 입학할 때 역시 뇌물이 없으면 공부를 아무리 잘 해도 대학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여섯을 길렀는데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좀 했는지 소학교 졸업하고 시험쳤는데 45명 속에 붙었다. 붙고 보니까 전부 다 간부자식들이었다. 외국어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 1등을 해서 외국어학원 교사로 배치를 받았고, 우리 엄마랑 너무 좋아 가지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잘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고 너무 좋아 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하였다. 그런데 그게 한 달도 못가서 다시 재배치를 하는데, 도당과 시당이 무슨 바람이 났는지 저를 어느 농촌중학교 교사로 돌려냈다. 신소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⁶²

(2) 교원 부패

“원래 교육 부패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보니까 계속 선생들한테 뭘 가져다 줘야 된다. 지금은 대학교수들 생활이 제일 불쌍하다. 오직

⁶¹ 북한이탈주민 6.

⁶² 북한이탈주민 3.

학생들이 시험 칠 때, 한 사람이 담배 한 꺾이든 두 꺾이든 모아서 선생을 준다. 시험부정과 관련해서는 소대장이 한 사람이 5천 원씩 내서 그 시험지를 그 자리에 돌아앉아서 다시 보고 쓰게 한다. 선생하고 짜고 한다. 돈을 안낸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최우등을 맞기 힘들다.”⁶³

“교사들은 교사 사정을 학부모들이 다 아니까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사에게 뭔가를 준 것으로 산다. 그건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저 교사가 우리 아이를 맡고 있으니까 준다. 학부모들은 월사금을 당연하게 내고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⁶⁴

(3) 학부모에 부담 전가

“학교는 돈 안 내고 들어가지만. 중학교든 소학교든 실지 학생들은 매일 같이 돈을 낸다. 학교 꾸리는 거, 교실 꾸리는 거 이걸 몽땅 전부 다 학생들 힘으로 꾸린다. 아들이 1고등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자기 의자, 책상을 본인이 만들어 냈다. 교장이 이번에는 널마루를 뜯고 타일을 깔겠다 하면 이걸 다 학부모들 몫이다. 저 벽을 뜯고 저기다 뭘 또 다른 걸 칠 하겠다 하면 그걸 다 학부모들 몫이다. 학교마당을 골고루 편다면 학부모들이 불도저를 갖다 펴고, 운동기구들도 사다 놓는다. 교육부나 중앙에서 교육의 현대화다 하면 TV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학부모들이 사서 낸다. 전기가 약해 가지고 30볼트, 50볼트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 220볼트를 전기 쓰게 된 TV나 컴퓨터는 쓰지 못하니까 변압기를 교실마다 하나씩 달아야 하는데 그것도 학부모 부담이다.”⁶⁵

⁶³ 북한이탈주민 2.

⁶⁴ 북한이탈주민 3.

⁶⁵ 북한이탈주민 3.

(4) 소년단 부패

“학생들이 소학교에서 입학한 후 2월 16일, 4월 15일 맞이하면서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 가서 소년단 입단하는 게 있다. 여기에 가려면 10달러를 고여야 된다. 학교 소년단 지도원이 추천권을 갖는데 추천비로 열 달러를 줘야한다. 입단은 누구나 하지만 입단순서가 있고, 어디에서 입단하느냐가 중요하다. 남들은 다 벵타이를 댔는데 벵타이를 못 매고 다닌다는 거는 한국말로 해서 왕따 당하는 식이다. 그리고 벵타이를 학교에서 댔느냐, 아니면 중앙에 가서 댔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도 중앙에 가서 매는 것을 좋아한다. 으스스한다. 말하자면 왕별 달은 사람이 벵타이를 매줬다고 자랑한다. 담임선생님한테도 다섯 달러 정도 준다. 그 다음에 다섯 달러 정도어치 물품사서 구역청년동맹에 바쳐야 된다. 총체적으로 한 스무 달러는 써야 된다.”⁶⁶

(5) 최우등상 부정

“북한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7·15최우등상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인민학교부터 소학교부터 고등중학교까지 전 기간 최우등을 했을 때 받는 상이다. 최우등상을 받은 사람은 대학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썬트권이 있다. 사회나 군대에 나왔다가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15최우등상은 자기 경력에 쓰게 돼 있다. 하나의 국가적인 상이기 때문에 7·15최우등상 한 개가 못해도 600부터 800달러로 의무화됐다. 최우등상은 한 학교에서 한 명 이상 못 준다. 한 개 구역에서는 7명 내지 8명 이상 못 준다. 그래서 7·15최우등상을 받으려면 학교 사로청 책임지도원이나 교장이나 구역청년동맹 학생비서나, 평양시 청년동맹이나, 중앙청년동맹에게 고여야 한다. 근데 7·15최우등상 선정 시기가 되면 구역청년동맹에서 아들 졸업할

⁶⁶ 북한이탈주민 6.

때 되지 않았느냐고 전화가 온다. 대체로 돈 있는 집에 연락이 온다. 물론 시험은 쳐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실력이 없어 시험지에는 아무거나 써놓아도 점수를 주어 최우등상을 받게 한다.”⁶⁷

(6) 대학생 건설동원 부패

“대학생들이 주택 건설에 동원되면서 많은 부패가 일어났다. 10만 호 건설 현장 등 평양 시내와 근처 도로변 건설현장 등에 많은 대학생들이 투입됐다. 평양 소재 대학엔 박사나 수재로 인정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건설현장에 동원됐다. 그러나 월 100달러를 해당 대학에 바치면 건설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간부집이나 큰 장사를 하고 있는 세대들의 자녀들은 다 빠졌다. 대학생들의 동원 기간은 각 대학에 지정된 건설현장의 완공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원료·자재부족 등으로 건설 작업의 진척이 더디면서 대학생들의 동원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건설현장에 동원되면 대학에서 숙식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원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생들이 대학에 남아 하는 돈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⁶⁸

라. 비사그루빠 부패

“비사그루빠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늘었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늘었다. 문제는 비사그루빠 역시 그 기회를 활용하여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역작용이다. 그 사람들이 공정성의 자기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됐으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 안됐을텐데 횡수가 많아지

⁶⁷ 북한이탈주민 6.

⁶⁸ 최정호, “北 대학생, 월 100달러 내면 건설동원 면제,” 『DailyNK』, 2011년 8월 8일.

고 그 다음에 폭이 넓어지면서 그 자체에도 여러 가지가 불법이 동반되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몫을 챙겨야 되기 때문이다. 비사검열그루빠가 나오면 전반이 타격을 다 받는다. 일정하게 돌아가던 민생지하경제가 올 스톱이 된다. 그걸 돌아 못가니까 일반주민들이 시장이 활성화가 못 되니까 타격을 받는다. 또 비사가 들어간 단위 지역이라든가 간부들은 그 나름의 피해를 받는다. 뇌물을 받을 수가 없고, 상인들도 비리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일종의 정치적 피해도 당한다. 따져 보면 비사는 오히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더 많다.”⁶⁹

“2010년 11월 북한 내 비사회주의의 현상을 척결하기 위한 조직된 ‘11·18 상무(비사회주의 그루빠-검열대)’ 성원들의 부패행위로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8상무는 김정은이 비사회주의의 현상을 척결하라고 지시한 11월 18일을 명칭으로 정하고 지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해왔다. 11·18상무는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해 인민보안부, 검찰, 도·시 재판소 일꾼들로 구성됐다. 비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비사회주의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불순 녹화물과 마약 밀매, 손전화(핸드폰), 외화 사용 등이 집중 검열 대상이다. 적발된 북한주민들은 엄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뇌물 장사’도 병행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상무에 소속된 검열대원들은 보통 10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까지 뇌물을 받고 있다. 검열대원으로 1년간 일하면 보통 3만~4만 달러를 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 11·18상무의 부패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⁷⁰

“보위사령부 검열이다, 5·18상무다, 이런 조직들이 많다. 그러나 솔직히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결하는 건 없다. 그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 주고, 동원된 사람들이 보안서장이라든가 보안서 정치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⁶⁹ 북한이탈주민 5.

⁷⁰ 김용훈, “11·18상무 부패 온상됐다…年 3만 달러 벌이,” 『DailyNK』, 2012년 3월 15일.

I
II
III
IV
V

을 잘살게 해주는 거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 백성들은 더 고달프고 더 힘들다. 상납은 한다. 그러나 10명한테 받아서 3명분만 상납해 주고, 나머지 7은 제가 먹어도 된다. 더 발전하려면 자기가 3개 먹고, 7개를 갖다 주면 된다. 당사자가 그때그때 생각하면 된다.”⁷¹

“비사가 인민반회의에 와서 술장사, 사탕장사 등 장사하지 말라는 방침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침이다. 비사회주의그루빠는 주민들이 장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비사는 장사를 미끼로 뇌물을 받고 그걸 해서 먹고 산다. 가만히 놓고 보면 명절을 딱 계기로 해서 내려온다.”⁷²

마. 기관 부패의 광역화

(1) 기동타격대

“북한 당국이 폭동에 대비해 2010년 8월경 설립한 ‘기동타격대’로 인해 주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 각 도 인민보안국 산하에 대규모 타격대를 조직했다. 이들은 제대군인 출신으로 폭동이 발생하면 주모자를 색출·제거하거나 종심(縱深)을 와해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도 보안국의 관할 아래 시·군·구역으로 파견돼 검열과 단속 등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보안원 정복을 입은 타격대가 밤낮으로 역전이나 골목길 등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곳을 찾아 불시에 증명서 확인, 몸수색, 짐 검열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밤 9시 이후에 유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검열한다.

북한주민들은 기존 순찰대 등과 뇌물로 오랜 기간 형성된 관계를 통해 불법, 비법장사를 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데 ‘기동타격대’까지 검열·단속

⁷¹ 북한이탈주민 1.

⁷² 북한이탈주민 2.

에 나서면서 조직 간 분쟁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위 기관 간의 알력 다툼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양쪽 모두에 뇌물을 바치고 있다. 이 밖에도 철도검열대와 철도보위대까지 돈벌이를 위해 일반 주민들을 검열·단속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불순 녹화물(DVD 등) 단속을 목적으로 조직된 109상무 등 각종 비사회주의 그루빠나 법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⁷³

(2) 낱알타격대

“시·군 단위로 보안원과 적위대원 20~30명으로 구성된 ‘낱알타격대’가 주요 이동경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협동농장과 개인 소토지에서 수확된 쌀과 강냉이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낱알타격대’는 보안서 보안원이 일반 기업소·공장이나 농장에서 지원한 적위대원들을 데리고 수확한 낱알의 유동을 단속하기 위해 조직된다. 보통 가을걷이가 시작되는 8월 말부터 수확된 식량이 분배되는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이들의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해당 농촌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해 준 반출증이 있어야 한다. 반출증이 없어 단속될 경우에는 단련대에 보내지기도 하지만 대다수 뇌물로 처벌을 무마한다. 그리고 ‘낱알타격대’의 검문과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사꾼들은 타격대에 일정액의 뇌물을 바치고 당해연도에 생산된 쌀과 옥수수 등을 사들여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⁷⁴

(3) 산림보호원

“산에서 나무히는 것은 북한에서 불법이고 단속하는 산림보호원도 있다.

⁷³ 최송민, “폭동진압 타격대 수시검열로 北 주민 이증고,” 『DailyNK』, 2011년 12월 7일.

⁷⁴ 최정호, “北 ‘낱알타격대’ 검문 강화,” 『DailyNK』, 2011년 11월 15일.

보호원이 나무 도벌꾼을 단속할 때 보호원들에게 술이라든가 돈이라도 갖다 주면 눈감아준다.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자면 어느 사람도 부패를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다.”⁷⁵

(4) 공장

“여자들이 시집가자면 이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불을 준비하자면 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업소 여자들이 원료부터 도둑질해 간다. 그 도둑질해 가서는 자기 시집갈 준비도 한다. 다른 예를 들면 생산제품이 10킬로씩 포장단위로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야매로 판다. 국정가격으로 10킬로에 27원이라면 시장에다는 270원에 판다. 이렇게 10배, 20배, 30배로 팔아먹는다.”⁷⁶

(5) 기업소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빠지고(어려워지고), 정상적으로 배급을 주던 배급제도가 서서히 없어졌다. 공장기업소가 멎으니까 주민들은 공장기업소 기계들을 다 뜯어서 팔았다. 기계들을 뜯어서 중국에다 팔고, 일반 간부들도 노동자들하고 같이 기계를 뜯어서 다 수매를 했다. 우선 배급을 안 주니까 먹는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다. 본래 국가에서는 비사회주의도 하지 말라, 장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서 단속원들은 배를 채우고 있다. 한 사람이 장사하면 단속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된다. 규찰대, 적위대, 보안서 보안원, 보위지도원 등은 외국 상품, 남한상품 등을 단속한다는 핑계로 뇌물을

⁷⁵ 북한이탈주민 1.

⁷⁶ 북한이탈주민 1.

받는다. 법관들은 그렇게 해서 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빼앗기면 자기가 그 가정생활 유지하기 힘들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뇌물을 고인다.

법관들은 장마당에서 장사꾼들 담배를 고여받는 걸로 부를 축적한다. 가족들은 자기가 뺏는 걸 모아서 장사꾼들한테 다시 넘겨줘서 돈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은 돌아가고 있다. 집안에 법관이 하나 있으면 장사할 때 그 법관이 옆에서 같이 가면 누구도 다치지 못한다. 장사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딸 가진 부모들은 사위를 법관 삼는 거, 아들은 법관 못 시켜도 사위를 법관 삼는 거 원한다. 제 어머니도 셋째 딸을 사위를 법관을 삼았다.”⁷⁷

“지금 북한의 공장기업소가 다 멎어 있고 다 폐허로 되어 있다. 우리 같은 평민들 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거기에 다 합심해서 뜯어서 외국에다 팔아먹었다. 공장이 원상태로 있는 것은 평양이나 가능하지 있는 것 같지 않다.”⁷⁸

(6) 철도원

“철도원들은 여객손님들을 공짜로 태워주고 차비를 받는다. 북한열차는 열차가 몇 대 없기 때문에 엄청 복잡하다. 열차 승무원들은 자기 독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승객을 태우고 엄청 비싸게 돈을 받는다. 평양에서 혜산까지 오는 데 겨울 같은 경우는 보름 걸린다. 보름 동안 오면서 승무원들이 거기 탄 사람은 다 먹여준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길주에서 혜산까지 차표도 없이, 증명서도 없이 승무안전원들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전용침대만 타고 다녔다.”⁷⁹

⁷⁷ 북한이탈주민 2.

⁷⁸ 북한이탈주민 2.

⁷⁹ 북한이탈주민 1.

(7) 인민위원회

“대학가는 것은 수재들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 간부집들이 자기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 우선 대학 뿐트 받는 거부터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인민위원회 대학모집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서 돈을 줬다. 2천 원 주고 혜산농림대학에 뿐트 떨어져서 파견장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혜산농림 대학에 갔는데 거기 가서 간부지도원이란 사람에게 또 돈을 내놓았다. 그 집에 찾아가서 목재가공과가 제일 좋다 하기에 나는 그 간부지도원 보고 우리 아들 목재가공과에 넣어 달라고 돈을 줬다.”⁸⁰

(8) 교도대

“대학 5년 동안 1년에 두 번씩 농촌동원 나가는 거 있다. 우리 아들 대학기 간에 6개월 교도했다. 교도대에 나가야 대학을 졸업하는 건데 그 기간 나는 돈을 주고 아들을 다 놀렸다. 아들이 아깝기 때문이다. 거기 나가면 솔직히 말해 잘 먹지 못한다. 영양실조라도 걸릴까봐 그저 돈으로 다 해결했다. 이게 다 부패다. 목재가공과 한 30명이 되는데 제대군인들이 대부분이다. 소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남한으로 말하면 학급장인데 돈이라도 쥐어주고 담배라도 사주면 편하다. 학급인원이 농촌동원에 나가야 되는데 물자를 주고 뺐다. 동원에 나간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농촌동원기간에 세멘트를 얼마를 내고 뺐다고 공개했다. 그거는 교원들이나 학교당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불평을 부릴 수 없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북한은 그렇게 돼 먹었으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하고 살아간다.”⁸¹

⁸⁰ 북한이탈주민 1.

⁸¹ 북한이탈주민 1.

(9) 과수원

“북한에는 개인들이 과수원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다 나라 과수원이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무더기로 과실이 나올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나라이기 때문에 과일 한 킬로의 국정가격은 얼마 안 된다. 과수원에서는 부정으로 과일을 무더기로 10배 정도의 뭉치돈을 받고 시장 장사꾼들한테 넘겨준다. 장사꾼들은 그것을 20배 정도로 판다.”⁸²

(10) 농장

“북한에서 솔직히 식량을 심어 논밭에서 한 정보에서 5톤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도둑질해 간다. 국가에 들어가는 게 얼마 없다. 농장 사람들은 수확물 빼서 팔고, 30% 사람들은 산에다 텃밭을 만들어 식량을 생산한다. 텃밭에서 나오는 식량이 벌에서 난 식량보다 더 멋있고 잘 된다. 그 숫자가 천문학적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300만 안 죽었다. 300만이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고 길주군 같은 시 30~40개가 다 전멸된 거나 같다. 불가능한 소리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⁸³

(11) 의사

“의사들의 부정부패가 제일 많다. 의사들은 우선 진단서를 떼 주면서 뇌물을 먹는다. 농민들이 가짜진단서를 제일 많이 떤다. 농민들은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농장일도 좀 안하고, 농장에서 일을 안하고 분배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떤다. 그리고 남자들, 노동자들은 공장기업소가 안돌아 가지만

⁸² 북한이탈주민 1.

⁸³ 북한이탈주민 1.

출근을 안 하면 단련대에 가게 된다. 단련대는 너무 힘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통강냉이밥을 조금씩 주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끌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라도 입원하기 위해서 손을 스스로 자르는 사람들도 있다,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의사들은 그 돈을 받고 진단서를 떼준다. 그리고 의사들은 유엔 약을 내적으로 판다. 의사들은 집에서 불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번다. 의사생활이 북한생활에서 좀 나은 편이다.”⁸⁴

(12) 주민등록과

“일반 부서의 법관들은 생활이 정말 바쁘다(어렵다). 공민등록과는 만약 누가 한국에 왔으면 죽었다는 걸 만들어 주고 뇌물을 먹는다. 과장 정도가 먹는다. 만일 발각되는 날에는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 수입이 못 된다.”⁸⁵

(13) 출근 사기

“기관기업소마다 나는 8:3합네 하고 출근을 안 하고, 기업소에다가는 한 달에 천 원씩 낸다. 저는 1년에 3천 달러만 냈다.”⁸⁶

(14) 군행정위원회

“자기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뇌물받는 이런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그리고 북한사회에서 가장 먹을 알이 있는 직위가 행정위원회에 있는 주책배정 지도원하고, 대학생모집처이다. 종합대학 배분하는 역할은 대학모집

⁸⁴ 북한이탈주민 2.

⁸⁵ 북한이탈주민 2.

⁸⁶ 북한이탈주민 4.

처지도원이 한다. 과장은 자기 뽀트가 있다. 시나 군 행정위원회 대학생모집과 있는데 행정일군들 중에서 가장 먹을알 있는 자리이다.”⁸⁷

(15) 주택배정과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을 해결해주는 주택배정과 지도원이 또 최고다. 이 사람들이 받는 뇌물액은 수를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주택배정 지도원도 뇌물을 소화할 만큼 먹는다. 아무리 크게 들어와도 절대 아무 사람이나 퍽 안 된다.”⁸⁸

(16) 강선제강소

“집을 지으려면 강재가 있어야 한다. 계획에 의해 강재 60톤을 쓰도록 했지만 실제 담당자가 강선제강소에 가서 60톤을 받아들 능력이 없을 경우 배정은 종이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기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담판을 짓는 것이다. 특히 기사장 부인에게 뇌물을 고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사장 집으로 가서 우선 살림형편을 본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내가 물건을 고이면 되겠다는 답이 나온다.”⁸⁹

(17) 기사장

“기사장이 북한에서는 모든 생산재 조직책임은 지는 참모장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참모장을 기사장으로 했다. 지배인보다도 기사장이다. 판매 과장은 오로지 기사장 말이라면 딱 들어주게 돼 있다. 가면 기사장이 벌써 전화 다 해 놓았다. 기사장만 삶으면 된다. 강선제강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

⁸⁷ 북한이탈주민 4.

⁸⁸ 북한이탈주민 4.

⁸⁹ 북한이탈주민 4.

고 내가 똑같은 수법으로 수백 개 공장기업소 즉, 남흥화학기업소,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순천비날론공장, 신흥영예군인공장 등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그 방법으로 해서 해결 못한 게 없다.”⁹⁰

(18) 철도원

“북한 철도 당국의 부패가 극심해 열차표 구하기가 어려워 북한 내 열차 암표 값이 정상가의 20배에 달하고 있다. 역무원이 조직적으로 표를 빼돌려 암표로 팔기 때문에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5백 원인 평양발 신의주행 열차표가 현재 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열차 암표 값이 정상가의 20배나 되고 암표 한 장 값이 북한 노동자의 서너 달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⁹¹

바. 자재유출과 고리대금업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 일환으로 2009년 이후부터 10만 호 건설뿐 아니라 희천발전소·어랑천발전소 건설, 회령시 건설, 류경호텔 완성 등 굵직한 건설 사업을 진행했다. 북한 당국은 자재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북한 전 시도 주민들에게 자재지원 운동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10만 호 건설을 위해 3년 여 동안 주민들은 철근과 모래 등을 구하거나 사비로 구입해 자재지원 운동에 참여했지만 중간 간부들과 현장 책임자들이 자재를 빼돌려 팔아먹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⁹²

“2012년 북한 각 지역 협동농장에서 봄철 농사 준비를 위해 퇴비에 이어 화학비료까지 농장원들에게 강제로 부담시켰다. 협동농장이 이처럼 농장원

⁹⁰ 북한이탈주민 4.

⁹¹ 김성진, “北 철도당국 부패 극심, 암표값 정상가 20배,” 『연합뉴스』, 2010년 11월 2일.

⁹² 최송민, “北, 평양10만 호 내부공사 주민들에게 떠넘겨,” 『DailyNK』, 2012년 4월 22일.

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강제 부과에 나선 것은 북한 당국의 고리대 금지 지시와 맞물려 있다. 당국은 2012년 초 ‘사회주의에서 고리대는 불법이다’라며 이를 어길 시 국가기관 책임자부터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북한에서는 경제난 여파로 도·시·군 농촌경영위원회가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자 각 협동농장이 자체적으로 돈주(식량 도매상) 등 개인들로부터 대부를 받아 농자재를 마련해왔다. 이렇게 빌린 돈은 가을철 수확된 생산물(현물)로 직접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을 수확 물에서 당국이 애국미, 군량미 명목으로 걷어가고 남는 게 별로 없어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북한 당국이 별 대책도 없이 협동농장의 대출 자재를 봉쇄하자 그 부담을 농장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⁹³

사. 남한 관련 비리

“북한 장마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관련 제품은 USB 메모리 저장 장치이다. 북한 당국은 허가 받지 않은 USB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특히 남한 제품의 인기가 높다. 만일 보안원에게 걸리면 물건을 몰수당하고 특히 한국 드라마 알판(CD)을 팔다 걸리면 교화소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벌금 5000원을 내거나 윗선 간부를 알고 있으면 그냥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⁹⁴

“김정은은 청년절인 2011년 8월 28일 전국적으로 남조선 CD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진행하고 외부로부터 CD와 남조선 물건을 들여오는 통로를 철저히 짓부셔 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8·28상무’라는 검열대가 중앙당 선전부 차원에서 조직됐다. 검열성원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 집안

⁹³ 최송민, “北, 협동농장 농장원에 농사비용까지 떠넘겨,” 『DailyNK』, 2012년 4월 2일.

⁹⁴ 조종익, “한류유행 시들지 않아…단속 걸리면 뇌물로 무마,” 『DailyNK』, 2011년 10월 13일.

을 수색하니 주민들은 불안해하지만 이들도 단속을 빌미로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단속에) 걸리더라도 돈만 주면 해결된다. 단속 과정에서 한국, 미국 영화가 들어있는 알판이 발견되면 500달러 이상을 주고 그 자리에서 해결한다.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원들이 한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적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탈북자 가족의 집을 드나들며 협박하고 있다. 회령시 유선동 담당 보위원은 전화를 하다가 적발된 가족들을 눈감아준다는 구실로 근 1년 동안 탈북자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 갔다. 그는 한국의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날을 알고 어김없이 탈북자집을 찾아갔다. 그는 매번 탈북자 가족 집에 위안화 2000원씩을 요구했다. 지난 2011년 10월 8일에는 보위부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처를 보내 4000원을 받아갔다. 어떤 법관은 다른 보위지도원을 시켜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게 하고 자기가 나서 도와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⁹⁵

“남북 이산가족을 연결하며 서신 물품 돈을 운반하는 ‘풍산개’ 조직은 국경경비대 장교 및 각 지역 고위 공직자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돈만 주면 처리 속도는 예상 외로 빠른 편이다. 현재 중국과 북한 환전상, 심부름을 하는 북한 브로커가 10%씩을 챙기고 가족에게 70%를 주는 거래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국경 일대에 수시로 각종 검열대가 내려와 외부와의 연락선을 색출해 처벌하면서 가족이 70%를 다 챙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에 거래선을 가지고 환전상으로 변신한 북한주민은 앉은 자리에서 송금 수수료를 챙기면서 돈을 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지 보위부, 보안서(경찰), 검찰, 노동당 등 권력기관을 매수해야 한다. 중앙의 검열이 있을 때마다 일부는 시범 케이스로 체포되지만 대다수는 뇌물을 쓰고 빠져

⁹⁵ 이석영, “北 보위원들 탈북자 가족 대상 금품 갈취,” 『DailyNK』, 2011년 10월 12일.

나간다.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거물 환전상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한 이들은 이제 중앙에서 어떤 검열단이 내려와도 끄떡 없다. 사방에서 그를 비호해주기 때문이다.”⁹⁶

“심지어 이산자가족들 만나서 상봉해서 한국에 있는 형님이 돈을 줬다 해도 일단은 바쳐야 된다. 이산가족에게는 300달러 이상을 주지 않는다. 만 달러를 줬다고 해도, 그거 다 회수하고 300달러를 준다. 감추는 경우에는 잡힌다.”⁹⁷

아. 꽃제비와 보안원의 유착

“2009년 11월 실시한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 집 없이 떠돌며 유랑걸식 하는 꽃제비들이 갈수록 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꽃제비들 중 상당수가 무리를 형성해 절도 강도 행위에 나서는 등 범죄집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꽃제비들은 30~40대 두목을 만나 ‘패’가 되고 쓰리꾼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절도 행위를 파악하고 있는 보안부에서는 이들을 단속하기 보다 뇌물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부에서 아지트를 파악하면 단속은 하지 않고 몰래 찾아와서 돈을 요구한다. 한 번씩 오면 1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 꽃제비 두목 중에 규모가 있는 곳은 하루 벌이가 1000달러에 이르고 이 돈으로 보안원들을 매수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일도 더러 일어난다.”⁹⁸

“북한에서 골목장으로 불리는 노점을 단속하는 보안원과 단속원들의 뇌물 수수 및 갈취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평양에서 동평양과 서평양이 만나

⁹⁶ 주성하, “北, 송금브로커는 보위부-국경경비대 장교와 한통속,” 『동아일보』, 2011년 10월 22일.

⁹⁷ 북한이탈주민 6.

⁹⁸ 이범기, “어린 꽃제비들이 야밤에 흥기 들고 ‘돈 내놔,’” 『DailyNK』, 2011년 1월 14일.

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강변에 노점들이 크게 늘었다. 서쪽에 중구역과 평천구역, 동쪽으로 대동강, 동대원, 선교구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단속원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여야 하는데, 보안원들이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상설시장과 같은 액수의 자리세를 받기 때문이다. 상설시장 매대 이용요금은 250원 수준이다. 노점상이 100명이면 앉아서 2만 5000원을 버는 셈이다. 보안원들과 단속원들은 자릿세 이외에도 보안서장과 간부들에게 상납할 고기와 술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상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장사를 금지했다’는 등의 핑계로 물건을 압수하고 벌금을 2만~3만 원 물린다고 한다.

또한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우리의 포장마차에 해당하는 간이주점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안원들은 여기서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이러한 간이주점은 저녁 11시까지 장사를 한다. 상인들은 여기서 돼지고기와 술 등을 파는데 보안원들이 저녁 무렵 찾아와서 거나하게 먹고 난 다음 “동무, 장사 잘하라”는 한 마디를 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 상품과 군대 물품 판매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한국 물건이 좋으니까 장사꾼들은 한국 물건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단속원들은 한국 물품을 불시에 단속해 압수하고 며칠 뒤 몇 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돌려준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안원이 중앙당 비서보다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⁹⁹

자. 국경지역 부패

“일반 사람이나 간부나 법관이나 다 부패로 살아간다. 헤산 밀수꾼 한 명이 북한의 법관들을 7명 살린다는 말이 있다. 이 밀수꾼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나라 자원을 중국에다 넘긴다. 이거 넘기자고 하니 제 혼자는 못

⁹⁹ 신주현, “조폭들도 질겁할 北보안원의 골목장 단속,” 『DailyNK』, 2010년 12월 29일.

넘긴다. 거기에는 인민경비대, 책임보위지도원, 중대장이나 소대장을 끼든지 하고, 다음에 연선까지, 자기네 집까지 가자면 담당보위지도원, 담당안전원, 순찰대 등이 개입한다. 혜산 역전까지 가는 열차에서 신자면 열차 보안원을 껴야 되고, 기차에서는 그 보안원이 책임져주지만 기차에서 내려서는 역 보안원이라는 게 또 있고, 역 경비대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법관들 모두를 먹여 살린다. 그런데 이것은 다 국가에서 하지 말란 거다. 그러나 법관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먹어야 자기 생계, 가족 유지해 나가니까 할 수 없는 거다.”¹⁰⁰

차. 손전화 및 CD 관련 부패

“손전화를 사용하다 보위부에 걸리면 보위부원은 먼저 GPS체계가 있는가를 본다. 중국전화기는 GPS체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GPS체계 없으면 그저 벌금 낸다. 그러나 GPS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남한과 전화하지 않았는가를 조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돈 먹이면 다 살아난다. 북한법관들도 사람 단속해 놓으면 이걸 간첩이 아니더라는 것을 다 안다. 그 사람 잡아 넣어봐야 자기한테도 이익 되는 건 없으니 돈을 받고 눈감아준다. 서로 좋은 거다.”¹⁰¹

“남한 알판(CD) 보다 걸리면 벌금 고이고, 돈이 없으면 추방간다. 돈이 없는 사람이 공개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공개 안 된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 마무리해 버린다. 검열 온 사람 입 틀어막으면 된다. 여기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¹⁰²

¹⁰⁰ 북한이탈주민 1.

¹⁰¹ 북한이탈주민 1.

¹⁰² 북한이탈주민 3.

카. 장마당 부패 사슬

“1997년도부터는 금속을 사갖고 헤산으로 날랐다. 그때는 진짜 새 기계들을 마구 뜯어가지고 팔았다. 기계를 모든 사람들이 뜯으니까 가격이 좀 녹었다. 그것을 사 가지고 법관들을 끼고 집에서부터 역전까지 나갔다. 아파트 사이사이에 규찰대나 보안원들이 잠복하였다. 그 사람들은 장사꾼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자기네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잠을 안자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다. 그때는 법관을 또 내세워서 돈을 주고, 세워갖고 역 구내까지 가서 그 다음에 승무안전원 끼고 국경까지 들어온다. 국경까지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또 헤산보안원들이나 법관들이 마중 나온다. 다음에는 보위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역 구내에서 그걸 마중해 갖고 내가 압록강 옆에 있는 밀수촌 어느 집까지 인계를 해준다. 물론 뇌물을 준다. 기차에서는 기차, 떠날 때는 떠날 때 돈을 준다.”¹⁰³

“장마당 자리가 없을 경우 사야 되는데 매우 비싸다. 관리원들은 이것을 단속한다. 이들은 계속 인감대조하고 하는데 대조할 때마다 시장관리소는 돈을 받아먹는다. 우리 조카도 거기 매대를 사고 앉았는데 개가 가정부인이 아닌 처녀 때 돈 내고 샀다. 실제 법적으로 개가 거기 앉을 자격이 없는데 거기 앉았다. 이제 검열집중단속기간에는 물건은 자기가 퍼 놓고 자기 엄마 이름으로 올려놓는다. 제 늙은 엄마를 얹혀 놓는다. 단속할 때는 그 관리원한테 돈을 미리 준다. 그때 많이씩 준다. 장사꾼들은 3만 원도 주고 2만 원도 준다. 받아먹은 사람들한테는 언질을 해준다. 언제 또 나온다, 무슨 상업부에서 나온다라고 알려준다.”¹⁰⁴

“매 시장관리소 소장들은 100%가 여자이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다 구역당 책임비서의 ‘마다라스(매트리스)’이다. 부부지간처럼 지낸다. 완전히 공

¹⁰³ 북한이탈주민 2.

¹⁰⁴ 북한이탈주민 3.

식화돼 있다. 구역급에서는 시장관리소 소장 자리가 완전히 따왕자리이다. 시장관리소 소장이 매장을 여기다 주는가 맨 끝에다 주는가가 중요하다. 상품이 팔리냐 안 팔리냐 하는 거는 자리이다.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좋은 거 있으면 사게 돼 있다. 맨 끝에 있으면 안 된다.”¹⁰⁵

“시장의 보안원은 읍분주소에 속한다. 시장보안원은 정말 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읍분주소도 시장보안원을 주기적으로 바꿔준다. 돌아가면서 돈을 벌라는 뜻이다. 길주군 장마당은 대단히 크다. 삼각지점이라 그렇다. 툭 쳐서 걸리지 않는 장사꾼이 없다. 툭 치면 돈을 찢어준다.”¹⁰⁶

타. 돈세탁 부패

“북한에서 외국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 좀 큰 장사해서 돈이 남는 사람들은 외화 돈을 다 깔고 있다. 북한에서는 열차승무원이나 국경지대 법관들이 기차 칸에서 외화 돈을 뺏는다. 그런데 내가 법관하고 가까우니까 중국 돈 민폐 가짜를 사게 한다. 가짜 돈은 북한에서 절반 돈 안 주고도 살 수 있다. 비행장에서 ‘찍찍이’를 사람 몸에 대면 외화가 있을 경우 소리가 나니까 돈을 다 뺏어서 조서를 써 갖고 본부에다 바친다. 이 경우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한다. 이윤은 반재기 한다. 북한은 가짜 돈을 전문적으로 거두는 사람이 있다.”¹⁰⁷

파. 여행증 부패

“뇌물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 평양이나 국경으로 가는 것은 비싸다. 국내 안에서 통제구역이 아닌데 가는 데는 좀 싸다. 평양 가는 경우에는

¹⁰⁵ 북한이탈주민 6.

¹⁰⁶ 북한이탈주민 1.

¹⁰⁷ 북한이탈주민 2.

우선 문건 자체를 다 만들어야 한다. 평양과 국경은 보안원, 보위지도원 도장이 있어야 된다. 그분들부터 순서대로 담배를 줘야 된다. 그분들에게 뇌물 줘서 평양에 어찌 간다, 국경에는 어떻게 간다 뭐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어느 공장기업소 명의로 돼 갖고 그 부에 가면 그걸 취급하는 분들이 있다. 그 분들한테도 고급담배를 평양의 경우 세 막대기 정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위지도원부터 시작해서 보안원에게 담배를 고여야 한다.”¹⁰⁸

“평양에 가려면 원칙대로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서류에 지장을 찍고 어디나 신청서를 낸다. 그 다음에 동분주소에 가서 자기 담당보안원한테 가서 또 수표를 받고 또 무슨 담당보위지도원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민위원회 2부에 가서 한다. 고이지 않으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자기가 가고픈 시간에 못 간다. 가고픈 시간에 가려면 바로 2부에 가서 2부 지도원한테 자기 성명, 갈 곳, 가는 이유, 기관, 공민증 번호 등을 다 적어 가지고 담배 한 껍이나 두 껍을 준다. 어떨 때는 한 껍 바치면 그 자리에서 벽벽 써서 준다. 오늘 오전에 갔다 바치면 오후에 오라 해서 찾는다.”¹⁰⁹

4. 사법 부패

가. 사면권 오용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1월 5일 정령을 통해 “2월 1일부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 교화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대사령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가족이 있는 수감자들

¹⁰⁸ 북한이탈주민 2.

¹⁰⁹ 북한이탈주민 3.

에게는 직접 가족과 통화를 하게 만든 뒤 거액을 송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대사령 발표와 별도로 수감시설 책임자나 간부들이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석방 거래를 해온다고 말했다. 이미 탈북해 남한에 가족이 있다고 의심되는 탈북자들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장기간 설득한다고 한다. 단, 이런 제의에 대해 외부 발설을 못하도록 서약서를 쓰게 한다. 북한 당국이 공식 대사령을 발표했지만 뇌물 없이는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¹¹⁰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을 앞두고 교화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대사령을 실시하기 위해 2011년 11월경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로 사면 및 석방 대상자를 인민보안부에서 취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정이 생겼다. 수감자 가족들에게 교화과장이 직접 위안화 2만 원을 요구하였다. 대사령이 교화소 간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는 권한을 가진 교화과장이 인민보안부에 제출할 문건에 ‘생활을 잘한다’는 이유를 써서 올리면 중앙에서는 별다른 검토 없이 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왔다. 때문에 수감자 가족들도 교화소 간부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¹¹¹

나. 뇌물에 의한 감형

“198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갑자기 신상품들이 넘어오기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는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되더니 2000년도부터는 완전히 중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되었다. 헤산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머리가 다

¹¹⁰ 이석영, “北교화소 수감자 이용해 南가족에 송금 요구,” 『DailyNK』, 2012년 3월 13일.

¹¹¹ 이석영, “김일성 생일 100돌 맞아 수형자 대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교화소 간부들 대놓고 뇌물 요구,” 『DailyNK』, 2011년 11월 16일.

깨었다. 중국은 저렇게 엄청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는데 우리는 점점 구석기시대로 말 타고 가는구나, 구석기시대로 가고 있다고 아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앉아서 불평불만을 한다고 보위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위부 사람들도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판이다. 이제는 돈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살인죄를 저도 돈만 있으면 다 살아나는 판이다.”¹¹²

5. 사회 부패

가. 사회단체

(1) 여맹

“여맹은 여맹에 불참하는 대신 구당비서나 여맹위원장한테 낸 돈을 일부 먹는다. 나의 경우 1년 여맹생활 안한 대신 7만 원을 주었다. 그러면 1년 동안 가만 두었다. 다음번에 연말 계산할 때 또 7만 원, 다음번에 액수가 올라갔으면 10만 원 등을 주었다. 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산다.”¹¹³

(2) 인민반장

“인민반장은 평양시에서 좀 힘이 있을까 보통 특혜는 없다. 보통 인민반장은 보안서나 보위부원에게 주민 동태를 보고한다. 반장이 뜯어 먹는 건 주민들이 인민반에서 낸 돈, 즉 퇴비 안내는 대신 낸 퇴비 비용, 영예군인 지원비, 농촌동원 대신에 낸 돈 중 일부이다.”¹¹⁴

¹¹² 북한이탈주민 3.

¹¹³ 북한이탈주민 2.

¹¹⁴ 북한이탈주민 2.

(3) 생활총화

“생활총화에 못갈 경우 초급당위원장한테 돈을 준다. 핑계는 아파서 못 간다는 것이다. 아침에 인민반동원 안 나가도 인민반장한테 돈 주면 된다. 돈 주면 진짜 세포총회에 참석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그렇게 돈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말을 안 듣는다. 옛날에는 9시에 오라 하면 9시에 딱 가서 모이는 게 법인가 했는데 이젠 9시에 모이라면 11시에 끝날 때 간다. 끝날 때 가서 출석 장악하고 오면 된다. 초위원장은 사실 많이 먹지 못한다. 16초 하면 인원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맹위원장한테 욕먹는다. 여맹위원장한테 그때그때 어느 정도 고인다. 그러면 16초 욕하다가도 먹은 게 있으니까 욕 안한다. 초위원장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수고만 하지 많이는 못 먹는다. 위로 올라가면서 먹는 몫은 좀 많아지겠는데 밑에 내려갈수록 먹는 몫은 더 없어지는 거다.”¹¹⁵

“여맹 학습실에 가보면 의자 자체가 한 50명 앉게 돼 있다. 그런데 실지는 여맹원수가 700명이다. 참석률이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뇌물 고이고 빠진다. 초위원장을 선거하는데, 그리고 연간총회 할 때는 다 나와야 하는데 굶어모아도 100명을 못 넘는다. 그러나 여맹은 300명 참가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희한한 게 4:15 때 여맹에서 행사 되게 크게 하는데 광장에 모여서 몇 천 명, 5천 명이면 5천 명 여맹원들이 딱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행사를 뽐내 있게 하는데 그 행사를 한 열흘 전부터 준비한다. 그런데 그때는 딱 찬다. 그 이유는 꼭차게끔 하려니까 불참 시 돈 액수를 많이 불린다. 여맹원들은 내가 열흘 동안에 돈을 이만 한 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게 이득이냐를 따진다. 그 이득과 손해를 따져 보아 돈을 많이 내라면서 할 수 없이 다 참가한다.”¹¹⁶

¹¹⁵ 북한이탈주민 3.

¹¹⁶ 북한이탈주민 3.

나. 일반인

(1) 부패의 생활화 및 불감증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사회구조시스템이 계획경제가 다르고 민생경제가 다르고 간부들도 일을 하려면 먹고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부정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불법을 자행하지만, 내가 국가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식으로 그냥 합리화를 해 버린다. 국가에서 쌀을 안 주는데 내가 결국은 먹고 살아야 국가를 위해 일을 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미화해 버린다. 소위 자기를 정당화해 버린다. 결국은 국가에서 못 주고 안되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한다.”¹¹⁷

“국가는 그렇게 안 해도 개인들은 한 달을 계획대로 산다. 사람이 자기 장사하면 내가 어느 법관을 끼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물동량을 얼마나 움직이고, 한 달에 저 법관한테 얼마나 주면 되고 하는 등 자기 계획이 다 있다. 인민반이 열 집이라고 보면 네 집은 딱 맞물린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고 세 집 정도는 군내 장사하면서 살며 나머지 분들은 농사도 짓고, 그럭저럭 산다. 열 가구를 놓고 보면 밥을 굶는 사람이 없다.”¹¹⁸

(2) 절도

“일반 사람들은 동·망치·끼쇠 등을 불법으로 판다. 사람들은 철길에 있는 레루, 못도 뽑아서 판다. 철길순회원들은 계속 다니며 뽑은 놓은 거 보충해 놓는다. 수해 나면 꿈쩍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불법으로 나무를 해서 민둥산이 되었기 때문이다.”¹¹⁹

¹¹⁷ 북한이탈주민 5.

¹¹⁸ 북한이탈주민 2.

¹¹⁹ 북한이탈주민 1.

(3) 성 상납

“여자들은 다 몸을 바쳐야 입당이 된다. 인물이 좀 맨만한 여자들이 거의 다 당생활하는데 몸 팔아 당원이 된 것이다.”¹²⁰

“탈북자 대상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성매매를 ‘인간사의 일반적인 현상’(8.6%) ‘생존을 위한 수단’(41.4%) 등으로 봤다.”¹²¹

(4) 불법물건 판매

“당국에서 인정하는 장마당이 있는데 거기 가지고 나온 상품들이 거의 부패로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 가면 총기류 빼놓고는 다 있다. 남한 상품이든 미국 상품이든 다 있다. 없는 게 없다. 개성공단 제품도 있다. 암시장을 걸쳐서 다 와 있다. 맥심커피 그것도 있다.”¹²²

(5) 불법 전기사용

“힘 있는 사람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1년 365일 전기사용하고도 전기세 없이 산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뇌물을 고인다. 무슨 방직공장에서 전기를 끌어온다. 주민선하고 공업선은 엄연하게 다르다. 전기를 사용하다가 검열이 나오면 전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은다. 한 집에 한 3만 원, 5만 원씩 모은다든지, 몇 집이 안 될 때는 막 10만 원까지 내서라도 고인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기가 돌아야 텔레비전도 실험해서 팔고, 냉장고도 돌려보고 판다. 조금 좀 돈만 있고 직업 있는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다.”¹²³

¹²⁰ 북한이탈주민 1.

¹²¹ 윤성원, “北 주민 40% ‘성매매는 생존 위한 수단’, 『아시아투데이』, 2011년 10월 18일.

¹²² 북한이탈주민 1.

¹²³ 북한이탈주민 2.

(6) 불법 집 매매

“집 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엔 집 사고팔고 하는 게 공식화됐다. 그러나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입사증을 때 건물관리원한테 담배 한 막대기 준다.”¹²⁴

6.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

가. 뉴턴의 4법칙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먹자는 주의이다. ‘개가 됐으면 똥을 먹으랬다 고, 상놈의 새끼 갖다 고이라 쌍’ 이렇게까지 노골적이다. 이제는 인민들 속에서 뉴턴의 4법칙이 나왔다고 한다. ‘고이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문제이다. 아래 직급의 보안원들은 또 상급에게 고여야 된다. 이래저래 고임의 순차가 있다. 수량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¹²⁵

나. 부패기준

“북한에서는 부패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는 것’이다. 수입 대 지출이 북한에서는 직위가 높든 낮든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배급 등이 수입이다. 만일 ‘수입 대 지출’ 기준을 적용하면 권력층 전반이 부패에 다 들어간다.”¹²⁶

¹²⁴ 북한이탈주민 3.

¹²⁵ 북한이탈주민 6.

¹²⁶ 북한이탈주민 5.

다. 과제수행 여건차이 때문에 부패발생

“부정부패 발생은 과제수행 여건과도 관계가 있다. 조건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정책과제는 배가 증가된다. 1980년대 정책과제 한 건과 현재 정책과제 한 건을 비하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거의 10배 정도가 차이난다. 1980년대는 정책과제가 하나 내려왔으면 모든 시스템이 다 정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건 간단했다. 모든 구조가 다 계획경제에 맞물려 있어서 1980년대는 그런 과제가 하달이 되면 그걸 수행하는데 비용이 딱 정해진 비용만 들어가고 더 추가비용은 필요 없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정기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2년 7·1 조치 이후에는 모든 물가가 시장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상부에서 정책과제를 하달할 때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과제수행 과정에서 모든 부정부패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¹²⁷

라. 실적주의가 부패원인

“김정일 시기 후반부에 ‘실적을 내라’는 구호가 있었다. 실적 위주의 강제가 북한사회를 더 피폐하게 만든다. 실적 위주로 평가하니까 간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가 없다. 김정일이 중앙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승용차 타고 현지시찰 나가는데 두 개 지역을 거쳤다. 근데 한 개 지역은 집도 잘 지어 놓고 농사도 잘 났고 했는데, 한 군데는 아주 낙후했다. 김정일이 생각한 게 간부 문제다. 그래서 간부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당내 교양으로 많이 했다. 간부에 한정시켜서 ‘간부가 주인이고, 이 사람에 따라서 당정책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구호를 김정일이 내놨다. ‘간부들을 실적 위주로 평가해라,’ ‘실적이 곧 충성심’

¹²⁷ 북한이탈주민 5.

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확산이 되면서 북한 전반에 요동을 쳤다. 도·시·군당 책임비서들한테 그걸 강조하니까, 책임비서들이 저마다 실적을 내고 집을 짓고 인민생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까 모든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 간부들의 온갖 부패가 다 연동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1000채를 짓는데 들어갈 자재나 시멘트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하는 량은 50%도 안 나온다. 그래서 간부가 실적을 내려고 하면 50% 밖에 안 되는 생산량 중에서 필요한 량을 차지하려고 하니깐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시멘트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식량을 제안하든가, 간부들한테 뇌물 주든가 해서 자기 몫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큰돈이 오고가고 여러 가지 비리가 개입된다. 그러니까 집을 한 동 짓자고 하면 정책은 종이에 적은 종이뿐이지 예산이나 이런 건 아무 것도 없다. 집 한 동 짓는 예산도 계획경제에 따른 예산이지, 실제 집을 만들어 주는 예산이 아니다. 결국 100% 시중에서 다 구입을 해서 집을 완공을 해야 된다.”¹²⁸

마. 부패처벌의 이중 잣대

“이중 잣대가 생기는 이유는 윗간부가 부정을 하기 때문에 아래간부의 부정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 이 부분은 서로가 허용하자. 나도 이만큼 먹고 나도 이렇게 살고, 너도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소위 당적 원칙에서 일정 퍼센트(%)는 서로 공유하고 덮고 넘어간다. 간부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찰문제에서 정기총회라든가 일시적인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같이 적용한다. 간부들 10명을 사찰했는데, 10명이 다같이 부패를 했다. 그런데

¹²⁸ 북한이탈주민 5.

그 정도 차이를 본다. 그 다음에는 누가 더 먹었느냐를 본다. 위에서 간부 내려온 사람들도 사찰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 봐주기는 모든 권력층이 공유를 하는 것으로 거의 합법화가 됐다. 그러니까 식량을 먹은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한다. 징계를 주는데 징계수위를 조절할 때 10명 중 어느 정도 초과했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만일 어떤 간부에 대해 법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100% 굶어서 본인이 50%를 사치하고 나머지 25%는 사업을 위해 썼다면 처벌이 애매해진다. 잣대가 애매해진다. 이걸 해결하려면 북한의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중 잣대를 당이 따로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것은 중앙이나 지방 하부조직이나 다 같다. 이러한 이중 잣대로 인해 2000년대 후반에 북한간부들이 가장 많이 다쳤다. 물론 이 과정에서든 뇌물을 안 고인 사람과 고인 사람과는 처벌에서 차이가 난다.”¹²⁹

바. 부패의 기회비용

“소위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했다. 거의 1년간 전투를 했다. 사실 일이 안되니까 전투를 하는 거고, 또 전투 과정에 일이 안되기 때문에, 단위에다 할당을 했다. 아파트를 짓는 고유건설기업소가 1980년대 방대하게 조직이 돼 있고 지금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다 흩어지고, 직장에 못 나오기 때문이다. 그 기업소가 자기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평양시 수도건설 10만 세대라고 할 때, 1980년대부터 건설할 때 보면 순수 돌격대를 가지고 했다. 그런데 지금 짓는 방식은 각 분야 기관에게 다 할당한다. 무력부도 무력부 안에 국별로 가르고 정찰총국, 후방총국에게 할당한다. 집 한 동을 짓는 가치가 하나라고 할 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향을 따지면 마이너스가 된다. 집 하나 짓기 위해 두

¹²⁹ 북한이탈주민 5.

개를 허무는 거다. 아파트 한 동에 300세대가 입주했을 때 입주한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충성을 맹세해서 얻은 가치와 300동 짓는 과정에 얼마만한 부정부패가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 일반사회를 얼마나 침범했냐를 따지면 손해라는 것이다. 결국은 아파트 한 동을 짓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아파트를 헐어다짓는 원리나 같은 거다.”¹³⁰

사. 간부의 자포자기

“본래 실력을 높이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보면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외국어도 하고, 컴퓨터 기능도 소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력은 중국에는 실적으로 표현이 된다. 그 결과 자포자기하는 간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간부들은 평소 ‘영예로운 최우등졸업’을 가장 선호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중도퇴진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쌓이고, 자기가 감내를 할 여유가 안 된다. 실적 위주, 실력 위주가 강조되어 힘들어지고 잘못하면 자기가 철직이 돼 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깨끗하게 은퇴를 하자는 분위기이다. 사실 북한에는 은퇴 서류나 자퇴서가 없기 때문에 회피적인 방법이 나왔다. 사회보장 좀 받아야지 아파서 일 못 하겠다라든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감내를 못 하겠다라는 핑계를 댈다.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행정일군들이다.”¹³¹

아. 행정간부들의 불만

“북한 기득권층도 기득권을 지키기가 힘들다. 기득권을 향유하는 과정에 너무나도 비싼 대가가 수반이 돼야 한다. 1980년대 시군당 책임비서들은

¹³⁰ 북한이탈주민 5.

¹³¹ 북한이탈주민 5.

15년, 20년씩 했다. 그만큼 근속연한이 길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임비서들의 근속연한은 그 절반도 안 된다. 또 한 개 도의 시군당 책임비서가 20명, 시군 인민위원장이 20명이라면 인민위원장 근속연한은 2년, 3년이다. 책임비서들 근속연한은 6년, 7년 정도이다. 결국 2~3배가 차이난다. 사실 적정 기준의 능력을 통해 시군 인민위원장으로 배치됐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 직위에 회의적으로 되었고,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불만감도 생겼다.”¹³²

〈표 II-1〉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성명(성별)	연령	탈북년도	출신지	직업
북한이탈주민 1(남)	51	2011	중국 출신	방직회사 사무원
북한이탈주민 2(여)	48	2011	해산 출신, 길주 거주	대학교원
북한이탈주민 3(여)	48	2011	개성 출신, 해산 거주	교사, 장사
북한이탈주민 4(남)	58	2003	평양	전 군수동원총국
북한이탈주민 5(남)	44	2009	평양	당간부
북한이탈주민 6(남)	47	2011	평양	내각 및 인민보안부

I

II

III

IV

V

¹³² 북한이탈주민 5.



III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 머리말: 시각과 방법론

이 장은 연구는 북한에서의 부패(corruption)를 ‘후견-피후견 모델(patron-client model)’과 연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평양이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양태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부패와 후견-피후견 모델을 개념 정의하고 상호연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첫째, 정치학적 관점에서 부패의 구조와 가치를 동시에 고찰하는 시각,¹³³ 둘째, 개별 행위자들이 관계 맺는 연결망을 통해 그들의 행위나 과정을 해석하는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¹³⁴ 셋째, 게임이론에 기초한 독재의 정치경제 시각, 즉, 정치적 지대(rents)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수입, 선심성 예산사업(pork-barrel projects)의 불균등한 분배와 정치적 후견(patronage)을 통한 통치자와 지배연합의 생존방식¹³⁵ 등 행위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전체적으로 저발전국가와 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후견-피후견 모델, 그리고 부패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적 관점과 함께 정치사회학과 경제사회학 분야 등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는 더 넓고 통합된 연구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¹³⁶

¹³³ James C. Scott,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2).

¹³⁴ Mustafa Emirbayer and Jeff Goodwin, “Network Analysis, Culture, and the Problem of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9, No. 6(1994).

¹³⁵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¹³⁶ 더욱이 북한과 같이 독재 정권의 세습권력과 2000년대 이후 상업적 시장화가 진전된, 가산제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적 특성을 지닌 체제는 권력관계 중심의 정치질서에 의해 형성된 경제질서를 보인다. 또한 교환과정들을 지배하는 공식제도들과 비공식 규칙들 간에 독특한 관계와 구조적으로 높은 거래비용들과 같은 독특한 특징들에 의해 성격 지워진다. 따라서 그것은 비민주적 정치환경의 특수한 유형들에서 변형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제도주의 경제학은 그와 같은 경제질서 수준에서 떠오르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분석도구를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발견들은 비교 경제 경제시스템 분석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실천영역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들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맥락 이해에 유용하기어, 세계도처에 경제개혁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서 국제 정책결정자들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들을 피할

본 장의 주요 개념인 부패와 지대-추구(rent-seeking)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후견인이 주도하고 경제적 피후견인이 종속적인 정치중심 국가 내 위계적 연계구조인 ‘후견-피후견 연계(patron-client tie)’를 개념화한 후견인주의(clientelism)¹³⁷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진다. 대표적 양상으로 중국에서 후견인주의는 관시(guanxi, connection)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¹³⁸ 연구가설은 첫째, 역사제도적으로 북한의 통제경제(command economy)는 후견인주의라는 정치질서를 초래하였다. 둘째, 북한의 후견-피후견 모델은 ‘권력-부 네트워크’로 상징되며, 중국과 비교할 때 상업화 진행과정과 행위주체 차이로 인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북한 ‘권력-부 네트워크’ 특성은 시기별 정세와 ‘국가(관료)-시장(외화벌이 기지장, 돈주, 상인)-사회(주민) 관계’의 역동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방법론은 질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 북한 당국 및 유엔 기관 등의 발표, 북한 정보·동향 자료 등을 교차분석한다. 둘째, 계층·지역·세대별 할당표집 전략과 신뢰할 만한 기관·정보원을 통한 표본선정 전략에 따라 본 연구자와 구술자가 함께 진행한 최근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과의 심층구술면접을 녹취한 구술텍스트를 분석한다.¹³⁹ 셋째, 비

수 있기 때문이다. Oliver Schlumberger, “Structural Reform, Economic Order, and Development: Patrimonial Capit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5, No. 4(October 2008), pp. 622~649.

¹³⁷ 후견-피후견이란 단어에 따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피후견인주의이나, 정치·관료 후견인 주도성으로 ‘boss’정치 또는 파벌정치를 의미하는 ‘factionalism’과 혼용되는 정치사회적 개념으로 자리 잡혔기에 학술적 통례를 따라 후견인주의로 번역한다.

¹³⁸ Flora Sapiro, “Rent Seeking, Corruption, and Clientelism,” Rent Seeking in China edited by Tak-Wing Ngo and Yongping Wu (eds.), *Routledge Contemporary China Series* (New York: Routledge, 2009), p. 22.

¹³⁹ 구체적으로 북한의 후견-피후견 연계와 부패구조를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관료, 외화벌이 기지장, 지배인·사장, 특수기관 종사자 등 상층, 기술자, 연구원, 예술인 등 중층, 군인 포함 하층 등 직업과 계층분석을 거친 표본선정과 함께 특히 평양출신 상대적으로 중상위층 북한이탈주민들과 상호소통하는 구술면접을 중시하였다.

교방법론으로 1989년을 기점으로 전후 상업화 과정의 중국도시(Xiamen)에서 나타난 사기업과 관료의 행태들을 심층면접을 통해 참여관찰한 완크(David L. Wank)의 연구결과들¹⁴⁰을 본 북한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를 밝힌다.

2. 왜 평양인가? ‘후견-피후견’ 및 ‘체제적 부패’의 전형(典刑)

가. 북한시스템의 원형(原型) 도시

2012년 현재 북한은 수령과 소수 측근지배연합 네트워크로부터 각 지역 단위, 당·군·정 권력 단위가 위계적 계선을 가지고 중하층 관료, 외화벌이 회사·기지장, 돈주, 상인, 이해를 가진 북한주민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네트워크가 20년 이상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령경제의 와크할당-교역권을 매개로 한 상업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된 시장화, 그리고 주민들의 자생적 생존구조 등이 상호작용하며, 일종의 공생구조로 자리 잡힌 시스템 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⁴¹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 장마당 수준을 넘어서, 2007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북한의 시장시스템은 독재체제에 위협적인 반독재세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각종 수령의 통제제도 및 지대할당과 맞물려 세습독재가 지속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데 순기능(順機能)하고 있다. 즉, 2000년 상반기 외현화된 북한의 신흥부유층 즉, ‘붉은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¹⁴⁰ David L. Wank, “Bureaucratic Patronage and Private Business: Changing Networks of Power in Urban China,” Andrew G.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Change in China and Hung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David L. Wank, “Private Business, Bureaucracy, and Political Alliance in a Chinese City,”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3 (January 1995).

¹⁴¹ 박영자,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한국정치연구』, 제19권 3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010). 이로부터 후술할 본 장의 주요 연구시각 중 하나인 ‘게임이론에 기초한 독재의 정치경제’가 도출된다.

위해, 비신뢰성에 기반을 둔 이해관계 양상일지라도 2000년대 하반기 수령가계와 그 지배연합에 충성을 맹세하고, 적극적 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인민경제에 대한 ‘수탈-공모’를 도모하고 있다.¹⁴²

이러한 북한시스템 특성과 부패구조를 필자는 체제적 부패(systematic corruption)로 정의한다. 즉,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작동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제도화된 부패체계이다. 체제적 부패는 부패시스템 내부 행위자들의 행위와 관계, 상호작용, 그리고 그 네트워크들이 후견과 보상의 이익추구로 연계되어 비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이익거래가 일상화된 부패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 평양이다. 북한주민 내 북한 정권 지지자 규모를 추산할 때, 최소한 평양주민, 군대, 당원 등 3중 소속을 고려해도 최소 약 230만 명 평양시민 수준의 지지자를 추정할 수 있다. 수령의 평양지역에 대한 특별한 예산배분과 평양에 집중 거주하는 측근연합 및 그 가계에 대한 후견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평양에 대한 지원은 김일성 시기부터 오랜 기간 북한 정권이 공들인 평양시와 평양시민에 대한 특혜·지원 등이며, 측근연합과 가계에 대한 후견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권력엘리트들과의 대를 이은 후견-피후견 관계로부터 비롯된 운명공동체 특성이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이 부패구조가 물질뿐 아니라 가치와 문화, 특히 수령에 대한 보은(報恩)이라는 도덕적 가치와 인간적 감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의 수준에 따른 계층분화가 진화된 상태에서, 도시화율과 부의 수준이 높은 평양 내부의 계층과 지역 균열도 외현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평양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잣대이며, 권력-부 네트워크 작동실태와 부패구조뿐 아니라 북한시스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원형도시이다.

¹⁴² Park Young-Ja, “Evolutionary Peculiarity ‘between the Market System and the Dictatorship’ in North Korea,” (한국정치학회 2012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2012.8.31).

나. 기이한 풍요와 통치술

코트라 일본 오사카무역관의 2012년 5~7월 북한 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양 및 평양주민 관련 다음과 같은 실태를 재확인할 수 있다.¹⁴³ 첫째, 부와 상품소비 수준이 상식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평양시내의 매장에서 어디서든 손쉽게 도요타와 소니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축제 행사가 열린 평양시내에서는 일본산 고급 자동차나 컴퓨터, 카메라 등 전자제품이 즐비했다고 한다. 정보기기를 취급하는 ‘평양 정보센터’에서는 소니와 NEC 등 일본기업의 신형 컴퓨터가 전시·판매되었고, 승용차 시승판매장도 설치되어 도요타 및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제 고급차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으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한 일본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⁴⁴

둘째, 평양시민들은 김정은 통치에 만족한다는 점이다. 평양시민들은 “선택받았다”는 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김정은 통치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배경에서는 통치술이 있는데, 이번 평양시 노후 시설 개보수 시, 북한 당국은 외국인이 묵는 호텔보다 평양시내 특권 부유층 아파트에 노동력과 자재를 집중 투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황해남도에서는 올해 1~2월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황해남도는 북한의 곡창지대이나 지난해 7월 수해로 가을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수확의 대부분

¹⁴³ 이재, “평양엔 일본제품이 즐비, 지방엔 아사자 속출,” 『코트라 북한경제정보』 (코트라 일본 오사카무역관, 2012-07-02. 출처 및 자료원: 마이니치신문, 산케이 신문, 오사카무역관 등),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IVRS82X0VfOE1R?1=1> (검색일: 2012.9.10).

¹⁴⁴ 일본은 북한으로 직접 수출은 물론 제 3국을 통한 반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을 통한 부정수출 혐의로 케이제이사(社)를 입건한 바 있다. 북한으로의 고급 타일 등 자재 부정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케이제이사’는 이 외에도 고위급 관계자들을 위한 온수 수영장 건설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I
II
III
IV
V

을 국가에 공출 당해 농민들에게는 2~3개월분의 식량밖에 분배되지 않아 아사자가 속출하였다.¹⁴⁵

이렇듯 평양은 기이할 정도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그 ‘기이한 풍요’는 다양한 부패-뇌물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패-뇌물구조는 평양지역 내 계층분화와 후견-피후견의 통치술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구술면접한 평양출신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체적 생활 체험에 기초하여, 먼저 달러보유 수준으로 분화된 평양지역 상중하 계층 실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계층별로 평양지역 ‘후견-피후견 연계’에 얽힌 뇌물-부패 실태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다. 평양 내 계층분화

필자가 각기 몇 차례에 걸쳐 구술면접을 진행한 화폐개혁 이후 탈북한 평양지역-관료 출신 북한이탈주민 구술을 종합해 볼 때, 최근 평양주민은 생활수준이나 소득규모¹⁴⁶보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깎린 돈(운영자금)’ 규모와 직업으로 상중하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¹⁴⁷ 화폐개혁 이후 상·중·하

¹⁴⁵ 주목할 점으로, 황해남도 집단 아사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인재”라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아사에 대해 당 지도부는 흉작 외에도 군의 과도한 음식 공출이 아사의 원인으로 “인재”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난과 어려움을 내부 문서에 언급하면서 군의 우선적인 공출을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서기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세”를 대국민 선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다.

¹⁴⁶ 2003년 이후 북한사회는 식생활 수준으로 상중하 계층을 구분할 수 있었다.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9); 그리고 2004~2005년 기점에는 시장활동 확장으로 외화벌이 기지장, 돈주, 도매상인, 소매상인, 돈 버는 관료, 가난한 관료 등이 달러나 인민폐(중국 돈)도 사용하지만, 기본으로 내화(북한 돈)를 기준으로 한 소득규모로 상중하 계층이 드러나는 구조가 나타났다. 박영자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통일부 정책용역보고서, 2010).

¹⁴⁷ 이는 북한 전역 대도시의 보편적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중상층 이상의 기준 화폐는 달러가 되고, 그 다음으로 국정연선 지역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이력의 평양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와 관련된 생생한 그 실태 구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 외화별이 식당 사장(지배인) 출신인 최상층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평양을 기준으로 북한의 최상층은 3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상층으로 3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이들은 15% 정도, 중층으로 1만~3만 달러를 보유한 이들은 35%, 하층은 외화가 없고 내화(북한 돈)만 소매장사나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35% 정도이며, 극빈층은 15% 정도로 유용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계층이라고 한다.¹⁴⁸

내각중앙 무역성 관료출신인 한 북한이탈주민은 상층은 39호실과 38호실, 특수기관 계통과 군부 외화별이 등 직업을 가지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통 48평형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로 10% 정도이고, 중층 40%로 그 외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이들도, 나머지 50%가 배급이 불안정한 하층민이라고 증언한다.¹⁴⁹

내각 중앙노동성 관료 출신인 한 북한이탈주민은 갖고 있는 돈 즉, 유용가능 자금 규모로 상층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10만 달러 이상 5%와 3만 달러 이상 5%로, 중층은 전체 중 40%로 1만~5천 달러 10%와 5천 달러 이하 30%, 하층은 달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상층을 보면 10%, 1만 달러 이하 기준 중층은 40%, 달러 없는 하층 50%이다.¹⁵⁰

평양시에서 개인 가정교사를 해서 먹고 살았던 예술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상층은 군간부 가족, 무기 다루는 사람들, 외국 다니는 사람들(무역회사, 외무성 직원 등), 항일투사자녀들과 백두산줄기(만경대혁명학원 출신자

중심으로 인민폐의 가치가 높았다.

¹⁴⁸ 북한이탈주민 8.

¹⁴⁹ 북한이탈주민 9.

¹⁵⁰ 북한이탈주민 7.

I

II

III

IV

V

들과 그 친인척), 기관 및 기업소 지배인(사장), 당비서, 학교 총장과 교장 등으로 약 10%, 중층은 매대상인, 사무원, 가정교사 등으로 가정교사의 경우 1인당 중상급 실력을 가진 자로 50달러 수준 5명을 가르치면 1달에 250달러 수입을 버는 30~40%, 하층은 일반 노동자와 평민으로 약 30% 수준, 극빈층은 최하층 노동자층으로 20% 내외며 풀죽을 먹는 수준이라고 분류한다.¹⁵¹

이들의 구술과 그 외 조사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상층 10%, 중층 40%, 하층 50%라는 일관된 계층규모가 동일하게 확인되고, 상층과 중층은 운용 가능한 달러 보유 규모로 구분되어 지며, 이는 이익 관계와 연계성이 높은 관료의 직업 및 직위 여부에 따라 좌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뇌물-부패 및 연계 양상

다음으로 이 계층별로 평양지역 ‘후견-피후견 연계’에 얽힌 뇌물-부패 실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층의 중견 권력을 가진 후견자의 경우, 뇌물 받은 것으로 생활비의 80%를 충당하였으며, 뇌물을 준 것(고인 것)은 10% 이하였다고 한다. 그 외의 3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심층면접에 따르면 북한 전체적으로 뇌물로 먹고 사는 국기기관 간부(관료)층이 한개 군에 약 1천 명×200군=20만 명, 한 개 군에 보위부와 보안부원 약 150명×200군, 그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 한 개 도에 보위부와 보안부원 약 500~600명 정도를 모두 합친 수가 뇌물을 받아서 먹고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후견-피후견 관계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북한용어로 알쌈이라고 하는데, 알쌈은 상층(권력층) 간에는 주로 친한 사이, 중하층은 서로 보호해주는 사이를 흔히, “내 알쌈이

¹⁵¹ 한편 예술인(단) 직업 내부의 상중하 비율은 상층 30%, 중층 60%, 하층 10~20% 정도로 분류한다. 북한이탈주민 10.

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¹⁵²

평양시내에서 종업원 22명을 데리고 외화별이 식당을 운영했던 사장으로서, 권력은 없으나 최상층의 생활수준을 누렸던 피후견자의 경우, 1년에 평균 5만~7만 달러의 수입이 있었고 그 중 평균적으로 1년에 1만 달러 이상이 뇌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장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맥관계, 특히 권력층과의 관계와 알쌈이라고 하였다.¹⁵³ 내각 무역성 책임부원으로 해외근무를 하며 평양과 해외를 왕래했던 중상층 관료의 경우, 해외 생활시에도 검열이 일상적이어서 대사관 관리책(당비서)과 대사, 그리고 보위부 책임자에게 뇌물을 주었고, 큰 뇌물은 수출입 워크 할당 시 이루어졌다고 한다.¹⁵⁴

그렇다면 평양의 중하층들은 어떠한가? 평양에서 중층생활을 했던 금성대학출신 예술인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대학시절 경험에 기초하여, 2001년 기준 뇌물(고이기)은 2월 16일(김정일 생일), 후견자(지도선생 등) 생신, 4월 15일(김일성 생일), 설날 등 1년에 4번 이상 기본으로 이루어졌고, 행사 참여와 공연조 결합 등을 매개로 최소 100달러 이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다. 2001년 기준 구체적 금액은 금성대학 원장에겐 1000달러, 부원장은 300~500달러, 전공담당 선생은 100달러였다고 한다. 전공담당 선생까지 간부급에 들어가는데 북한에서 간부는 기관 및 기업소 과장급 이상이라고 증언한다.¹⁵⁵ 한편 평양지역에서 오랜 군생활을 했던 하층민 출신의 경우, 담배나 술 정도의 선물이 “예의성”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나, 평양주민이라고도 하층민들은 ‘후견-피후견 관계’를 맺을 만큼의 돈과 권력이 없기에 그 네트워크에 접근기회조차 없다고 한다.¹⁵⁶

¹⁵² 북한이탈주민 7.

¹⁵³ 북한이탈주민 8.

¹⁵⁴ 북한이탈주민 9.

¹⁵⁵ 북한이탈주민 10.

¹⁵⁶ 북한이탈주민 11.

3. 지역별 ‘권력-부 네트워크’ 환경: 지역-행위자 차이와 특징

가. 북한 지역-행위자 차이

북한사회에서 평양주민들은 정권 및 체제 유지와 직결된 구성원으로 수십 년 동안 각종 특혜를 받으며 살았고, 2012년 현재까지 불안정하더라도 기본적인 배급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받고 있는 특권 지역이다. 또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와 황해도지역은 집단주의적 농농사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유지되고, 중앙권력기구와 가까운 내륙지역이다. 따라서 국경 연선지역과 수도 평양에 비해, 삶의 양식 변화수준도 낮으며 외부정보의 순환도도 낮다. 한편 함경도와 양강도 등은 일제시대 공업중심지였으며 전통적으로 가족농 위주 밭농사 중심지로, 내륙에 비해 권력과의 근접성이 약하며 중국과의 교역활성화로 정보순환성이 높고 변화가 빠른 국경연선지역이다.

그 외 신의주와 개성시, 강원도, 나진선봉지구가 있으나 연선지역으로 거대한 물동량이 움직이는 신의주는 평성-평양의 중앙권력 무역량이 움직이는 곳으로 중앙권력의 영향력하에 있고, 개성시는 남북경제협력 특구이나 이 역시 중앙권력 관할하에 있으며, 강원도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군사특구로 중앙권력하에 있고, 나진선봉지구는 개방경제특구로 예외적인 특성을 가진다.

핵심적으로 평양시, 평안도, 황해도로 대표되는 내륙지역과 함경도, 양강도로 대표되는 국경연선지역은 북한 정권과의 일체성 또는 김일성조국에 대한 충성도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 측면에서 주민생활과 의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 균열구조를 드러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균열구조로 정보화 속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집단주의적 농경문화를 유지하는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주민들 간에 생활양상과

의식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의 선행연구와 구술면접조사와의 교차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면, 첫째, 평양을 제외하고 생활수준은 국경연선지역이 내륙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둘째, 체제 불만도는 국경연선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

나. 평양 내외 지역 차이

한편, 특권지역인 평양 내부에서도 지역균열이 상식보다 훨씬 크고 점점 확대되고 있다. 평양시의 중심은 중구역(中區域)이며 그 외, 대동강구역(大同江區域), 대성구역(大聖區域), 동대원구역(東大院區域), 낙랑구역(樂浪區域), 역포구역(力浦區域), 용성구역(龍成區域), 만경대구역(萬景臺區域), 모란봉구역(牡丹峰區域), 보통강구역(普通江區域), 사동구역(寺洞區域), 서성구역(西城區域), 삼석구역(三石區域), 선교구역(船橋區域), 순안구역(順安區域), 은정구역(恩情區域), 평천구역(平川區域), 형제산구역(兄弟山區域) 등 총 18개 구역이 있다. 한편 강동군(江東郡) 강남군(江南郡) 승호구역(勝湖區域),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의 남쪽지역은 2010년판 조선중앙연감에서 황해북도로 편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때 강남군도 황해북도로 편입되었으나 이후 다시 평양시로 재편입되어, 행정구역 상 평양직할시는 2011년 현재 18개 구역과 1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⁵⁷

이 행정구역 간에 빈부격차는 상당히 크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심층면접한 평양 중류층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평양지역 내 지역균열 실태로, 2010년 기준 평양시에서 잘사는 지역은 중구역(특히 창광거리), 모란봉구역(재일교포 등이 사는 곳), 보통강구역, 대성구역이고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¹⁵⁷ 북한주민들은 공민등록법의 규정으로 '17세 이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은 공민증을 발급받지만, 평양시민은 1997년부터 특별히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아 다른 지역주민과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인민위원장은 량만길, 당 책임비서는 문경덕이다. <http://nk.chosun.com/map/map.html?ACT=geo_01>.

I
II
III
IV
V

은 사동구역(낙랑구역), 역포구역, 용성구역이라고 증언한다.¹⁵⁸ 한편 상류층 출신 심층면접 참여자는 잘사는 곳으로 역시 중구역, 보통강, 평천 구역을, 못사는 곳으로 선교과 통일거리(낙랑)를 대표적으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체제와 정권에 불만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자 밀집지역인 선교구역을 체제신념 및 권력충성심이 높은 지역으로 중구역을 지목하였다.¹⁵⁹

이와 관련하여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의 초고층 화려한 아파트 단지 때문에 평양간부들 또한 창전거리를 ‘평양 위의 평양’으로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 평양살림집 건설에 투입되었던 군인 일부가 제대해 고향으로 귀가했던 제대군인들이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승과 저승이라고 할 정도라며,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겁이 난다. 제대군인이라고 배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너무 한심하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라며…“해도 너무 한다. 내가 뭐 하다 온 건가” 하며 회의감과 소외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7월 현재 도시와 달리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 이른바 안쪽 지역에서는 굶어죽는 농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¹⁶⁰

더불어 앞서 분석한 계층의 비율 차이는 무엇보다 지역별 차가 크게 작용한다. 대개 하류층은 지방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다. 도시에서 장사를 해서 생존하는 사람은 영 못살지도 않고 잘살지도 않는, 그대로 일상의 생존과 삶의 수준을 중층들이 주류이다.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중규모 이상 또는 빙두(마약) 등 불법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간부들이고 이들의 생활수준은 높다. 특히 도시 보안부서의 감찰과, 수사과와 같이 북한에서 말하는 ‘법관’들은 생활형편이 좋다. 그러나 농촌의 주류인 농민들 다수는 여전히 하루 먹거리를 걱정하는 하층의 삶을 살고

¹⁵⁸ 북한이탈주민 10.

¹⁵⁹ 북한이탈주민 11.

¹⁶⁰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464호(2012), pp. 1~2.

있다.¹⁶¹

다. 특징과 의식 차이

이렇듯 북한주민들은 부의 규모 및 권력과 의 연계정도에 따라 생활수준에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정권의 검열 및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사회주의 의 의식 및 행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이념은 여전히 사회주의와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공식이념과 현실세계의 큰 괴리가 존재하며, 북한주민들도 더 이상 북한체제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북한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냐 아니냐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자기 능력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된 것이다.¹⁶²

북한주민들이 배급단절과 시장경제 질서를 20년 이상 경험하면서, 집단주의·평등지향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된 것이다. 또한 직업관료와 상인들의 긴밀한 관계가 구조적 부패를 넘어 시스템 부패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권력이건 능력이건 간에 가진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적 평등이념을 가지고 평가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반 북한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나 권력을 쥐던가, 그러지 않으면 머리를, 잔머리를 써서라도 법을 어겨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라도 남보다 디디고 올라서서 돈을 많이 벌던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권력을 잡던가. 두 길 중 한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서 막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¹⁶³란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의식변화 양태는 어떠한가? 윤리적 측면에서 물질주의·개인주의·

¹⁶¹ 북한이탈주민 20.

¹⁶² 북한이탈주민 21.

¹⁶³ 북한이탈주민 22.

가족이기주의, 현상적 측면에서 탈집단주의·국가주의 약화·체제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일상적 삶의 안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나, 특히 시장화와 외부정보 유입에 민감한 여성과 시장세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중상류층에 의식변화가 두드러진다. 잘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있다 보니, 의식변화도 하층 및 농민들보다 도시 중상류층 사이에 크게 나타난다.¹⁶⁴

4.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권력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

본 절에서는 앞서 서술한 평양의 부패구조, 특성, 환경, 사례들에 기초하여, 다양한 층위와 사례에서 나타나는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를 다루려 한다. 초점은 ‘권력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윤 창출 기제로서 워크(무역 허가권) 등 지대, 평정서, 증명서, 취업, 알선 등이 다루어질 것이며, 둘째, 보호, 특혜, 기회로서 정치적 보호와 처벌 완화, 부동산, 입학, 승진 등, 셋째, 가치로서 후견자의 부패인식 등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체제변동기인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한 지역 사례연구¹⁶⁵와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윤창출의 기제

사회주의 부패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듯, 지역관료에 의해 통제되는 자원은 방대하다. 여기에는 20세기 역사적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유포되

¹⁶⁴ 박영자, “2000년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민족의식,” 『정책연구』, 제17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¹⁶⁵ 체제변동기 중국의 경우에도 많은 기업가들이 관료들로부터의 지원을 강하게 열망하였으며, 기업의 성공에는 여러 문제에 있어 관료들의 지원이 요구되는데 크게 첫째, 이윤 획득 기회, 둘째, 임의의 제재와 규제로부터의 보호를 들 수 있다. David L. Wank, “Bureaucratic Patronage and Private Business,” p. 160.

있던 상품들과 공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처럼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것들을 포함한다. 더욱이 시장화와 상업화는 이러한 것들에 시장가를 부여하여 그 가치를 증가시켰다. 또한 금융자본에의 접근권한, 금지상품 무역이나 해외 무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허가권한, 정규 행정절차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 등 상당한 지대들이 존재한다. 이런 자원들은 모두 부를 원하는 사기업과 개인의 성장에 유용하므로 기업가들이 정력적으로 지대-추구 활동을 하게 된다. 중국의 지역 부패구조에서 그 구체적 기제와 실태는 다음과 같다.¹⁶⁶

첫째, 기업가들은 희소한 상품과 천연 자원에의 접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희소성은 종종 시장 유포가 금지된 상품과 천연 자원의 이중 가격시스템에서 파생되었다. 1980년 이전 공공기업체에서 생산된 상품은 행정명령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었으며, 희소한 자원들, 즉 철·고무·비료·목재 등에도 행정 가격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1980년 이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상품들을 시장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낮은 행정 가격으로 물건을 사서 비싼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관료와의 관계를 통해 기업가들은 이러한 희소 상품들을 취득할 수 있었다.

둘째,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관료에 의해 통제되는 방대한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은 1970년대 후반 급등하였고, 관료의 지원으로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기업 부지 등의 매매가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서 우선권 획득이 가능했다.

셋째, 금융자본 취득기회이다. 은행 관료들은 대출 승인과 이자율 책정에서 많은 권한을 가졌다.

넷째, 금지된 무역기회를 취득하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해외 무역 조합

¹⁶⁶ *Ibid.*, pp. 160~164.

관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필요한 세관증명서와 해외로부터의 지불금을 수령 가능한 조합 외환은행 사용권으로 얻었다.

다섯째, 공공고객에의 접근이다. 공공기관은 규모가 크고, 은행대출이 쉬우므로, 잠재적으로 사적 기업보다 훨씬 큰 고객이 되었다.

여섯째, 기업가들은 공-사 합동기업을 통해 ‘공적인 상태’를 추구하였다. 법적으로 “공공”기업이 됨으로써, 사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일곱째, 모든 행정 부처에서 실행되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서의 자유재량 결정권이다. 예를 들어, 외부 노동자들을 가까운 공공 치안 부서에 등록하여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문제 등이다. 어떤 기업가들은 노동자 등록을 피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를 등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아직 중국의 1970년대 말 수준의 시장화 및 상업화, 개혁·개방과 체제변동 수준을 경유하고, 권력-부 네트워크 위계 편중에 권력중심성이 강하기에, 위의 사례 중에는 첫째, 둘째, 넷째, 일곱째에서 강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외는 아직 멍아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중 앞서 살펴 본 주요 이윤창출의 기제인 워크로 명명되는 무역권 및 거래권 등 각종 지대들, 평정서, 증명서 등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취업, 알선 등과 관련 평양출신 주민의 구술 사례¹⁶⁷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전체적으로 부패구조하에서 일반적 취업 알선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돈을 주고 권력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 권력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구술자: 권력을 산다는 것이 저처럼 회사 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들여서 자기가 아닌, 나는 엄마잖아요,

¹⁶⁷ 북한이탈주민 12.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위부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많은 나를 누가 보위부에 넣어 주냐고요. 그런데 내 자식을 돈을 들여서 보위부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체계적으로 밟아서 장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농사꾼에서 권력가의 집안으로 구도가 바뀌는 거죠.

연구자: 그런 것들이 꽤 늘어났다는 거죠?

구술자: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돈을 주고 높은 지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연구자: 높은 지위라면 어느 정도까지?

구술자: 당기관, 당기관을 많이 노리죠. 왜냐하면 당기관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김정일의 내부 방침이 뭐냐 하면 누가 더 많이 당을 위해서 돈을 희사했는지에 따라 애국심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연구자: 언제 그런 방침이 있었나요?

구술자: 우리 당총회에서 우리가 외화벌이 기관이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해당이 된다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개인한테까지 허용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귀국자의 자녀, 지금 한국에 친척들 있는 분들,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 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중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삼촌이 한국에 있는데, 이번에 이산상봉 모임에 참가해서 돈을 5000불 받았다, 그런데 그 자식이 군대에 나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애네 집안에 한국에 친척이 있는데, 방문단까지 왔다 갔다면, 앞으로도 이 줄은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군관들은 이런 아이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내가 분대장 시켜 주겠으니 잘하라고 하면 애는 분대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가서 5000불 중에서 50불을 떼다가 군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죠.

I

II

III

IV

V

나. 보호와 특혜

후견자 행위기제로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제재와 규제로부터 보호이다. 지역관료는 여러 방법, 예를 들어 각종 행정적 기준과 규제, 중앙권력의 정책 전환, 캠페인 등으로 기업과 상인, 그리고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관료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서 보호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역 관료-기업가 부패구조에서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¹⁶⁸ 첫째, 지역관료들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이다. 관료들은 행정 절차를 통해 기업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기업가들은 관료와의 관계 구축을 통해, 이 관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동시에 다른 관료들의 그러한 행위를 막아줄 것을 기대한다.

둘째, 임의의 지역 제재(sanction)로부터의 보호이다. 관료들은 기업가의 규제 위반 유무를 떠나 임의로 벌금과 물품 몰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몰수한 상품을 팔아서 부처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 종종 제재를 사용한다.

셋째, 중앙 국가정책은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 관료들을 이 정보를 매개로 피후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관료주의적 캠페인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지역 관료체계에서는 캠페인 위반자를 찾아낼 할당량이 주어진다. 관료는 어느 기업가와 회사가 위반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출신성분으로 인한 정치적 검열과 광범위한 비사회주의 검열, 각종 정책 변경이 잦은 북한체제의 경우, 중국보다 관료들이 가진 보호기제는 훨씬 광범위하며 막강하다. 즉, 평양의 후견자 행위기제 중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보호와 특혜, 그리고 각종 기회제공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보호와 북한에 만연한 각종 비사회주의 검열에 대한 보호 및 처벌완화, 그리고 부동산, 입학, 승진, 행사참여 등 그 종류와 양상은 다양하다. 앞서 다양한 실태와 사례, 그리고 구조적 특성을 밝히었기에, 여기에서는 입학과 학점을

¹⁶⁸ David L. Wank, "Bureaucratic Patronage and Private Business," pp. 164~166.

매개로 한 구술 사례¹⁶⁹를 살펴본다.

연구자: 대학의 부패구조는 어떤가요?

구술자: 돈 때문에 자꾸 부패가 생기고 하나까...사람들이 뇌물 받아먹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왔으니까. 대학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뇌물이면 안 통하는 곳이 없고 다 그렇게 되니까...진짜 뭐 돈만 있으면 모든...

연구자: 학점도 돈으로 살 수 있었나요?

구술자: 예. 근데 공식적으로 돈 얼마주면 학점을 올려준다는 그런 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관계로...

연구자: 입학은 어떤가요? 일정한 규칙도 있고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구술자: 그 전에 1고등 중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입학 폰트를 줬었어요. 모든 고등중학교들에 다 폰트를 주고 고등중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뇌물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고 했었던데요. 근데 1고등 중학교 생긴 다음부터 '성적 위주로 하라' 해가지고 1등부터 20등까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교에 폰트가 나온 만큼 맞춰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뇌물이 통하고 힘이 통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의 경우 역시, 뇌물이 통하는 것도 '일정한 구조와 질서'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 후견자 부패인식

그렇다면, 후견자들은 부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전체적으로 후견자들의 의식구조에는 첫째,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¹⁶⁹ 북한이탈주민 13.

즉, 액상계획(현금)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뇌물이 아니라 계획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체제 유지와 충성자금 마련을 위한 자기정당화 기제가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둘째,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에 비해 턱없이 적고, 그나마 불안정한 월급과 배급으로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 두 번째는 일반주민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인식이기도 하다. 관련 구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액상계획을 달성해야 되잖아요…뭐 작은 것만 봐도 김일성혁명 역사 연구소, 역사박물관도 있고 박물관 청소나 동상 청소를 위해서 빗자루, 쓰레받기까지. 4월 15일 때 415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줘야죠…돈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힘든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돈이죠. 또 그 친구들은 진심으로 내가 당에 충성하면 되지 그렇게 가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식적으로 충성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거보고 평가하나요. 실적을 보고 평가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가식적이라고 해도 내가 평가받고 내가 발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충성도를 놓고 볼 때 진실된 게 어느 정도냐 차이지 다 충성하는 건 같거든요. 그러니…”¹⁷⁰

“간부하면 부패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려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쪽에서 간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할 수 없이 해야 하고, 하려면 내가 또 부를 창조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또 내가 부를 창조하려고 하면 그냥 수탁 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윗사람들은 주민들을 다루는 그 직업 자체도 자기가 직업을 유지하려고 하면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자

¹⁷⁰ 북한이탈주민 14.

기가 주민들에게 받아내는 뇌물과 윗사람에게 고이는 것이 개개인별로 다르거든요. 그 윗사람도 올라갈수록 그 수준도 달라지고 (옛날 김일성 때도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살려면 돈을 갖고 가서 보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보장을 해 줘야 하잖아요. 국가에서 전혀 보장을 안 해주고 그냥 하라는 것은 무조건 또 해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간부들 욕하는 사람들 대개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락하는 거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¹⁷¹

5.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본 절에서는 앞서 서술한 평양의 부패구조, 특성, 환경, 사례들에 기초하여, 다양한 층위와 사례에서 나타나는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를 다루려 한다. 초점은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뇌물(고이기)과 선물, 둘째,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기여, 즉 액상계획 달성 및 충성현금 등으로 권력과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게 해주는 데 영향, 셋째, 파트너십 등, 넷째, 가치로서 피후견자의 부패인식을 다루고자 한다.

중국도시 지역 관료-기업가 연구에 기초하면 피후견자 행위구조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앞서 다룬 후견자의 기제들 즉, 각종 렌트들이 관료의 분배에 의존하는 것이며, 대개 불법적인 것이므로 안면관계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특정한 관료들이 확실하게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¹⁷¹ 북한이탈주민 15.

점이다. 이를 위한 피후견자들의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크게 매수·고용·파트너십(payoffs·employment·partnerships)이 있으며, 각각의 전략들은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수준 및 제도화 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¹⁷²

이 중 북한보다 산업화가 진전된 중국의 경우, 기업이 관료를 고용하는 전략이 중요한 피후견자 행위기제이다. 특히 주로 중간층 관료(the more middle echelons of public-unit hierarchies)를 대상으로 기업가들은 관료에게 고문 또는 이사라는 직함을 제공하며, 이 전략에는 관료와의 관계에서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¹⁷³ 그러나 북한의 경우 앞서 다루었던 고용이 오히려 후견자 행위기제이다. 다만 간접적인 방식이나 청탁유형으로 관료의 친척이나 가족, 친구나 지인을 도매상인들이나 외화벌이 기지 등에서 고용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피후견자 행위기제로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산업생산 구조가 약하기 때문이다.

가. 뇌물(고이기)과 선물

중국의 경우, 뇌물은 기업가와 만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최말단 관료들(the street-level officials and public employees)에게 취해지는 전략이다. 뇌물의 종류로는 첫째, 현금 지급¹⁷⁴과 선물(편의 및 특별대접)이 있다. 현금 지급은 관청에 대한 기부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선물은 관료에 의한 힌트나 간접적인 요구로 이루어진다. 대개 선물은 행정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관료에게 제공되기도 한다.¹⁷⁵ 이는 중국뿐 아니

¹⁷² David L. Wank, "Bureaucratic Patronage and Private Business," p. 166.

¹⁷³ *Ibid.*, pp. 169~171.

¹⁷⁴ 중국에선 이를 "붉은 봉투"라 칭한다.

¹⁷⁵ *Ibid.*, pp. 166~169.

라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부패구조로, 앞서 자세히 밝혔듯 평양은 더욱 노골적이고 보편적이다.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평양 상층 피후전자 구술사례¹⁷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평양의 뇌물구조는 어떤가요?

구술자: 담배 한 갑씩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증 하나 새로 내겠다 해도, 빨리 받으려면 돈을 조금 더 줘야하거든요. 어쨌든 모든 게 그게 움직여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가격이 정해 졌더라고요. 일반 간부들은 진짜 간부들은 몇 천 달러는 돈으로 보지도 않거든요.

연구자: 선생님이 식당하시면서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구술자: 종업원을 받는다, 어떻게 한다 할 때 그건 당위원이나 간부처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서 돈 봉투해서 주는 거지요.

연구자: 종업원을 받을 때 일인당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인가요?

구술자: 아니. 우리 종업원 반대할 때. 꼭 써야 되겠는데, 요리사든. 그런데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연구자: 왜 반대를 하나요?

구술자: 먹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부기를 진짜 똑똑한 걸 두겠다, 그러면 당비서가 내가 좋아하는 거 괜찮은 거 있는데 실제 보면 실무가 없거든요. 너무 없거든요. 그런 안면이 오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도 먹어서 내가 원하는 걸로.

연구자: 종업원 할 때 일인당 얼마씩 주셨나요?

구술자: 2009년도 기점으로 하면 한 천 달러 주거든요. 실제 이거 식당 외화식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거든요. 회사 차원에서는 연백만 불 이상 버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연구자: 어떤 회사가 백만 불이요?

¹⁷⁶ 북한이탈주민 8.

구술자: 2경제 산하요, 그 다음에 무역부 산하, 무슨 어쨌든 큰 회사가 많습시다. **사단 경우 있고 이런 데서도 많은데 그런데는 진짜로 중앙당 무역부도 **한테 주는 건 몇 만 달러거든요.

연구자: 가장 많이 뇌물 고일 때 일단 그 당비서한테만 주나요? 다른 사람한테도 주나요?

구술자: 간부처장한테도 주고 중앙당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법일꾼한테도 주고.

연구자: 다, 가격이 다 다른가요?

구술자: 일에 따라 액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연구자: 그럼 선생님은 주로 종업원 문제 처리할 때 쓰셨고 그 다음에 어떤 때?

구술자: 해외 나올 때.

연구자: 보통 만 오천 정도 얘기하던데 해외 나올 때. 선생님은 얼마 정도 쓰셨나요?

구술자: 만 달러.

연구자: 가격은 비슷하네요. 해외 나가는 거는. 그러면 종업원하고 해외 식당을 아예 차리려고 하신거지요?

구술자: 네. 그리고 또 뭐있냐면 왜 돈을 고이나면 접대원들 노래 춤, 해외 식당 나가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재간이 있는 아이들로 많이 뽑는단 말입니다 기량이 있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상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조건이. 간부사업원칙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 한번 나갔다 왔다, 금성 졸업생이다, 뭐 그런 방침들이 많습시다. 금성 아이들 내보내지 마라 뭐.

연구자: 금성은 왜 그런 건가요?

구술자: 금성이라는 게 예술하는 학원, 예능학원, 학원이 아니지 전문 학교란 말입니다. 예술 학교는 금성이 최고니까, 어쨌든 거기 애들이 제일 괜찮단 말입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식당이 뽑아 가려고 많이 노력한단 말입니다. 진짜 전문, 애가 발전성

이 있고 뽑아가지 않는 이상 해외구경도 해보고, 많이 나가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런 애들 나가려면 또 좀 줘야지요.

연구자: 같이 데리고 나가서.

구술자: 왜냐면 문건도 적당히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식당이 좀 되니까 그런 애들이 노래도 부르고 춰야.

연구자: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려면 일인당 얼마나 썼나요?

구술자: 1,500달러 정도, 실제 기둥이 있으면 되거든요. 기둥이 한두 명만 있으면 조가 되거든요. 노래든 뭐든 저희들끼리 맞춰 나가고 저희가 다 맞춰 나가고.

연구자: 그러면 그 정도 들고, 그 친구들이랑 몇 년 정도 보통 있을 수 있나요?

구술자: 3년, 3년 있다가 방침을 받거든요. 식당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무성하고 하지요 그런 거. 지금 이거 식당에 옴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혔다 노래 춤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침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2년만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방침을 받거든요.

연구자: 그러면 최대 5년 인가요?

구술자: 5년.

연구자: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뇌물을 가장 많이 고였나요?

구술자: 출세라고 봐야지요.

연구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뇌물을 가장 많이 고인 기관을 순서대로 하면?

구술자: 당이지요. 다음에 보위하고 다 골고루 합니다.

연구자: 뇌물을 고이는 것이 선생님 생활에 부담이 됐나요? 부담이 전혀 안 됐나요?

구술자: 전 전혀 안 되었습니다.

한편 평양 중하층 부패구조 관련 피후견자 구술¹⁷⁷ 실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선생님은 언제 언제 뇌물을 주며 인사를 해보셨습니까?
 구술자: 저는 2001년도 군약대 갈 때도, 그때도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건 다.
 연구자: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구술자: 여기 돈으로는 어떻게 환산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돈으로는 그때 2001년도 당시는 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만 원이 컸어요.
 연구자: 그러면 다른 댐 언제 쓰셨습니까, 뇌물을 평소에 늘 쓰시나요?
 구술자: 평소에 쓰는 것보다도 제가 어디 예를 들어서 집에 한 번 놀러 가고 싶다, 하면 같이 가는 군관들한테 이렇게 올 때는 선물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게 예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담부턴 미워도 나와 같이 나오고 싶어 하고, 제대돼 가지고 집에 들어와도 우선 공장지배인하고 당비서한테 인사해야 될 거고.
 연구자: 그럼 뇌물을 사람들이 어떤 때 주고받나요?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
 구술자: 뭐, 입당하는 것도 뇌물이죠. 대학가는 것도 뇌물을 줘야 되고, 심지어 열차 타는 것도, 뇌물이라기보다는 안면, 안면 하는데, 안면이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직장에서 조금 진급을 높이자고 해도 뇌물이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연구자: 승진할 때도 필요하고?
 구술자: 네. 제가 본 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대학가는 거.

나.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영향력 행사

기본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액상계획 달성뿐만 아니라 충성헌금 등을 제대로 해야 관료들이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기에, 권력층 더욱 능력 있고 많은 후원금을 줄 수 있는 피후견인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피후견인은 관료의 권력과 지위 유지 및 강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¹⁷⁷ 북한이탈주민 16.

앞서 다른 실태 외 그 상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실적을 보고 평가하잖아요…아무리 가식적이라고 해도 내가 평가받고 내가 발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충성도를 놓고 볼 때 진실된 게 어느 정도냐 차이 다 충성하는 건 같거든요… 결국 계획을 달성하고 잘 바쳐야 하고…”¹⁷⁸

“액상계획이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비생산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생산단위에서, 비생산단위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것이 없는, 받아서 공급하는 비생산단위이기 때문에 생산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생산단위는 자기가 생산해서 생산된 것 팔아서 액상으로 하는 것이 액상이지만은 우리는 생산한 것이 없는데…그럼 이곳에서는 얼마 보내겠으니까 하고, 필요한 것을 사서 상사 이름으로 해서…그래야 평양에서는 만족해 하지요…그러니까.”¹⁷⁹

다. 파트너십: 알쌘

이 전략은 피후견자가 “후견인” 또는 “후원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고위직 관료(officials who occupy high leadership positions)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역시 혈연과 비혈연 관료의 구분이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대개 물질적 인센티브 제공에 의하여 파트너 관계가 맺어지는데, 관료들이 관료적 권력을 회사에 줌(power shares)으로 관계가 이루어진다. 권리편이라 불리는 회사의 지분을 제공받고 이사회 임원이 되는 형식이다. 또한 가족관계에 의해 파트너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최상의 관계가 바로 중국의 태자당이다.¹⁸⁰ 북한의 경우, “알쌘”이라는 용어가 이 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¹⁷⁸ 북한이탈주민 14.

¹⁷⁹ 북한이탈주민 19.

¹⁸⁰ David L. Wank, “Bureaucratic Patronage and Private Business,” pp. 171~172.

I
II
III
IV
V

개념이다. 알쌈과 관련한 구체적 구술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후견인의 전형적인 사례로 탄광연합기업소 지배인 출신이었다, 이후 정치적 문제가 있었으나 간부 인맥이 두터워 신의주·평성·평양을 연결하는 군부 외화벌이 사업소 기지장을 했던 구술자의 실태구술을 살펴 보자.¹⁸¹

연구자: 그럼 선생님이 계실 때는 알쌈이란 말을 많이 쓰나요? 어떤 말로 쓰나요?

구술자: 지금도 많이 쓰죠. 몰래몰래 정책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정책에 대한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연구자: 당국이나 김정일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구술자: 그렇다고 봐야죠. 두 가지 부류예요. 그즈마니(아주머니)가 알쌈관계다. 둘이 파트너 관계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연구자: 그 파트너 관계라는 게 부하관계라는 건가요?

구술자: 부하관계죠. 8·3부부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장사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주로 장사하는데, 여자 세 명 간에 남자하나는 꼭 좀 있어야 되겠어요. 짐 나르려면 남자가 힘세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남자들이 장사머리 튼 거 있어요. 그 둘이 이쪽 여자는 맹탕이야, 집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밥이나 할 줄 알아요. 그니까 둘이 짝 지어서 가지요. 그니까 뭐 색시는 뻔히 알면서도 8·3부부는 뭐 여관에 같이 부둥켜 자기도 하고, 고난의 행군 때.

연구자: 그러다 정분 나고 그런 거를 알쌈이라고 한다고요?

구술자: 알쌈이란 게 그런 의미보다, 둘이 아주 친한 사이다.

연구자: 그럴 때도 있고, 그답에 뭐 뇌물을 주고받을 때도 그럴 때도 쓰나요?

구술자: 실례를 들면 “야 거 간부 부장이 책임비서하고 알쌈이야.”

¹⁸¹ 북한이탈주민 17.

간부부장하고 책임비서하고 거리가 있지만, 간부부장이 인사 서류를 보잖아요. 그니까 당연히 책임비서하고 알쌈이 돼야죠. 책임비서가 이 사람 시키라하면 뭐 거 만들어야지만, 또 간부부장이 이 사람 규정 안된다 하면 또 못 지내니까.

연구자: 그럼 몇 년도부터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나요?

구술자: 이십 년 넘었죠. 고난의 행군기점으로.

연구자: 그때 생겨가지고 지금도 쓰고? 일반적으로도 쓰나요?

구술자: 예 다 써요. 함북도고 평안도고 다 쓰고.

한편 상층이나 중견층 이상 중앙 관료 출신으로, 상층 생활을 하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후견인 사례들의 경우, 알쌈이란 말을 그리 자주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 즉, 알쌈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고자 원하는 피후견인들의 행위전략이 강하게 작용하여 만들어진 언어인 것이다. 이에 대한 상층 구술자들¹⁸² 주요 증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알쌈은 어떤 의미로 쓰셨나요?

구술자: 알쌈이라는 게 같아요. 믿을 만한 놈이지요. 자기가 믿을 만한, 충성을 다하는 놈이 알쌈이지요.

연구자: 이 알쌈 관계를 통해서 뇌물이 많이 오고 가나요? 좀 잘 봐달라고.

구술자: 알쌈들이 아무래도 자기를 알쌈으로 삼아주는 사람한테 뇌물을 바치겠지요.

연구자: 선생님 알쌈관계 알쌈이란 말을 쓰시지 않으셨고요?

구술자: 그게 밑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연구자: 밑에 사람들이.

구술자: 우리도 알쌈이라는 거 하긴 하지만 뭐.

¹⁸² 북한이탈주민 8; 북한이탈주민 9.

연구자: 중국에 판시라고 있잖아요. 판시랑 비슷한 현상이 북한에는 없나요?

구술자: 있지요. 그게 인간관계지요.

연구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족일 테고, 다음은?

구술자: 자기사업을 통해서 구축되는 인맥이지요.

연구자: 최상류층은 알빚을 어떤 의미로 쓰나요?

구술자: 알빚은 친구란 말 같습니다. 상류층은 알빚이라는 소리 잘 안 쓰지요.

라. 피후견자 부패인식

앞선 후견자 부패인식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후견자 부패인식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먹고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북한사회의 질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식실태 구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북한에서 고이는 것(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술자: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북한사람들은…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밥을 먹으려면 손가락이 있어야 하듯이 당연히 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4법칙(고이면 움직인다)이 잘 말해줍니다.¹⁸³

연구자: 북한에 사실 때 뇌물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 안 하셨어요?

구술자: 상관없어요.¹⁸⁴

연구자: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다. 사는 데. 예의성이라고만 얘기하시

¹⁸³ 북한이탈주민 18.

¹⁸⁴ 북한이탈주민 8.

더라고요. 예의 바르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했나요?

구술자: 실제로 그런 소리 안하지요.¹⁸⁵

연구자: 선생님은 북에서 사실 때 뇌물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술자: 뇌물 없으면 못살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뇌물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한 가지 예의로 됐어요.¹⁸⁶

연구자: 인사성?

구술자: 예, 인사성이 맨손이 아닌 뭐를 주는 게 인사성이 됐죠.¹⁸⁷

연구자: 전에도 인사성이 그렇게 있었나요?

구술자: 그런 게 없었죠.¹⁸⁸

연구자: 전에는 물질이 오가지는 않았습니까?

구술자: 오고가지 않았다고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받는 사람도 어색할 정도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원칙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없어도 해당은 되기는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 의사들이 가족들한테 해주는 게 없어 봐요. 항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로. 뇌물이라기보다는 인사성으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주는 게 있죠. 아무데나 다 돼요 그거는.¹⁸⁹

6. 맺음말: 진화경로와 ‘공생-균열의 프랙탈’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시스템의 부패구조를 ‘행위자 네트워크 유형’별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령과 지배연합, 즉 절대권력자와 당·군·정 상층관료이다. 이는 수령경제 영역에서 워크 할당과 지배연합 유지, 당·군·정의 권력 조율

¹⁸⁵ 북한이탈주민 8.

¹⁸⁶ 북한이탈주민 16.

¹⁸⁷ 북한이탈주민 16.

¹⁸⁸ 북한이탈주민 16.

¹⁸⁹ 북한이탈주민 16.

및 통제, 그리고 은혜와 충성, 경쟁구도, 특히 당군 관계 조율과정에서 나타난다.

둘째, 관료층 내부로 지위, 정보, 승진, 처벌완화, 검열, 각종 인허가권, 무역, 세금, 투자 등 지대를 매개로 한 중앙간부와 지역간부 간에, 그리고 지역 내 당·정·군 간부 간에 나타난다.

셋째, 권력과 부, 관료와 상인·사업가 등 연계로, 각종 이윤창출 지대와 정보, 정치적 보호, 그리고 검열과 처벌수위를 매개로 한 관료와 무역회사, 돈주, 상인들 등 관계에서 드러난다.

넷째, 지역단위 중하층 관료와 주민 간 부패로 인민반·병원·학교·시장·공장·직장 등 모든 북한주민의 일상 생활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종류도 학교입시, 통행증, 상행위, 각종 일상생활의 인허가 및 통제완화, 8·3노동, 비사회주의의 검열, 처벌완화 등 너무나 다양하며, 이상하거나 특수한 것이 아닌 북한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북한체제 작동방식이며, 북한주민 삶의 운영방식으로 자리 잡혀 있다. 즉, 앞서 분석했듯 시스템 부패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구조와 가치를 보이는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2000년 이후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며, 2000년대 중반부터 적응 및 공생하는 자기조직화와 진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외화벌이 집중단속을 거치고,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 이후 2012년 현재까지 북한 시장시스템의 역동성을 보면, 긴장과 균열의 징후를 보이며 적응하고 공생하는 자기조직화와 진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특성에 기초해 평양 ‘권력-부 네트워크’의 진화경로를 전망하기 위해, 영향력 게임과 네트워크의 구조전환 가능성이란 2가지 주제를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필자가 평양을 연구지역으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 중심 키워드로, 평양스타일의 북한전체 지역에 대한 자기 복제 즉, 프랙탈(fractal) 양상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가. 영향력 게임: 각기 더 필요하고 안전한 이익추구

영향력 게임의 기본 인식은, 후견 행위자인 권력(관료)은 더 많은 뇌물·보상과 더 안전한 관계를 요구하며 피후견자의 충성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피후견의 주요 행위자인 외화별이 기지장, 도매상인, 돈주 등 ‘부’를 대표하는 신흥부유층은 더 많은 이윤과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하기에, 더욱 더 고위직이며 안정적인 후견인과 관료를 물색하며 후견인 내부 구조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기업가들은 관료주의적 지원을 얻기 위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다 더 고위 관료와 연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첫째, 말단 관료들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적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호 또한 개별적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고위 관료들은 보다 많은 관료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고위 관료의 지원을 얻음으로써 기업가들이 관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셋째, 고위급 수준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¹⁹⁰

이에 반해 수령과 측근연합의 정치권력 집중성과 영향력이 큰 평양의 경우, 권력을 가진 관료들은 더 많은 뇌물과 보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안전한 충성-복종 관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피후견자 간 과도한 충성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후견자의 부담과 출현은 이미 상당히 증대하였다. 수령경제의 특성이 각 도·시·군 공동체 단위에 프랙탈 현상으로 자기 복제되어 있기에, 2012년 현재까지 게임규칙의 권력 편중이 큰 것이다. 즉, 평양의 경우, ‘후견자 부패’ 중심성이 확고히 드러나는 양상이다. 그러나 2007년 외화별이 정리 실패의 경험, 화폐개혁의 실패과정과 그 이후 시장진화과정에서 드러나듯이 피후견자 행위구조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균형 파괴와 분화,

¹⁹⁰ David L. Wank, “Bureaucratic Patronage and Private Business,” pp. 172~173.

균열의 현상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전망할 수 있다.

나.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가능성

중국의 경우, 후견-피후견 연계가 영속적 신뢰관계(관시, 혈족, 지속-중첩 연고)를 지향하였다. 즉, 지속적인 연계들(ties)로의 전환을 추구한 것이다. 행위자들이 상호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더 그리고 덜 도구적인 (more and less instrumental) 전략”이 있다. 뇌물의 경우, 보다 도구적인 것이 현금지급이고 덜한 것인 선물이다. 고용이나 파트너 관계에서도 급료나 주식 배당금 같은 사업관계가 있고, 혈연관계와 같은 덜 도구적인 관계도 있다. 대개 기업가들은 보다 덜 도구적인 관계 전략을 추구한다. 이것이 보다 영속적이기 때문이다.¹⁹¹ 따라서 “관료적 후견의 최고 모델(the logical extreme of bureaucratic support)”로 혈연이 선호되는 것이다.¹⁹²

이에 비해, 권력의 중첩성과 지속성이 높은 평양의 경우, ‘권력-부 공생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후견인들이 이미 3대 혈연, 학연, 지역 등에 기반을 둔 영속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¹⁹³ 따라서 현 평양체제에서는 그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그 네트워크 내부로부터 위계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구조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 네트워크가 수평적

¹⁹¹ 구체적으로 첫째, 덜 도구적인 관계 전략은 관료후견의 깊이·수위를 강하게 한다. 현금지급보다 선물이 뇌물을 ‘친절’로 가장시켜 준다. 둘째, 기업가들은 현금지급과 같은 도구적 전략과 관련된 부패나 경제범죄가 갑자기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셋째, 핵심 관료와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관료기구 내에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가들은 관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Ibid.*, pp. 173~175.

¹⁹² 가장 강력하고 가장 덜 도구적인 형태의 관료주의적 지원은 국가기구 최상층에 양친이 있는 것이다. 한편 역설적으로, 이런 형태의 지원은 후견-피후견 관계를 수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가가 어떤 관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태자당”이라 불리던, 중앙 국가엘리트의 자식들 집단의 형태이다. *Ibid.*, pp. 175~176.

¹⁹³ 박영자,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Post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18권 2호(통일연구원, 2009), pp. 33~66.

네트워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내부 균열과 외부 환경이 맞물려 전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다루었던 2000~2012년 현재까지 권력과 부의 공생·타협·갈등·균열의 자기조직화와 진화의 역동성으로 추론할 때, 중장기적 시각에서 현재의 종속적 후견인주의 네트워크의 균형 파괴와 분화, 균열의 시나리오 또한 전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서 다룬 행위자 네트워크 분석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구조적 불안정성 때문이다.

첫째, 이미 평양권력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후견 행위자들의 과도한 요구 과잉이다. 세습일지라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층지배그룹 내부 변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권력층이 충성자금 마련과 새로운 기회 및 안전을 위해 피후견인에게, 더 많은 보상과 더 안전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그에 대한 보상의 규모는 확대되지 않거나 기약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김정은이 들어서고 각종 내부 개혁준비와 인물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피후견의 주요 행위자인 외화벌이 기지장, 도매상인, 돈주 등 ‘부’를 대표하는 신흥부유층들이 좀 더 신중하고 안전한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이윤과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후견인과의 관계를 원하기에, 정권교체기나 변동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약간씩의 보험을 분산투자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후견인과의 이해 차이로, ‘공생적이고 종속적인 권력-부 네트워크’ 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공생-균열의 프랙탈

프랙탈은 애초에 자연의 패턴에 잠재하는 닳은꼴을 의미한다. 즉 고사리 잎과 같이 부분과 전체의 구조가 같음을 뜻하며, 동양의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의 사상과도 의미가 통한다. 현대에서는 자연현상뿐 아니라,

I
II
III
IV
V

사회조직과 역사 속에도 프랙탈 연구가 확장되었다.¹⁹⁴ 본 연구는 평양의 시스템 부패가 북한지역 전체로 자기 복제되었음을 주목한다.

앞서 다루었던 2012년 현재 북한은 수령과 소수 측근지배연합 네트워크로부터, 각 지역단위, 당·군·정 권력 단위가 위계적 계선을 가지고 중하층 관료, 외화벌이 회사·기지장, 돈주, 상인, 이해를 가진 북한주민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패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더욱이 이 네트워크가 20년 이상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령경제의 워크할당-교역권을 매개로 한 상업화,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된 시장화, 그리고 주민들의 자생적 생존구조 등이 상호작용하며, 일종의 공생구조로 자리 잡힌 ‘시스템 적응과 진화 양상’¹⁹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평양뿐 아니라 각 도와 시 단위에 당군부 권력을 중심으로 자기 복제되었다.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이라 불리기도 하는 프랙탈 현상은 시스템이 사실은 유사한 특징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체계임을 보여준다. 기실 프랙탈은 부분이 전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자기닮음’ 현상을 지칭하기 때문이다.¹⁹⁶ 세포가 자신을 재생산하고, 세포가 모여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 인체를 이루는 과정처럼 자기유사성은 구조 혹은 과정의 특징이 다른 시공간상의 척도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부분과 전체가 서로 닮아 있는 자기유사성의 질서 속에서는 개인과 집단은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는 부분품이 아니라 전체 조직질서가 투영된 또 다른 전체로 이해된다.¹⁹⁷

앞서 다루었던 평양스타일의 프랙탈 과정에서, 2000년대 초 장마당 수준

¹⁹⁴ 김용운, 『카오스의 날갯짓』 (서울: 김영사, 1999), p. 80.

¹⁹⁵ John H. Miller and Scott E. Page, *Complex Adaptive Systems: An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Models of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¹⁹⁶ 김용운, 『카오스의 날갯짓』, p. 80.

¹⁹⁷ David Parker and Ralph D. Stacey, *Chaos, Management and Economics: The Implications of Non-Linear Thinking*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94).

을 넘어선 2007년 이후 2012년 현재 북한 시장시스템의 붉은 자본가들은 독재체제에 위협적인 반독재세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수령의 각종 통제제도 및 지대할당과 맞물려 세습독재가 지속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데 순기능을 한 측면이 더 크다. 북한의 신흥부유층, 즉, ‘붉은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2000년대 중하반기 수령가계와 그 지배연합에 적극적으로 공생하는 종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인민들의 생존경제에 대한 수탈-공모를 도모하는 성격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평양의 부패구조를 필자는 체제적 부패(systematic corruption)로 정의했다. 즉, 하나의 공동체가 작동하는 중요 메커니즘으로서 제도화된 부패체계이다. 체제적 부패는 부패시스템 내부 행위자들의 행위와 관계된 상호작용, 그리고 그 네트워크들이 후견과 보상의 이익추구로 연계되어 비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이익거래가 일상화된 부패구조로 시스템 작동과정에서 유사한 모델을 자기 복제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 모델의 중심부가 평양이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 수령으로부터 선택받은 도시 평양이 후견-피후견 및 체제적 부패 고도화, 과도한 정치중심-후견인주도의 피후견인 경쟁구조로 인한 계층 간 위계와 내부 지역 간 위계, 그리고 피후견인의 출혈경쟁 및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평양 내부의 균열 수위가 상식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다. 후견인 주도(편중) 부패구조(즉, 후견인 착취구조)가 피후견인의 안정적인 이익을 담보해주려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빠른 정보순환과 함께 변화에 대한 욕구도 빠르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북한 전체 지역에 대한 ‘권력-부 공생의 프랙탈’만큼 ‘권력-부 균열의 프랙탈’도 평양스타일의 자기 복제가 나타나면 그 복제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유사성과 시스템 복제는 역동적

I
II
III
IV
V

과정의 유사성이며 운동하는 자기 복제이다. 각 차원이 그 자체의 예기치 못한 창발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조직화 과정도 이와 유사하게 모든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⁹⁸ 따라서 체제 안정성의 복제력 만큼 체제 불안정성의 복제력도, 창발이 이루어지면 그 속도와 파장이 가장 클 것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전 생애에 걸쳐 담론·가족·도시·제도·국가·문화 등 모든 범위에서 권위라는 것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했다. 독재에 대한 연구는 최고통치자의 거시적인 독재 행위패턴이 지역적 미시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낳으며 내려가고 심지어 인근 국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프랙탈은 역사가에게 자기유사성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에 대한 은유도 제공한다. 그 움직임은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점진적으로 최고 수준의 패턴을 간직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권위주의에 대한 반항은 컴퓨터 사용의 확산과 인터넷, 그리고 대중문화에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몇몇 현상과 함께 그 범주에 포함된다.¹⁹⁹

앞서 살펴본 게임이론 분석 측면에서도, 수령과 지배연합의 정치권력 영향력 주도성이 가장 큰 평양의 경우, 피후견인들에 대한 요구의 수위가 높으며 피후견자 집단에 대한 과도한 충성경쟁과 출혈 헌납을 요구하게 된다. 물론 이에 따른 보상의 규모도 어느 지역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안정성이 제도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피후견인의 이반현상을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양의 피후견인은 여타 지역보다 자본력뿐 아니라 해외 연줄망과 고급 정보 접근력도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건사로 북한 권력은 2007년 외화벌이를 정리하려는 대대적 검

¹⁹⁸ Erich Jantsch, *The Self-organizing Universe: Scientific and Human Implications of the Emerging Paradigm of Evolution* (Pergamon Press, 1980).

¹⁹⁹ John Lewis Gaddis, 강규형 옮김, 『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2004), pp. 131~132.

열사업에서도 붉은 자본가에게 패하였으며, 2009년 말과 2010년 초 화폐개혁과 이후 외화를 모두 수거하려는 사업에서도 붉은 자본가에게 패하였다. 이렇듯 피후견자 행위구조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권력-부 공생 네트워크의 균형 파괴와 분화, 그리고 ‘권력-부 균열의 프랙탈’을 전망해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IV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1. 북한에서 체제적 부패

부패(corruption)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패는 세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를 가진다. 첫째, 부패는 주로 권력, 특권,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는 부패와 단순한 범죄를 구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부패 역시 범죄 가운데 하나이지만, 모든 범죄는 부패가 될 수는 없다. 둘째, 부패는 어떠한 이익(렌트)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렌트는 부패의 원인이면서 결과이다. 렌트가 있는 곳에 부패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패로 인해서 렌트가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부패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또 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특히 부패는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에 배태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부패는 개인이나 집단이 공적인 힘과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될 때 발생한다.

체제적 부패는 만성적이고 제도화된 부패를 의미한다. 체제적 부패의 상황에서, 부패는 예외가 아니라 규범이 된다. 국가기구에는 아래에서부터 상층에 이르기까지 부패활동에 개입하며, 시민들은 뇌물이 어떠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법적으로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결정적이라고 인식한다.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가 국가기구 안에 그리고 관료와 시민들 사이에 만들어진다.²⁰⁰ 체제적 부패의 유형은 중앙집권적 부패와 탈중앙집권적 부패로 구분할 수 있다.²⁰¹ 중앙집권적 부패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²⁰⁰ Christoph H. Stefes, “Governance, the State, and Systemic Corruption: Armenia and Georgia in Comparison,”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 No. 2(Spring 2008), p. 75.

²⁰¹ 칸(Feisal Khan)은 제 3세계에서 체제적 부패를 상향식 경로와 하향식 경로로 구분한다. 여기서 하향식 경로는 중앙집권적 부패와 유사하며, 상향식 경로는 반대이다. Feisal Khan, “Understanding the Spread of Systemic Corruption in the Third World,” *American Review of Political Economy* (December 2008), pp. 25~29.

“위계적인 렌트(rent) 수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 이유는 렌트의 수취와 배분이 권력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위계적인 권력구조는 민주주의에서도 형성될 수 있지만 주로 비민주적 정치사회에서 나타난다. 위계적 권력구조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전통사회의 특성 등에서 나타난다. 중앙집권적 체제적 부패가 나타나는 사회에서의 권력관계의 양상은 주로 후견-피후견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탈중앙집권적 체제부패는 렌트의 수취와 배분에 있어서 권력의 영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주적인 렌트배분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패가 반복적이고 만성적이지만, 부패에 의해서 형성된 렌트가 우연적이고 권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래서 스테페스(Christoph H. Stefes)의 경우에는 탈중앙집권적 체제적 부패가 더욱더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렌트배분 구조가 형성된 주요한 이유는 국가-사회 관계에서 약한 국가-약한 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치권력의 체제통합 능력이 취약하고, 사회 역시 국가의 렌트추구를 견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권력 상층부의 자원낭비가 심각하고, 중하위 관료들은 상층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렌트추구가 일상화된다.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권력과 중하위 관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체제적 부패는 시장화과정에서 그 양상과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 체제적 부패는 ‘관료주의’와 ‘본위주의’라는 용어로 요약된다. 왜냐하면 부패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권력이 제시한 계획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위자들은 목표의 초과달성과 자재의 초과확보를 목표로 하며, 이는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일종의 ‘충성경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체제적 부패는 ‘연성예산 제약’개념을 통해서 설명된다. 그러나 시장화과정에서 체제적 부패의 양상이

달라진다. 현재 북한의 체제적 부패는 중앙집권적 형태와 더불어 시장화 확산과정에서 탈중앙집권적 형태 역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천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위기에도 공식적으로 계획경제 시스템이 유지됨으로써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의 특성이 경로 의존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권력의 자원동원 능력이 취약해졌다. 그 결과 계획경제에서 당의 명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현되지 않는다. 편성된 계획은 계획을 실행하는 생산단위에 가게 되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계획경제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다. 계획의 책임을 아래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소위 ‘자력갱생형 본위주의’이다. 둘째, 1990년대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저발전 사회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장화’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상황에서 권력상층부는 물론 중하위 관료나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렌트를 추구한다. 거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탈중앙집권화된 중층적인 부패구조의 형성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기에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북한경제의 차원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탈중앙집권화된 이와 같은 렌트추구 행위는 결국 전체 경제에 자원흐름을 왜곡하고 투자와 생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체제적 부패의 원천으로서의 렌트

렌트는 부패의 원천이다. 렌트가 없는 곳에 부패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⁰² 체제적 부패를 간주할 때, 그래서 부패는 대표적인 렌트추구

²⁰² 렌트 개념에 대해서는 학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렌트가 ‘초과소득’이며 ‘정치적 소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rent-seeking) 행위로 간주된다. 체제적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반복적 렌트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시장이라는 제도적 수준에서 렌트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패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 계획경제에서 렌트 양상의 변화: 계획의 시장의존 현상과 렌트추구

계획경제에서 렌트의 발생은 위계적 명령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자원동원 능력 때문에 발생한다. 심각한 경제난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위계적이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경로 의존적’ 렌트이다. 물론 과거에도 소위 ‘본위주의’나 ‘관료주의’ 등의 형태로 렌트추구가 발생했다. 사실 이러한 표현에는 계획경제 비효율성 문제를 시스템 수준이 아니라 ‘행위자’ 수준의 문제로 전가하기 위한 권력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는 계획경제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수준의 문제였다. 계획경제는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경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성과

해석은 “한계비용(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국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James Buchanan, “Rent-Seeking and Profit-Seeking,” Gordon Tullock, Robert D. Tollison and James Buchanan (eds.), *Toward a Theory of Rent 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p. 3; Robert Tollison, “Rent-Seeking: A Survey,” *Kyklos*, Vol. 35, No. 4(1982), p. 577. 반면 네오베버주의(Neo-Weberianism)적 해석은 렌트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렌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Mustaque H. Khan, “Rents, Efficiency and Growth,” Mustaque H. Khan and Kwame Sundaram Jomo (eds.), *Rents, Rent-See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Evidence in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마지막으로 네오마르크스주의(Neo-Marxism)적 해석은 이윤과 렌트를 구별하고 전자가 잉여가치가 실현된 형태라면, 렌트는 “권력과 특권에 의한 소득이전”으로 정의된다. Hartmut Elsenhans, *State, Class and Development* (Radiant Publishers, 1996), p. 54.

주의적 경쟁체제의 도입은 계획 집행단위, 즉 공장과 기업소의 ‘연성예산제 약’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²⁰³ 관료는 이를 통해서 생산목표의 초과 달성을 과시하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사회적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계획경제에서 발생하는 렌트의 양상이 달라진다. 계획경제의 위기는 재정수입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위기로 인해서 개별 공장과 기업소는 물론 주요 권력기구에게도 ‘자력갱생’이 강요된다. 북한경제 전반적으로 원자재와 에너지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의 ‘성과주의적 본위주의’와는 다른 양상의 ‘자력갱생형 본위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자력갱생형 본위주의는 계획의 탈중앙집권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계획 메커니즘의 작동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자력갱생은 당과 국가가 개별 기관과 단위의 활동을 책임져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신에 권력기관과 생산단위는 권력, 특권, 권한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의존하여 렌트를 추구하게 된다. 반면 ‘아래’는 스스로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권력과 특권 세력에게 렌트를 제공하게 된다. 그 결과 계획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제공한 렌트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다.

²⁰³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 Yingyi Qian, “The Theory of Shortage in Socialist based on the ‘Soft Budget Constrain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1(1994); Yingyi Qian and Chenggang Xu, “Innovation and Bureaucracy under Soft and Hard Budget Constraint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5, No. 1(January 1998); Gerard Roland and Ariane Szafarz, “The Ratchet Effect and the Planner’s Expectation,” *European Economics Review*, Vol. 34, Issue 5(July 1990).

나. 시장화와 렌트: 저발전 사회의 구조적 특성

북한시장은 북한체제가 저발전 사회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저발전 사회에서 시장은 독점적 혹은 비경쟁적이며, 비생산적인 특성을 가진다. 독점적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곧 독점 렌트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처럼 독점 렌트(monopoly rent)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1) 정치권력의 시장개입과 통제

권력은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을 직접적으로 감사하고 단속한다. 시장거래의 거의 모든 부분의 통제 대상이다. 거래품목과 가격은 물론 심지어 시장 개폐장 시간과 시기까지 모두 권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관료는 시장참여자들 가운데 일부, 특히 돈주들과 결탁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러한 결탁은 관료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힘들게 만든다. 즉 관료와 돈주의 결탁은 시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2) 공급의 부족

시장에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가장 중심적인 원인은 생산은 여전히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역시 시장개혁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정책 목표는 ‘계획의 복원’에 있었다. 게다가 2005년 말 이후 시장개혁 조치는 후퇴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생산과 공급확대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지배권력이 정책적으로 계획경제의 복원을 시도하게 되면서, 시장은 비공식적 혹은 불법적 성격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특정세력에 의해서 독점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돈주와 같은 신흥 상인계층들은 독점적인 가격결정권을 가진다.

(3)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현재 북한시장에 유통되는 생산물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시장 유통과정에 대한 권력의 감시와 통제가 지속되는 측면이 오히려 시장을 비공식부문으로 전락시킨다. 유통경로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시장거래가 감소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뇌물공여나 단속세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시장거래가 지속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렌트가 발생하게 된다.

(4) 모순적 수요구조

북한시장의 수요구조는 모순적이다. 한편으로 빈곤과 기아의 일상화로 구매력이 극히 제한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식량과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비의 욕망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증가로 표출된다. 이와 같은 모순적 수요구조는 시장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렌트와 주변계층(marginality)을 발생시키게 된다.²⁰⁴ 구매력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은 곧

²⁰⁴ 주변계층(marginality) 개념에 대해서는 학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미학계(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시장과 유리되어 있으며, 주로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인구의 규모가 작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율성이 없는 것을 주변적(marginal)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는 주변화(marginalization)의 핵심적인 원인을 경제적 것으로 이해한다. 주변계층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은 주변화보다는 오히려 주변적 지역(marginal reg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때 주변적(marginal)이라는 의미는 중심부(center)와 주변부(periphery) 가운데 주변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구조(social construction)적으로 이해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주변계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권력'이다. 중심부로 이해되는 세력과 주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소수자(minorities)와 비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주변계층을 이해하는 경우이다.

I
II
III
IV
V

인구의 다수가 주변계층이라는 점을 말해주며, 공급부족의 상황에서 과잉 수요로 인해 공급자는 가격결정권을 가진다. 국가는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이를 단속하려 하지만, 시장상인 가운데 한도가격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5) 이데올로기의 정당성 부재

시장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체제에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봉건에서 자본주의로 이행과정에서 시장거래와 부의 축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이 시장교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7·1 조치를 전후로 당과 국가의 허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정당은 매우 취약하다. 이는 2005년 말 이후 강화된 이른바 ‘비사주의 검열’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 결과 행위자의 시장참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관료들은 단속권을 빌미로 렌트추구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 돈주와 같은 일부세력들은 관료와 결탁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다. 외연적 렌트

북한경제는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에 의존하게 된다. 외연적 렌트는 렌트의 기원이 국민경제의 외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자연자원은 희소성(scarcity)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예컨대 사회적 주변계층은 성(gender)·인종·종교·성별·직업·언어로 인해서 주변화(marginalization)가 발생하며, 그들은 고립되거나 빈민이 되고 특권화된 사회적 공간(privileged social spaces)으로부터 배제된다. 본 연구는 주변계층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 가운데 사회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Bradley T. Cullen and Michael Pretes, “The Meaning of Marginality: Interpretations and Perceptions in Social Science,” *The Social Science Journals*, Vol. 37, No. 2(2000), pp. 215~217.

수밖에 없으며,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초과소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외연적 렌트’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후 자연자원 외에 원조나 무역으로 발생하게 되는 국제적인 소득이전 (transfer)으로 발생한 초과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면서 ‘국제 렌트 (international rent)’로 명명되기도 한다.²⁰⁵ 외연적 렌트의 하위 유형은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²⁰⁶ 첫째, 원자재 렌트(raw material rents)이다. 이것은 원자재와 광물 자원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얻는 렌트이다. 둘째, 위치 렌트(location rent)이다. 이는 수에즈 운하와 같은 주요 교통시설 혹은 교통 루트의 소유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렌트이다. 셋째, 전략적 렌트(strategic rent)이다. 군사원조나 재정원조의 형태로 국가에 지급된 보조금이나 연차관(soft loan)이다. 넷째, 정치적 렌트(political rent)이다. 개발이나 인권을 위해서 국가기구와 시민사회 단체에 서구나 아랍 공여국들이 지급한다. 공적 개발원조(ODA)와 같은 지원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이주 렌트(migration rent)이다. 이주민들의 사적 송금형태로 국내 금융체계에 대규모로 유입된다.

북한경제에 유입된 외연적 렌트의 구체적 형태는 해외원조, 무역, 경제협력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잉여의 수취와 배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대표적으로 식량원조가 그러하다. 1990년대 식량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나 자력갱생을 강조하던 북한정부가 직접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1995년

²⁰⁵ Hazem Beblawi, “The Rentier State in the Arab World,” Hazem Beblawi and Giacomo Luciani (eds.), *The Rentier State* (New York: Croom Helm, 1987), p. 51; 이국영,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 (서울: 도서출판 양림, 2005), pp. 290~297.

²⁰⁶ Thomas Richter,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me Maintenance in Egypt: Linking External Resources and Domestic Legitimation,” Oliver Schlumberger (ed.), *Debating Arab Authoritarian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81~182.

부터 2010년까지 전체 식량원조는 1227만 8166메트릭톤이 제공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은 324만 8618.4메트릭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국으로 301만 5007메트릭톤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240만 422.6메트릭톤, 일본이 131만 2047메트릭톤을 제공하였다.²⁰⁷ 물론 식량원조는 두 차례의 핵실험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면서 급감한다.

무역 가운데에는 특히 권력기관의 ‘외화벌이’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외화벌이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소련과 중국 등과의 대외교역이 급감하면서부터이다. 공식적인 대외교역이 감소한 이후 권력은 개별 기관별로 외화벌이를 독려한다. 1991년 ‘새로운 무역체계’가 도입되고, 이후 당·군·정의 거의 모든 기관은 자체로 무역회사를 조직하여 외화벌이에 나서게 된다. 1990년대 초반 주요 외화벌이 수출 품목은 자연채취물, 파철, 골동품, 아편, 가짜 담배, 중고 자동차 등이었다. 이후 외화벌이 품목은 확대되었으며, 선군정치의 등장과 함께 군이 외화벌이에 전일적으로 가담했다.²⁰⁸ 물론 이와 같은 외화벌이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외화벌이는 북한사회를 지탱시켜주는 주요한 원천이면서 동시에 권력과 특권세력의 체제부패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²⁰⁷ 세계식량계획(WFP) 국제 식량원조 정보시스템(INTERFAIS) 데이터베이스 <<http://www.wfp.org>> 참조.

²⁰⁸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2011), pp. 219~232.

3. 렌트와 체제적 부패

가. 계획의 시장의존형 렌트추구

북한 계획경제에서 본위주의는 권력상층부에서 계획집행단위인 공장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중층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자원동원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계획의 책임성이 약화되며 권력상층부는 자신의 책임을 계획 하부 단위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책임전가는 계획경제의 참여자들에게 비공식적 혹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렌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체제적 부패를 유발하게 된다.

첫째,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부에 없는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²⁰⁹ 관료들이 공장지배인, 당간부, 사회안전부 요원들과 결탁하여 통행증을 발급받아 하수인으로 하여금 전국을 돌면서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생산단위와 생산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세력들이 비공식적인 생산을 통해서 렌트를 수취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품과 원자재를 동원하여 생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한다. 공장과 기업소 간부들 혹은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의 렌트추구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장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투자 없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획당국이 사적 생산을 부분적으로 허가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1984년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가내작업과 부업반의 형태로 허가되기 시작했다.²¹⁰ 그

²⁰⁹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p. 63.

²¹⁰ 위의 책, p. 63.

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가내살 가공으로 발전하여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가내살 가공을 위한 자재 공급과정에서 공장에서 자재와 부품들을 빼오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²¹¹

공장의 자재와 부품을 빼돌리는 일은 북한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도 몇 가지 사례들이 보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직공장 지배인 김춘녀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수차에 걸쳐 종업원들의 생활보장을 구실로 공장에서 생산한 군일피복생산용 천 2500m와 데트론실 1톤을 사회의 다른 수출품피복공장에 넘겨주고 그에 해당하는 식량을 받아다가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정황 48).”

“로덕찬은 트랙토르공장 로동자로 일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출고된 자재로 트랙토르부속품을 만들어 자기 집에 가져다두었다가 협동농장에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식량과 현금을 받아가지였다(정황 62).”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자재와 부품 등에 대한 자신의 접근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중하위 관료들과 노동자들이 주로 일으키는 ‘생계형 부패’ 혹은 ‘생계형 범죄’이다. 이들은 공장가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게 되면서 가장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한 사회계층이기 때문이다. 생활비(월급)가 지급되지 않고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패를 일으키게 된 경우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계형 부패는 계획경제의 위기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 대중들이 생존을 위해서 불법적으로라도 시장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²¹¹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38.

둘째, 공장 내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가 공장에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고 대신에 장마당 등에서 경제활동(이른바 ‘8·3 노동자’)을 한다. 예컨대 자신의 공식임금의 2~3배 수준의 현금만 공장에 납부하면 일 년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365일 내내 출근부에 도장이 찍힌 것으로 처리 되는 것이다.²¹² 노동자는 출근하는 대신 시장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반면 공장과 기업소는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배급을 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납부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공장가동을 필요한 원자재와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출근하더라도 ‘남는 노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위’에서 공장가동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단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위 내재적 시각에서는 부패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공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시장활동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재적 시각에는 생산단위의 초과착취와 부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처럼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회에서 공장과 기업소가 노동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돈을 상납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북한의 공장들 가운데 대부분이 출근해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노동착취이다.

마지막으로 공장, 농장, 군부대 부지 내 가운데 유희지 일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른다. 여기서 수확된 농산물과 사육된 축산물은 공장과 기업소의 부수입이 된다. 또 그 수확물 가운데 일부는 군대로 보내지기도 하고 자체 소비되기도 하며 간부들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²¹³

²¹² 양문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2006), p. 89.

²¹³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p. 63.

부업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협동농장 작업반(약 140명)이 미개간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던 것이었다. 규모는 대체로 1,000~2,000평이며, 생산물은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산단위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1987년부터는 기관, 기업소의 부업밭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군대의 부업밭도 허용되었다. 이 가운데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군대로 보내지거나 관료들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모두 초과착취(exploitation)와 수탈(expropriation)에 해당된다. 물론 개별 생산단위가 위로부터 자재공급과 후방공급(생활비)을 위한 자원동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부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업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의 일부를 관료가 갈취하는 것은 사적인 목적으로 잉여노동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이면서 초과착취에 해당된다. 사실 계획경제에서 관료들이 이처럼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 가운데 일부를 착복하는 일은 흔히 목격된다. 하지만 계획 밖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계획에서의 위계적 명령을 이용하여 수취하게 된 것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일들이다. 물론 이는 개별 생산단위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다. 경제난과 함께 생활비(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생계소득 마련을 위해서 불편부당한 계획 밖의 노동동원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관료와 돈주의 유착

현재 북한시장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거래에서 ‘돈주’로 일컬어지는 신흥 부유 상인계층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돈주는 시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시장활동을 시작해서 부를 축적한 세력으로 장마당에서 직접 물건을 나르거나 팔지 않고 중간상인을 고용하여 전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상(巨商)과 같은 존재이다.²¹⁴ 현재 돈주는 시장에서 독점적 가격결정권을 기반으로 이익을 전유하고 있다. 독점적 시장이 형성된 이유는 국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돈주의 독점적 가격결정권은 단지 돈주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료들과의 후견관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공급제한의 이유는 첫째, 생산의 영역은 여전히 계획경제 시스템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생산행위는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다. 둘째, 돈주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획득한 독점적 렌트를 전유하지만, 렌트를 생산부문에 재투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돈주의 투자는 주로 가내수공업과 초기 메뉴팩처 수준에 머물러 있다.²¹⁵ 이는 돈주가 거래의 독점과 생산의 독점을 근간으로 초과소득(렌트)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북한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재화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재화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²¹⁶ 무역거래로 유입된 상품 가운데 장마당에 유통되는 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밀무역’에 의한 것이다. 밀무역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 무역 거래이기 때문에 그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돈주들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거래와 생산을 독점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가격결정자(price-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돈주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점 렌트(monopoly rent)를 전유한다. 독점 렌트는 체제적 부패의 주요한 원천이다. 돈주가 독점 렌트를 수취할

²¹⁴ 정은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시장의 자생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2009), pp. 172~173.

²¹⁵ 위의 글, pp. 183~192;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달: 4대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pp. 249~252.

²¹⁶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156.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돈주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돈주는 현재 북한체제의 특성상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적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지배계급(관료계급)의 ‘정치적 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²¹⁷ 돈주들은 국가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공채를 사거나 현금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감사장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평상시에 돈주와 상인들에 대한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며,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관망하지만 통제가 필요할 때 단속한다.²¹⁸ 그런데 관료계급 내부는 시장화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²¹⁹ 관료계급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돈주는 비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관료와 돈주의 관계는 관료계급 내부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하고 비영속적인 후원-피후견(patron-client)’ 관계이다.

사실 돈주의 경제적 자율성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돈주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관료계급으로 뇌물을 공여한다. 돈주가 수취한 독점 렌트는 결국 지배권력으로 이동한다. 돈주의 존재 자체가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이데올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주’의 정치경제적 성격 때문이다. 돈주는 상업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업자본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 희구 세력’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점을 이용하여 렌트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자본주의

²¹⁷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4권 2호(2011), p. 54.

²¹⁸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달: 4대 시장을 중심으로,” p. 259.

²¹⁹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 229~247;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 160~215.

이행에 관한 돕(Dobb)과 스위지(Sweezy) 논쟁과 브렌너(Brenner) 논쟁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상업화 모델’ 즉 상업자본의 양적 확산이 산업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²²⁰ 서구의 돕과 브렌너, 그리고 일본의 오오츠카 히사오(大塚久雄) 등은 대부분의 상업자본이 봉건적 정치질서 하에서 원거리 무역과 시장독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검증한다.²²¹ 또 상업자본은 정치제도,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레짐(regime)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안정성과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 돈주는 관료들과의 결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렌트)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치적 개혁이나 체제전환을 요구하기 어렵다. 즉 돈주와 관료 사이의 유착관계 형성으로 발생하는 체제적 부패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양 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이다.

다. 외화벌이와 워크

1990년대 위기 상황에서 국내 생산체계가 와해되면서, 기관들의 외화벌이는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서 배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면서부터 지방별, 기관별, 기업소별로 외화벌이 사업소가 난립했다. 예를 들어 청진시의 경우 외화벌이 사업소가 군부대 50개소, 안전부 10개소, 보위부 3~4개소, 호위국·시당·청년동맹 각 1개소 등 국가기관 외화벌이 사업소가 130~140개소에 달했다.²²² 그런덴 신무역체제의 도입 이후 허용된 다양한 무역집단의

²²⁰ Maurice Dobb and Paul Sweezy 저, 김대환 편역, 『자본주의 이행논쟁』 (서울: 동녘, 1985); Robert Brenner, 이영석 역, “전산업시대 유럽 농업 부문의 계급구조와 경제발전,” 『신자본주의 이행논쟁』 (서울: 한겨레, 1985), pp. 23~81.

²²¹ 오오츠카 히사오(大塚久雄), 송주인 역,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서울: 한빛, 1981).

²²²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냄, 2004), p. 123.

실무자들은 전반적인 국가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자기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본위주의적’이고 사적인 이해에 대한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북한 역시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적이 부족한 사업소를 대폭 정리하였다.²²³

또한 권력기구들은 무역 허가권에 해당되는 와크를 이용하여 렌트를 추구한다. 와크가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기에 와크의 획득은 매우 중요하다. 와크는 시장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되며, 관료는 와크를 이용해서 무역거래를 통제한다. 와크를 가지지 못한 회사들은 권력기관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무역활동을 하게 된다.²²⁴ 다시 말해서 권력기관들은 무역 와크를 이용하여 외화벌이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이나 회사에 와크를 빌려주고 경제적 이득(rent)을 챙긴다. 무역회사의 명의를 빌리는 상당수는 ‘돈주’로 일컬어지는 신흥 부유계층이다. 돈주들은 무역회사의 직함을 부여받고, 국내에서 수출품들을 모아 중국 무역회사에 수출하고 이익(rent)을 수취한다. 무역회사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이익금 가운데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신의 상급기관에 상납한다.²²⁵

외화벌이나 와크 판매과정에서 부패구조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²²⁶ 공식적으로 외화벌이는 국가수입이 되거나 각 기관의 운영을 위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북한경제는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이 필요하다. 무역거래의 이와 같은 제약은 이를 허락하거나 무역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지위를 가진 권력기관과 관료들

²²³ 위의 책, p. 126.

²²⁴ 홍민, “북한 시장일상생활연구: 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p. 325; 양문수,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p. 147.

²²⁵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달: 4대 시장을 중심으로,” pp. 163~164

²²⁶ 김종욱, “북한의 관료 부패 실태와 개혁·개방의 상관관계,” (통일부 연구보고서, 2007), pp. 36~37.

가운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른바 공적인, 곧 개별 권력기관과 지방의 이익을 위한 외화벌이와 워크 판매 역시 명백한 부패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공적인 외화벌이는 체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사실 권력을 보호하고 특권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관료는 국가와 체제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동일시 함으로써, 공적 이익의 명목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 관료의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

북한체제에서 시장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시장화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장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품목들이 존재한다. 또 모내기철과 추수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과 같은 명절 시기에는 시장을 열 수 없다. 그리고 시장가격의 상한 폭도 정해져 있다. 정부가 공시한 ‘한도가격’을 지키는 상인들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²²⁷ 곧 품목과 가격, 시장 개폐장 시기 등 시장유통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이 통제의 대상이다. 물론 권력이 시장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는 없다. 대신 권력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즉 권력은 시장을 완벽히 관리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관료는 시장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은 관료계급의 권력을 보호하고 특권을 재생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무기이다. 현존

²²⁷ 북한이탈주민 24.

사회주의에서 관료는 계획을 매개로 사회경제적 지배를 공고히 했다.²²⁸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²²⁹ 그러나 경제위기는 계획이 더 이상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시장화의 확산은 결코 관료의 권력과 특권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화는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했다. 분명히 시장화는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후 확산과정에서 관료는 시장을 이용해서 자기이익을 추구했다. 관료의 렌트추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부패가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부패가 일상화될 수 있는 이유는 관료는 시장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계획과 명령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시장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 물론 관료는 이러한 권한을 시장을 단속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이용한다. 그 결과 관료의 부패 덕택에 시장화의 확산은 지속된다. 즉, 시장화는 관료의 부패의 만연하게 만드는 조건을 제공하며, 다시 관료 부패는 시장화 확산에 기여한다.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관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한다. 설령 단속에 걸려 처벌되더라도, 뇌물을 쓰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²³⁰ 북한의 정치권력과 특권세력은 이처럼 시장을 단속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면, 관료의 이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분간 관료는 공식적으로는 계획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암묵적으로 시장화의 확산 과정에서 자기특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장활동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료가 정치경제적으로

²²⁸ Renate Damus, *Der reale Sozialismus als Herrschaftssystem am Beispiel der DDR* (Giessen: Focus-Verlag, 1978), pp. 129~164.

²²⁹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pp. 241~243.

²³⁰ 북한이탈주민 25.

유리하도록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관료는 자의적 법해석을 기반으로 체제적 부패를 지속하고 있다.²³¹

권력이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권한이 광범위하다는 점, 법치주의의 취약성은 렌트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체제적 부패를 형성하게끔 하는 원인이 된다.²³²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곧 시장의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뇌물 공여는 결코 비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반대로 뇌물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법치주의의 취약성으로 발생하는 렌트는 결국 ‘수요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판매자들은 뇌물공여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거래자체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결국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체제적 부패로 권력이 획득한 렌트는 시장활동의 대가로 대중들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다.

마. 대외원조의 사적 전용

해외원조는 외연적 렌트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렌트에 해당된다. 대북 원조의 직접적인 목적은 인도적 지원과 핵문제의 해결이다. 1995년 이후

²³¹ 법이 당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에 대한 이해는 소위 ‘법원리주의’로 일컬어진다. 법원리주의에서 정책과 이념이 법에 우선하게 되는데, 그 결과 법에 대한 해석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높아지게 된다.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법학』, 제46권 1호(서울대학교, 2005), pp. 478~480.

²³² John Joseph Wallis, “The Concept of Systematic Corruption in American Histor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March 2006), p. 25.

북한이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구한 이래로 1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원조가 공여되었다. 그렇지만 대북 원조 가운데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대외원조로 인한 부패문제는 권력기관의 전용이 가장 심각하다.²³³ 해외원조에 대한 배분권한은 결국 권력상층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사회에서 원조물자를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해서 전용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원조수취와 배분에 있어서 국가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치적 렌트가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국내에서 추출된 잉여, 즉 세금보다 그 운영의 자율성이 높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의회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되고, 그 사용에 있어서 의회의 감시를 받게 된다. 반면에 원조는 배분과 사용에서 수원국 국내에서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북한사회와 같이 폐쇄적인 사회처럼 모니터링이 어려운 사회에서 원조물자의 전용은 더욱 더 용이하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대북원조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기도 쉽지 않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보여주는 특정지역만을 선별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원조 수취와 배분에 대한 권한과 모니터링의 어려움은 정치적 렌트를 정치권력이 전용하는 체제적 부패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해외로부터 유입된 원조의 전용문제는 북한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도 그 사례가 소개되고 있을 정도이다.

“시인민보안서 예심원 김충성은 국가재산훔친 죄로 체포된 피심자 최

²³³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2009);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2009).

송일을 예심과정 그가 지난 5년간 운전수로 일하면서 12차에 걸쳐 수입물자들과 국제기구에서 보낸 물자 100만 원 분과 식료수매사업소 재정회계실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된 현금 4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인진술과 수집된 증거물에 의하여 밝혀냈다(정황 86).”

“상업관리소 소장 한춘선은 국제기구에서 구제물자로 들어온 기름 1.5톤과 타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할 각종 식료품 1.8톤을 개별적 사람들에게 팔거나 휘발유와 바꾸어 기업관리에 소비하였다(정황 180).”

하지만 이 책에 나온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원조가 인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조물자의 배분에 관련된 관료들의 사익추구 현상은 매우 빈번하게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익 추구방식은 해외원조 가운데 일부를 관료들이 수취한 후, 이를 시장에 유통시켜 수익(rent)을 챙긴다. 유통되는 원조물자들은 주로 쌀, 밀가루, 의약품 등이다. 이때 원조물자를 중간에서 수취하는 사람들은 원조물자 배분에 관여하는 하위 관료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원조물자 배급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교사들은 이를 중간에서 갈취하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원조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대비하여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한다.²³⁴

²³⁴ 북한이탈주민 2.

4. 북한의 정치와 경제

북한의 체제적 부패상황은 현재 북한체제의 상황을 가늠하는 주요한 바로미터이다. 북한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은 단순히 행위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수준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북한사회에서 체제적 부패는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동시에 이는 경제위기와 시장화의 확산 과정에서 관료에 대한 정당화 압력이 약해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계획과 명령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대신 시장이 관료의 지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강화

관료의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관료계급이 정당화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점을 말해준다. 계획체제 하에서 관료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이를 위해서 중공업 부문의 우선적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실제로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는 초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관료적 특권의 정당성은 투자와 성장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그런데 관료계급의 경제적 토대가 계획에서 시장으로 변화되면서 관료가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재생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시장화 과정에서 관료는 더 이상 생산과 투자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계획을 포기하고 전면적 시장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관료는 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화가 오히려 지배계급에 대한 정당화의 압력을 약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대신 관료계급은 다양한 렌트추구와 부패행위를 통해서 자기특권을 강화하고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관료계급이 계획경제에서도 특정 생산부문을 제외하고는 생산과 투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계획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권력상층부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생산부문의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관료는 외연적 렌트를 수취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기특권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의 만연은 이러한 자기특권화 경향의 주요한 징후 가운데 하나이다. 외연적 렌트는 관료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원천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다. 관료는 외연적 렌트를 수취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한다. 특히 권력상층부는 외화소득을 위해서 해외계좌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2007년 6차회담 이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anco Delta Asia: 이하 BDA) 계좌를 동결하였을 때, 북한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²³⁵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들은 회사를 설립하고 무역과 원조물자 등에 대한 국내외의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²³⁶ 관료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권력기관 산하의 무역회사들을 통해서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권력기구가 외화벌이를 통해서 권력을 보존하고 특권을 재생하려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영훈의 분할경제, 차문석의 특권경제, 박형중의 특권적 회사경제(궁정경제+특권기관의 회사경제), 홍민의 시장기생형 관료주의 등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관료적 특권이 외화벌이(외연적 렌트)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개념들이다.²³⁷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잉여추

²³⁵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수은북한경제』, 봄호(2008), pp. 19~41.

²³⁶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p. 124.

²³⁷ 이영훈,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빈곤의 늪에서의 Big Push?,” 『북한경제의 현황평가

출이 어렵게 된 상황에, 관료는 해외로부터 들여온 잉여의 수취와 배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특권을 강화하게 된다.

외연적 렌트는 지배체제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된다. 외연적 렌트의 수취로 관료는 정책적 자율성을 얻게 된다. 외연적 렌트는 국내 생산으로부터 추출된 경제잉여와 달리 생산적 투자에는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관료는 렌트를 지배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록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생산성과 경제적 효과성의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정권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외연적 렌트가 정치적 목적으로 관료에 의해서 임의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추출된 잉여가 국가예산수입의 형태로 추출되게 되면,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그 출처와 사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후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취규모와 사용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연적 렌트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도 부재하기에, 이에 대한 배분과 처분에서 관료의 자율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관료는 돈주와의 결탁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대중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한다. 관료들은 돈주들이 수요자로부터 수취한 독점 렌트를 상납받는다. 이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수탈하기 때문에, 관료들은 정당화의 압력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진다. 특히 관료는 상황에 따라서 돈주들을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탈과정에서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

및 향후전망』, The Aisa Foundation and IFES Joint International Workshop Proceedings (2008), pp. 63~64;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pp. 335~340; 박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상: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p. 125; 홍민, “북한 시장일상생활연구: 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pp. 325~326.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주와의 후견관계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북한체제는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서,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시스템을 통해서 지배질서를 공고히 해왔다.²³⁸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를 통해서 계획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공장과 기업소는 더 이상 당의 명령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인전대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 공장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방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²³⁹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적인 시장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료는 노동자들을 계획을 통해 직접 관리·통제하는 대신 돈주들과의 후견관계를 이용하여 시장을 통해서 관리하려 한다.

권력은 대중들의 시장참여를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관리한다. 물론 여전히 권력은 계획을 통해서 위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제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주요 공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한다. 또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동원을 통해서 관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5차 화폐개혁 과정에서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계획체제 내로 노동자들을 재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출근 집단’ 전부를 계획내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능력은

²³⁸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2011), pp. 235~263.

²³⁹ 북한의 『경제연구』는 노동력이 남는 이유를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력이 남고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공장가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노동력이 남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리명진, “남는 로력동원리용의 필요성,” 『경제연구』, 제1호(평양: 사회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pp. 26~28.

I
II
III
IV
V

부족하다. 자연히 대중은 처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시장 역시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의 자율성도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계획에서와 같이 위계적이지는 않지만, 돈주가 독점적인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대중은 계획에서도 시장에서도 자립하기 어려우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피동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즉 관료계급은 경제적 기반이 시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기특권화 경향이 심화되어, 결국 ‘비생산적 특권계급’이 되었다. 관료는 해외원조와 외화벌이 등으로 벌어들인 외연적 렌트를 이용하여 권력기관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다시 외연적 렌트를 벌어들인다. 뿐만 아니라 돈주와의 후견관계를 이용하여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관료의 자기특권화는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활동에 대한 감시 권한과 돈주와의 후견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관료는 시장화의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계획체제 하에서 정당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관료는 투자와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 경주하지 않는다.

나. 새로운 지배수단, 시장: 시장화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제적 부패는 관료계급이 새로운 지배수단으로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관료는 시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와 특권을 재생산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 가운데 다수는 시장화가 아래로부터 혹은 자생적으로 시

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²⁴⁰ 그러나 현재 북한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또 다시 ‘아래’는 배제되고 시장은 지배수단이 되고 있다. 체제적 부패의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변해준다. 시장화가 지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현재 북한시장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통해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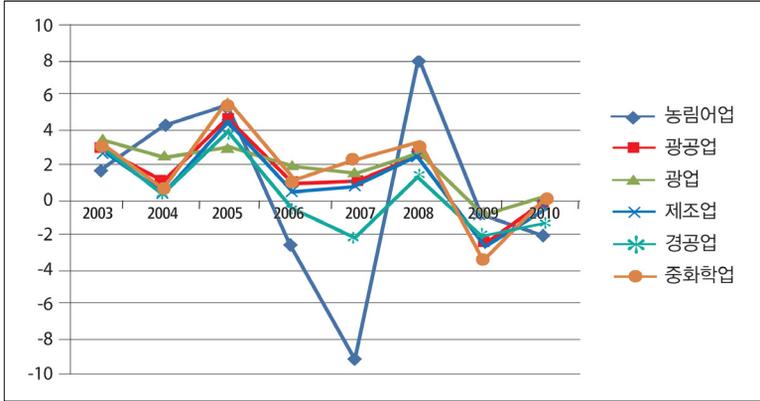
(1) 외연적 렌트에 대한 의존성

계획경제의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체계의 개혁이 부재하다. 오히려 전통적인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이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 대한 강조의 형태로 이름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특정산업 부문에 집중적인 자원동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부문의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IV-1 참조). 북한의 경제당국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다른 부문, 특히 경공업과 농업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중화학공업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성장이 지속되었다. 반면 농림어업의 경우 2008년 8%가량 성장했지만, 2007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9%였다. 경공업부문 역시 2005년 3.8%, 2008년 1.3% 성장했지만, 2006년, 2007년,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국내경제는 해외원조, 무역, 경제협력, 관광과 시설임대, 노동력 수출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²⁴⁰ 아래로부터 혹은 자생적 시장화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달: 4대 시장을 중심으로,”;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4호(2005); 정은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시장의 자생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2009).

(그림 IV-1)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출처: 한국은행, 북한 주요통계지표(2011), p. 81 재인용.

(2) 비생산적 특성

외연적 렌트는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도 오랫동안 공장가동률이 20~30%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²⁴¹ 실제로 북한의 공장 가운데 상당수의 공장들은 ‘고난의 행군기’에 완전히 가동을 멈추었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² 물론 북한의 공식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기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2009년까지 공장가동률의 변화는 크지 않다. 화학섬유 같은 경우에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5~20% 내외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화학비료는 상대적으로 공장가동률이 높게 유지

²⁴¹ 1996년 당시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은 공식적으로 공장가동률이 20~30% 수준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의 공식통계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데에 있다. 실제 공장가동률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 김영남 외교부장의 발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정영식, “빈사의 북한, 미일에 “SOS” 손짓” 『뉴스플러스』, 제66호 (1996.1.2).

²⁴² 예컨대 북한의 금성 트랙터(트랙터) 공장의 경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완전히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10~20%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용수, “공장이 돌아야 숨통 트인다,” 『중앙일보』, 2004년 5월 6일.

되어 대략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생산능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²⁴³ 대신에 계획 밖에서 일부 관료들과 돈주들이 결탁하여 생산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방식은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시장에 유통되는 재화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3) 독점적 특성

현재 북한시장화에서 ‘돈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돈주는 관료들과 결탁하여 렌트를 수취하고 있다. 돈주는 공급제한과 초과수요라는 경제적 조건을 이용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돈주는 상업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돈주는 무역과 국내시장에서 거래의 독점을 통해서 독점 렌트를 수취한다. 돈주들이 수요자로부터 수취한 독점 렌트는 뇌물의 형태로 관료들에게 상납된다. 이는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부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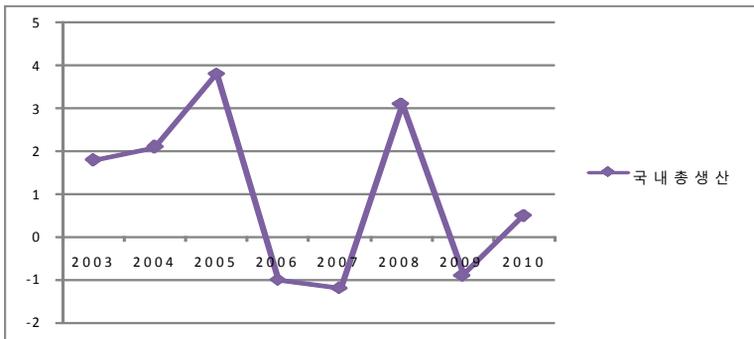
(4) 경제잉여의 정치적 투자 혹은 낭비

정치권력은 지배를 공고히 하고 특권을 재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잉여를 사용한다. 물론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 등 특정부문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이미 빈사상태에 있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격차를 더욱 더 확대시킴으로써 탈산업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경제위기의 지속과 탈산업화의 징후들은 국내총생산의 낮은 성장률로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이하 UNICEF)

²⁴³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p. 34~35.

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GDP의 성장률은 2003~2005년 사이에 그리
고 2008년에 1.8~3.8%의 성장을 하지만 2006년과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 GDP의 성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⁴⁴ 이러한 경향은
한국은행의 통계에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IV-2 참조>.

(그림 IV-2) 북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변화추이



출처: 한국은행, 북한통계시스템, p. 81 재인용.

여전히 지배권력은 ‘인민생활 향상’보다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되살리
는 목적이 우선이다. 때때로 최고지도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인민생활 향상은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특히 가시적으로 들어나지
않는 비공식적 투자를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관료들이 돈주와 결탁하
여 벌어들인 수입이나 시장거래를 통제하면서 수취한 렌트의 사용처는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원조물자의 전용과 자원수출과 외화벌이 등으로
벌어들인 외연적 렌트 역시 구체적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 이러한 렌트는
정치적 목적으로 투자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낭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²⁴⁴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gust 2010 Country Report and Earlier Issues;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March 24, 2011), p. 10 재인용.

(5) 지배와 특권의 재생산

시장은 분명 계획과 달리 탈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기 있다. 그래서 당과 국가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상인계층들은 당과 국가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한다. 권력은 계획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시장활동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승인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구성원들로부터 렌트(rent)를 수취함으로써 ‘이중의 이득’을 성취한다. 즉 북한체제에서 시장은 비생산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으로 일반화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당과 국가의 권력과 특권의 재생산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시장의 이와 같은 성격은 이윤 실현을 위해 교환을 전제로 생산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해준다. 오히려 북한의 시장은 저발전 경제, 특히 국제원조에 의존하면서 국내에는 비생산적이고 독점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렌트 수취경제(political rentier-economy)’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²⁴⁵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에서 시장은 관료계급의 ‘새로운 지배수단’이 되고 있다. 시장화는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관료계급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재생산한다. 시장은 분명 계획과 달리 탈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상인계층들은 당과 국가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일정한 자율성을

²⁴⁵ 본래 렌트수취경제(rentier-economy)는 자원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지만, 국내에서 적절한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비생산적 시장이 형성된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외연적 렌트 가운데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위치렌트를 수취한 국가들이나 해외원조와 같이 정치적 렌트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일컬어 ‘유사 렌트수취경제(semi rentier-economy)’라 부른다. Hazem Beblawi, “The Rentier State in the Arab World.” 본 연구는 북한의 경우에는 주로 정치적 렌트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렌트수취경제(political rentier-economy)’로 명명하고자 한다.

확보한다. 권력은 계획경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성취한다.

〈표 IV-1〉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성명(성별)	연령	탈북년도	출신지	직업
북한이탈주민 1(남)	51	2011	중국	방직회사 사무원
북한이탈주민 2(여)	48	2011	해산 출신, 길주 거주	대학교원
북한이탈주민 3(여)	48	2011	개성 출신, 해산 거주	교사, 장사
북한이탈주민 4(남)	58	2003	평양	전 군수동원 총국
북한이탈주민 5(남)	44	2009	평양	당간부
북한이탈주민 6(남)	47	2011	평양	내각 및 인민보안부
북한이탈주민 7(남)	40대 후반	2011	평양	내각 노동성 책임부원
북한이탈주민 8(남)	40대 초반	2010	평양	외화벌이 식당 사장
북한이탈주민 9(남)	40대 후반	2008	평양	내각 무역성 특수기관, 해외근무
북한이탈주민 10(여)	30대 초반	2010	평양	예술단원/가정교사
북한이탈주민 11(남)	60대 후반	2010	함북	호위총국 군인
북한이탈주민 12(여)	40대 후반	2006	평양	공장술준비소장-무역회사 사장(기지장)
북한이탈주민 13(남)	20대 중반	2009	평양	평양국방대학생
북한이탈주민 14(남)	30대 중반	2009	평양	내각중앙 외무성 책임부원
북한이탈주민 15(여)	30대 초반	2009	평양	대학원 졸업, 연구원(준박사)
북한이탈주민 16(남)	20대 후반	2011	평양	고등중졸, 군인
북한이탈주민 17(남)	50대 중반	2010	평양	관광연합기업소 지배인, 군부 외화벌이기지 기지장
북한이탈주민 18(남)	30대 후반	2009	평양	무역회사 지도원
북한이탈주민 19(남)	50대 초반	2007	평양, 청진	외화벌이 사업소 소장
북한이탈주민 20(여)	50대 중반	2010	해산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21(남)	20대 후반	2010	해산	교사
북한이탈주민 22(여)	20대 후반	2010	양강도	상업
북한이탈주민 23(여)	23		해산	농장원
북한이탈주민 24(여)	37		해산	장사
북한이탈주민 25(남)	36		무산	무직



V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1. 머리말

부패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간략한 정의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권력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간략하게 정의되지만, 실제로 부패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²⁴⁶ 이는 현실에서 발견되는 부패의 양태와 부패 발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사회의 거버넌스 품질에 따라 부패의 양상과 구성, 그리고 원인의 혼합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이러한 부패에 대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부패 연구의 역사는 오래지만, 이 문제가 개발원조업계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96년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가 ‘부패라는 암과의 투쟁’을 선언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IBRD는 원조의 제공에서 그리고 수원국 내부에서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부패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신고전파 경제학의 부패에 대한 주류 입장을 반영하여 IBRD와 국제사회에서 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빈곤축소를 위한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면 척결되어야 하는 악폐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거의 동일한 높은 부패 수준을 가진 국가들 중에서 어떤 나라는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침체하면서, 논쟁과 연구가 복잡해졌다.

북한과 관련하여 부패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²⁴⁷ 이 시기 북한에서 부패가 만연한 것이 발견되었고, 부패 실태에 관한 서술이 등장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부패문제는 오랜 동안 북한연구의

²⁴⁶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11).

²⁴⁷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주요 관심에서 사라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부패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실태 파악의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에 부패가 만연해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체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서 부패문제를 도외시하면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원조제공과 관련하여 IBRD가 원조 전달 및 수원국 내부 부패문제를 중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종류의 인도·개발지원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부패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장의 근본 문제 인식은 개발원조와 부패 간의 관계 그리고 부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효과가 크다. 그렇다면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는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부패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재의 선진 서방 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국면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그렇다면 장기 성장 전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 현재 만연하고 있는 부패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논리전개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2절은 IBRD가 부패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고 있는가를 서술한다. IBRD의 접근법은 국제적으로 주류적 인식과 접근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3절은 이러한 IBRD의 주류 접근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거나, 기본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언급되지 않은 측면을 지적하는 접근법을 소개한다. 4절은 앞서 소개된 논리와 접근이 북한에 과연 얼마나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 서술한다. IBRD를 비롯하여 주류적 접근의 가장 큰 단점은 북한과 다른 유형의 정치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IBRD의 접근은 이른바 선거와 야당, 그리고 입법부와 같은 명목상의 민주제도가 존재하고 얼마간 기능하는 국가, 이른바 “경쟁적 권위주의”를 대상으로 전

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 부패만연은 이를 초래한 구조적 원인이 제거될 때에야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북한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심각하게 추진한 경험이 없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세계은행의 부패인식과 반부패 정책

가. 세계은행에서 부패문제의 주요 관심사화

IBRD가 부패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사업 중점을 정책개혁으로 설정한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로부터 IBRD는 무역체계, 금융부문, 공공부문 제도의 광범한 개혁을 통해 지대-추구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질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주제가 되었고 1983년 IBRD의 공공 관리에 대한 보고서, 1989년 아프리카 장기 전망 연구와 같은 이정표적 연구, 그리고 1990년대의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IBRD의 부패문제에 관심은 1996년부터 현격히 높아졌다. 같은 해 6월 총재 월펀슨(Wolfonson)은 “부패라는 암”과 투쟁하기 위해 IBRD가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공개 선언 이래 IBRD는 오랜 동안 내부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대부 국가에서 부패 투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장려하기 추진해오던 전략을 강화했다. 반부패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IBRD가 자금을 댄 프로젝트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둘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투명하고 책임지는 정부 제도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IBRD는 부패 투쟁이 중요한 이유로 네 가지를 거론했다.²⁴⁸

²⁴⁸ The World Bank,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Progress at the World Bank Since 1997*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pp. 1~2.

첫째, 부패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다. 부패는 공공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며 민간 부문의 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부패는 모든 지원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서 개발원조에 대한 공공의 지지를 붕괴시킨다.

셋째, 부패는 발전도상국가가 민간자본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민간자본은 점점 더 투자환경에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

넷째, 수탁자로서의 IBRD는 재정 지원이 의도된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회원 국가에 대해 지고 있다.

반부패 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은행 이사회는 1997년 9월 네 가지 영역을 핵심으로 하는 반부패 전략을 승인했다. 네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²⁴⁹

첫째, 자신이 재정을 대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서 험잡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둘째, IBRD는 회원국가가 부패 억제지원을 요청할 경우 돕는다.

셋째, IBRD는 국가분석과 대출 결정에서 부패를 직접적으로 주요 관심사항화한다

넷째, IBRD는 국제적 부패 투쟁에 기여한다.

나. 체제이행 국가에서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이와 같은 IBRD의 반부패 투쟁의 전선에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새로운 대상이 등장했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이행 국가들이다. 국가와 경제가 융합되어 있던 공산주의 체제가 새로운 질서로 바뀌면서 이들 지역

²⁴⁹ *Ibid.*, p. 2.

에서 “부패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었고,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²⁵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확고한 권위주의 또는 공고한 민주주의와 비교하면, 정치적 경제적 이행과정에 있는 국가에서 부패가 한층 만연했다. 그 이유는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및 공공관리의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공적 제도가 의도된 데로 기능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주요 상황에의 통합이 취약하기 때문이었다.”²⁵¹

IBRD는 이행 국가에서 부패의 두 유형을 구분했다. 그 하나는 국가포획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부패이다. 국가포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²⁵²

국가포획은 공적 및 사적 부문에서 개인, 그룹, 또는 기업이 공무원에게 불법적이며 불투명한 사적 이득을 제공하여 법, 규제, (법적) 결정, 여타 정부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포획되는 제도의 유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또는 규제 관청을 구별할 수 있고, 포획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자 유형에 따라 민간 기업, 정치지도자 또는 협소한 이익집단을 구별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국가포획은 기본적 법적 규제 틀을 왜곡하여 협소한 개인, 기업 또는 부문을 위해 사회전반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끼치면서 국가로부터 지대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포획은 경제권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대항균형 역할을 하는 사회적 이익이 취약하고, 정치적 영향력과 이익 중재의 공식 채널이 저발전되어 있는 경우 번성한다.

²⁵⁰ World Bank,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A Contribution to the Policy Debate*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xiv 참조.

²⁵¹ Ivar Kolstad, Verena Fritz and Tam O’Neil, “Corruption, Anti-Corruption Efforts and Aid: Do Donors Have the Right Approach?” *Research Project (RP-05-GG) of the Advisory Board for Irish Aid Working Paper 3* (January 2008), iix 참조.

²⁵² World Bank,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A Contribution to the Policy Debate*, p. 16; Joel S. Hellman, Geraint Jones and Daniel Kaufmann, “‘Seize the State, Seize the Day’: State Capture, Corruption, and Influence in Transi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444*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이와 같은 국가포획은 경제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²⁵³ 국가 재부가 몇 개의 핵심 생산자산에 고도 집중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강력한 이익집단은 국가포획을 통해 이들 자산에 대한 통제를 추구한다. 이들은 또한 국가포획으로 획득된 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국가포획의 개념에 해당하는 일련의 특별 행위들은 다음을 포함했다. 즉 의회 투표, 대통령과 행정부의 결정을 사적 이익에 ‘판매’하는 것, 사적 이익에 민법 및 형사법 법정의 결정을 판매하는 것, 중앙은행 자금을 부패하게 오용하는 것, 사적 행위자가 정당에 불법 기부하는 것 등이다.

다음으로 행정부패를 보자. 국가포획은 법과 규제의 제정과정에 개입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부패는 법과 규제를 실행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된다. 행정부패는 공무원에게 불법적 그리고 불투명한 사적 이득을 제공하여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기존하는 법, 규칙, 규제를 처방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지칭한다.²⁵⁴ 행정부패의 고전적 사례²⁵⁵는 불운한 상점 주인이 기존하는 규제의 사소한(또는 중요할 수도 있는) 위반을 묵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보이는 조사원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강탈 이외에도, 행정부패는 인허가 획득, 관세 절치 유연화, 공공구매 계약 획득, 또는 여타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기 등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름칠용 뇌물”과 관련된 잘 알려진 사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공무원은 자신이 통제하는 공적 기금을 오용하거나 자신의 가족에 직접적 재정 이득을 주는 식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부패형태의 근저에는

²⁵³ World Bank,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A Contribution to the Policy Debate*, p. 20.

²⁵⁴ *Ibid.*, p. 17.

²⁵⁵ *Ibid.*

공무원의 재량권이 존재하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예외를 부여하고, 공공 서비스 배달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는 규칙과 규제의 적용에서 차별을 둘 수 있는 등의 재량권이다.

다. 반부패 조치

반부패 조치의 표준 처방은 전통적으로 공공행정과 공공재정 관리를 통해 행정부패를 감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국가포획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패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단순한 행정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반부패 정책은 점차로 정치체제의 내부 조직, 핵심 국가기구간의 관계, 국가와 기업의 상호작용,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한 구조 관계를 목표로 확대되었다.²⁵⁶ 이를 반영하여 체제이행 국가에서 IBRD의 반부패 정책은 여섯 가지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였다. 첫째, 정치적 책임성의 증가, 둘째, 국가내부에서 제도적 제한을 강화, 셋째, 시민사회 참여의 강화, 넷째, 독립 대중 매체의 양성, 다섯째,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 창출, 여섯째, 공공부문 관리의 개혁이다. 각 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⁵⁷

(1) 정치적 책임성의 증가

정치적 책임성은 정치가와 공무원의 행위에 가해지는 제한들을 지칭한다. 두 개의 핵심 수단은 재산 공개를 포함하여 공무원 결정의 투명성 증가 그리고 대중기반 정당처럼 광범한 선출집단 입각한 조직들 간에 경쟁의 증가이다.

²⁵⁶ *Ibid.*, p. 22.

²⁵⁷ *Ibid.*, pp. 22~23.

(2) 국가 내부에서 제도적 제한을 강화

국가 단위 간에 권력 분립을 효과적으로 만들면, 각 국가 단위는 다른 단위가 권력을 오용하는 것을 제어한다. 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고양하고 기능과 예산 및 역량을 상호 일치시키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자면, 의회는 공적 회계와 감사 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정부 문서를 공개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신뢰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시민사회 참여의 강화

거버넌스 품질의 이해상관자로서, 주민과 국가 제도간의 의사소통 중재자로서,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조직들은 부패를 제어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4) 독립 대중매체를 양성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중매체는 오용을 발굴하고 들추어냄으로써 부패 수준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 창출

강력한 경제 이익이 국가를 포획할 능력을 견제하자면, 이러한 기업이 국가포획으로부터 누리는 이익을 줄여야 한다. 이는 가격 및 무역 자유화, 기업의 소유구조와 작동에서 투명성 증가, 진입 장벽을 낮추어 집중된 부문에서 경쟁 증가, 경쟁이 가능하도록 산업 재편 요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6) 공공부문 관리의 개혁

외부적 책임성 장치를 강화시키는 것과 함께 공공 자원의 내부 관리와 행정을 강화시켜 부패의 기회와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라. 거버넌스와 반부패

이상과 같이 전개되어 오던 IBRD의 반부패 정책 개념은 거버넌스 개념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발전했다. 먼저 거버넌스와 부패의 상호 관련을 보면, 이렇다. IBRD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공무원과 공적 제도가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위를 획득하고 행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부패는 나쁜 거버넌스의 결과 중의 하나으로써, 공적 직위를 사적 이득을 위해 오용하는 것을 포함한다.”²⁵⁸

IBRD는 거버넌스와 반부패에 관여하는 주요 목적은 빈곤축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⁵⁹

부패와 취약한 거버넌스는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을 탈출하는 기회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부패한 엘리트들 치부에 사용된다는 것을 종종 의미한다. 투명성과 책임성 장치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는 종종 주변화되거나 발전성과가 좋지 않다. 어떤 경우에 극도로 나쁜 거버넌스와 부패는 재정적 경제적 붕괴, 공적인 것의 회피, 또는 폭력과 실패 국가에 기여했고 빈곤층에게 재앙적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부패를 축소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탈출하는 것을 돕는데, 그리고 국가들이 새천년개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하다.

²⁵⁸ World Bank, *Strengthening World Bank Group Engagement on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March 21, 2007), p. 2.

²⁵⁹ *Ibid.*

IBRD는 거버넌스와 반부패의 목표를 능력 있고 책임성 있는 국가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²⁶⁰

이러한 국가 제도는 건전한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통치하는 규칙을 제정하며, 부패를 투쟁하며, 그리하여 빈곤 축소를 돕는다. 국가 그리고 사적 및 재정 부분과 같은 여타 핵심 이해상관자의 행위는 거버넌스의 품질을 형성하고 발전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과도한 규제는 사업 비용을 높이며, 종종 부패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대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과도한 규제 부담을 축소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개혁은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직장을 더 많이 만들어 내며, 공공 서비스를 개선한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혁과 반부패는 빈곤한 자에 봉사한다는 IBRD 그룹의 주요 임무를 돕는 데서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입장에 서서, IBRD는 2007년 'IBRD 그룹의 거버넌스 및 반부패 관여를 강화시키기 위한 지도 원칙'을 제정했다. 이를 보면,²⁶¹

- ① IBRD 그룹이 거버넌스와 반부패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그 임무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 성과를 개선한다.
- ② 해당 국가는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일차적 책임을 진다. 해당 국가의 자원성(ownership)과 지도력은 반부패 전략 이행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며, IBRD 그룹은 해당 국가가 정한 우선순위를 지원할 것이다. 해당 국가의 정부는 IBRD 그룹의 주요 상대방이다.

²⁶⁰ *Ibid*.

²⁶¹ *Ibid*.

- ③ IBRD 그룹은 거버넌스가 나쁜 국가에서도 빈곤과의 투쟁을 계속 할 것이며, 창의적 지원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모색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두 번 비용을 지불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다.
- ④ IBRD 그룹이 거버넌스와 반부패에 관여하는 형태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다. ‘모두에게 한 가지 처방’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IBRD 그룹은 업무 결정을 하는 데서 국가를 망라하여 일관된 접근을 채택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 전략에 체계적으로 기반할 것이고, IBRD 그룹의 국가원조전략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IDA) 국가를 위한 실적 기반 배분 체계 또는 IBRD 자원 배분 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 ⑤ 정부, 사업체, 시민사회 이해상관자와 광범하게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거버넌스 및 반부패 개혁과 발전성과에 핵심이다. 따라서 그 임무와 일치하게, IBRD 그룹은 그 업무에서 다양한 이해상관자와의 관여함에 있어서 기존하는 모범 업무 방식을 확대할 것이다. 여기에는 은행 자체의 업무에서 투명성, 참여, 제3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 ⑥ IBRD 그룹은 해당 국가 체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해당 국가의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거버넌스와 부패 도전에 대한 그리고 은행이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적 자금에 대한 정직성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 해결책이다.
- ⑦ IBRD 그룹은 원조제공자, 국제기관, 해당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여타 행위자와 협력하여 해당 (주체의) 임무와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조화로운 접근과 조정을 보장할 것이다. IBRD 그룹이 고립되어 행위하면 안 된다.

I
II
III
IV
V

3. 세계은행 반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IBRD의 반부패 전략의 기본 목표는 반부패 투쟁과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빈곤축소형 경제성장을 성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일련의 연구가로부터 도전을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한데, 부패 수준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지속적 고도성장이 발생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부패만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고속성장을 이룬 나라로서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보다 최근에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이른바 ‘발전국가’ 또는 ‘개발독재’ 국가들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부패가 반드시 경제성장에 해로운 것인가 또는 부패는 일반적으로 해롭지만 어떤 부패는 더 해롭고, 어떤 부패는 덜 해롭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가들이 던진 질문에는 양질의 거버넌스와 경제성장 간의 선 후차 관계에 관한 것도 있다. IBRD의 양질의 거버넌스와 반부패 투쟁의 기본 개념은 반부패 투쟁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양질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에서 보았을 때, 양질의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성취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성장이 빠른 국가와 지체된 국가의 경우 부패와 거버넌스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의 경험을 보면, 양질의 거버넌스는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이룩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양질의 거버넌스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서는 한국·대만·인도네시아같이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양질의 거버넌스가 점차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부패만연의 원인, 부패 척결의 속도와 방법 등에서 IBRD와 다른 평가를 제시한다. 이러한 논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슈타크 칸(Mushtaq H. Kahn)과 앤드루 웨드만(Andrew Wedeman)이다.

가. 칸의 개발도상국 부패만연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논리

칸은 부패에 관한 IBRD 등의 주류 학계의 분석과 처방의 기초가 되는 신고전파 분석은 주로 해로운 부패에만 주목한다고 한다. 신고전파에서 말하는 부패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라고 한다.²⁶² 그런데 신고전파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 개입이 경제에 이로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국가의 경제 개입은 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르며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또한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제한하여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문제에 대한 주류 접근은 부패가 공무원의 탐욕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²⁶³ 즉 공무원은 재량권을 통해 시민에게 이득을 줄 수도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재량이 적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가 가능해진다. 관료나 정치가가 선택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재량,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고, 탄로 또는 징벌의 위험이 낮은 경우, 이들은 치부하기 위해 부패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발상에 서면, 반부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 표준 처방을

²⁶² Mushtaq H. Khan,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imits of Conventional Economic Analysis," Susan Rose-Ackerman (ed.),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Corruption* (Cheltenham: Edward Elgar, 2006), p. 5.

²⁶³ Mushtaq H. Khan,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Reforms in Developing Countries: Policies, Evidence and Ways Forward," *UNCTAD G-24 Discussion Paper Series*, No. 43, November 2006, p. 12.

기준으로 하게 된다.²⁶⁴ 즉 ① 자유화와 민영화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한다. ② 공무원의 봉급을 개선하며,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 공무원의 생활수준이 낮은 것을 시정하며, 그러나 동시에 탄로 나는 경우에 직위를 잃도록 함으로써 부패의 기회비용도 높인다. ③ 민주화, 분권화의 심화, 그리고 시민사회 감시기구의 창출과 격려를 통해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와는 달리 칸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 중에서 일련의 간섭은 경제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경제간섭이 설령 부패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면, 부패로 인한 해로움 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이로움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²⁶⁵

이러한 경제에 이로운 국가간섭에는 유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 까지 수입 억제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것, 새로운 경영기법과 선진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특혜를 주는 것, 성장 촉발 산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 등등이다. 국가가 이러한 간섭을 통해 특정 산업이나 기업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틀림없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이 그 집행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될 소지, 즉 부패의 소지는 충분히 있고, 실제로도 부패과정을 통해 이러한 국가개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개입에 의해 경제성장이 지속할 수 있다면, 그 해로움보다는 이로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름 아니라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와 같은 발전국가들에서 이러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졌고, 때문에 이들 국가는 부패와 거버넌스 수준이 다른 저성장 국가와 대략 동일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칸은 이와 같은 논리에서 ‘시장-축성 거버넌스’와 ‘성장-축성 거버넌스’

²⁶⁴ *Ibid*.

²⁶⁵ Mushtaq H. Khan,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imits of Conventional Economic Analysis,” pp. 8~10.

를 구별한다.²⁶⁶ IBRD 등이 추구하고 있는 반부패 및 양질의 거버넌스 전략은 ‘시장-촉성 거버넌스’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전략은 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부패와 지대 창출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주목한다. 이에 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측면의 거버넌스의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성장-촉진 거버넌스’이다. 성장-촉진 거버넌스 구축의 중점 분야가 어떤 것인가는 과거 지속적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개발도상국가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지만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적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또한 IBRD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바의 반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 개혁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하지만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할 발전도상국가의 여러 구조적 현실 때문에 반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실현되며 또한 의미 있는 경제성장 촉진제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와 전면적으로 투쟁하며,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경제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은 발전도상국의 현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부패와의 전면적 투쟁과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은 상당히 먼 미래에야 실현될 장기 목표로 간주해야 한다. 그 대신에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중간 목표로,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성장 촉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저발전국가에서 부패만연은 일반적으로 나타는가? 또 어떠한 이유에서 부패를 전면적으로 척결하며, 양질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과업이 되는가? 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부패

²⁶⁶ Mushtaq H. Khan, “Building Growth-Promoting Governance Capabilities,”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9: The State and Development Governance, Background Paper No. 2*(April 2008).

I
II
III
IV
V

가 만연한 것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공무원이 국가의 경제 개입에 편승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다. 칸은 개발도상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구조적 요소를 지적함으로써, 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으며, 왜 양질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가를 설명한다. 그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란, 첫째, 저발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이다. 둘째, 개발도상국 경제는 선-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데, 이 이행과정의 특성이 부패의 만연을 촉진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정치안정의 필요성을 보자.²⁶⁷ 어떤 국가에서든지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 발전된 국가의 경우에는 대규모 생산조직이 조세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소득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징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가는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 조직에 대해 일련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소득이전과 공공서비스를 배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의 대부분은 국민소득 규모가 작아 조세징수가 소규모일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의 경제활동이 조세체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비공식 부문에 존재한다. 가장 가난한 국가의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에도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 및 사회 안정을 뒷받침할 재분배에 필요한 재정은 조세소득을 통해 거의 마련되지 않는다. 공식적이고 투명한 재분배 대신에 가장 위험스러운 정치세력에 대해 후견-피후견 관계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예산외부 자원을 통해 불투명한 방법으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진다. 예산외부 자원은 대체로 그 개념 정의상 부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다. 이러한 뜻에서 일련의 국가에서 공적 기관이나 관료들에 대해 공식적인 월급을 주는 대신, 불투명한 방법을 통한 특권 부여나 묵시적 부패 허가를 허용함으

²⁶⁷ Mushtaq H. Khan,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imits of Conventional Economic Analysis," p. 14.

로써, 국가 체계를 유지한다.²⁶⁸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의 이행경제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이다.²⁶⁹ 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종의 마르크스가 봉건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발견했던 ‘원시축적’이 발생하고 있다. ‘원시 축적’이란 비자발적 비시장적 재산권의 이전이다.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개발도상국에서 토지와 자연자원은 전통 집단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데, 이들의 생산성은 매우 낮다. 그 결과 자산 소유자 집단은 조세 체계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잉여를 생산해내지 못한다. 안정된 재산권이 갖추어지려면 법, 법원, 및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상당한 공공하부구조가 필요한데 이에는 비용이 들고 상당한 투자가 필요로 한다. 개발도상국은 이를 갖출 만한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공무원에 의한 약탈적 절도와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²⁷⁰ 재산권이 선명하게 정의되고 또한 분명하게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자산은 힘 있는 자로부터의 몰수당하더라도 방어 능력이 취약하다. 또한 재산권이 불분명하게 개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효율적 사용자가 현재의 비효율적 소유권자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같은 시장거래의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합법적 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낮아지며, 이 때문에 많은 자산이 공무원의 약탈적 절도나 부패와 같은 비시장기구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한다. 개발도상국에서 강력한 그룹은 취약하게 보호된 재산을 정치권력을 사용하여

²⁶⁸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12); Joshua Charap and Christian Harm, "Institutionalized Corruption and the Kleptocratic State," *Africa Department, Working Paper* (July 1999).

²⁶⁹ Mushtaq H. Khan,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imits of Conventional Economic Analysis," pp. 19~20.

²⁷⁰ *Ibid.*, pp. 22~23.

I
II
III
IV
V

포획하는 투쟁에 몰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논리를 종합하면, 개발도상국에서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공무원이 국가의 경제 개입에 편승하여 사적 이득을 올리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보다 훨씬 구조적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만연하는 부패는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소멸하기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 원인은 경제의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져,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때에야 소멸할 수 있다.

나. 웨드만의 부패유형의 구별

칸이 덜 해로운 부패와 더 해로운 부패를 구별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웨드만은 ‘발전적 부패(developmental corruption)’와 ‘퇴행적 부패(degenerative corruption)’를 구별한다.

발전적 부패는 한국·대만·일본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전국가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발생했던 부패유형이다.²⁷¹ 발전적 부패에서는 재계와 정치권력이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재계는 보수 친재계 정치지도자들이 안정된 정치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자원(대부분 자금)을 제공한다. 정치지도자는 재계로부터의 자금을 분배하여 분열되어 적대하고 있는 우파를 결집시킨다. 이를 통해 안정된 집권 우파는 친재계, 친성장 거시정책을 취한다. 재계에 유리한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정계에 정치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계와 재계는 경제성장에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 정치지도자는 정부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정부 계약 등에서 재계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재계는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으며, 또한 정치권

²⁷¹ Andrew Wedeman, *Double Paradox: Rapid Growth and Rising Corruption in Chin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pp. 17~18.

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정계와 재계의 부패적 공생 속에서 경제성장이 지속된다.

발전적 부패가 정계와 재계 간의 상호거래적 부패인 데 비해, 퇴행적 부패는 국가관료가 공적 및 사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부패 관료에게 이전한다. 이러한 약탈은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며 고도의 불안을 발생시킨다.²⁷² 약탈적 통치자는 하급자들에게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위계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하급자들을 약탈 위계 속에 복속시킨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일수록 정치핵심부에 의해 독점화된다. 상층에서 약탈은 체계적이고 비교적 조직화되어 있는 데 비해, 하층에서는 훨씬 무정부적인 약탈이 발생한다. 최상층은 국가 재산을 도둑질하지만, 중하층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중간층 관료는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지만, 하층 관료, 경찰, 군인은 닥치는 대로 약탈한다. 절제되지 않으면 이러한 퇴행적 부패는 경제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4.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현실적으로 북한과 같이 폐쇄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 IBRD 등 국제원조 기구 또는 여타 외부자가 반부패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반부패이론과 정책은 해당 국가에 그 실효성이야 어떻든 정당과 시민단체, 삼권분립, 대중 언론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상대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 같은 경우는 부패만연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장치로 사실상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부적으로 부패에 관한 심각한 인식과 투쟁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경제성장과 시장확대가 증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²⁷² *Ibid.*, pp. 52~57.

가. IBRD의 반부패 전략

IBRD의 반부패 전략의 기본 대상은 북한과는 성격이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IBRD의 반부패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IBRD의 부패 실태에 대한 분석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개념과 내용은 해당 국가 내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형식적이거나 민주적 제도가 존재하며 일정하게 기능하는 국가에 타당하다. 이러한 국가는 비교정치학에서 ‘경쟁적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개념화되고 있다.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웨이(Lucan A. Way)에 따르면 경쟁적 권위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²⁷³ 즉 경쟁적 권위주의 정권은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가 광범하게 권력획득의 주요 수단이라 간주되지만, 부정한 수단, 시민자유 침해, 국가와 미디어 자원의 오용이 행위조건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정권을 민주정권이라 할 수 없는 경우를 칭한다. 이러한 정권은 경쟁적이다. 민주적 제도가 단순한 걸치장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제도를 활용하는 야당은 현존 권력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은 권위주의적이다. 야당세력이 매우 불균등한 그리고 때때로 위협스럽게 왜곡된 활동 조건에 때문에 불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은 실제로 존재하나 불공정하다.

IBRD가 부패 실태를 분석하는 핵심 개념인 ‘국가포획’과 ‘행정적 부패’는 이와 같이 형식적이거나 정당과 각종 사회적 (압력) 단체, 그리고 입법부와 여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야 성립 가능한 개념이다. 또한 부패 축소를 위한 IBRD의 처방도 해당 국가의 정권의 특징이 ‘경쟁적 권위주의’를 보여줄 때에야 최소한 적용이라도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처방은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정당 등의 활성화

²⁷³ Steven Levitsky and 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The Origins and Dynamics of Hybrid Regimes in the Post-Cold War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4.

화를 통한 ‘정치적 책임성의 증가,’ 둘째, 사법부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한 ‘국가 내부에서의 제도적 제한을 강화,’ 셋째, ‘시민사회 정치 참여 강화,’ 넷째, ‘독립 대중매체를 양성,’ 다섯째,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의 창출,’ 여섯째, ‘공공부문 관리의 개혁’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극도의 개인독재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일당지배로서 야당은 존재하지 않고, 사법부는 조선노동당에 종속되어 있고, 시민사회, 독립 대중매체,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관리 개혁 시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IBRD식의 반부패 전략은 북한에는 적어도 현재 체제를 대상으로 해서는 원초적으로 적용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 부패 척결 의지의 부재

1990년대 이래 북한에서의 부패만연은 대부분의 체제이행 국가에서 부패가 만연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부패가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등장한 적이 없다.

부패만연의 배경을 보면 이렇다. 1980년대 말까지는 특히 모든 관료 기구와 개인생활에 대한 당기구의 침투와 감시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이러한 당기구의 침투와 감시가 상당히 이완되었고, 국가예산의 지원이 감소되자 당-국가의 주요 기관 및 간부는 부패라고 개념 지을 수 있는 각종 활동을 통해 기관 운영 예산과 간부 월급을 벌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여전히 모든 개인은 형식상 국가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형식논리로 보면, 모든 개인이 부패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I

II

III

IV

V

물론 북한에서도 부패문제가 거론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정치적 보복 또는 사회와 국가의 기강잡기를 위한 본보기 처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는 부패라는 단어 자체가 그다지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주기적으로 대대적으로 반부패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정치안정 및 정권 정당성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 중국과도 비교된다. 북한에서는 주요 간부를 숙청하는 명분은 부정축재, 비리 등을 빌미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초반 이래 각종 단위 및 지방차원에서 ‘비사회주의 검열’을 실시하곤 했었다. ‘비사회주의 검열’은 그 공격 대상 범위가 매우 광범하여, 각종 간부의 부패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마약, 외부영상품, 도강, 일반 범죄 등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스스로 반부패 의지가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외부자가 여러 수단을 통해 내부 제도 개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 북한 부패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필요

앞서 서술했던 칸과 웨드만의 부패이론에서 시사되는 것처럼 부패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무원의 개인적 탐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구조적 원인이 변화하지 않는 한, 부패는 당분간 완전히 철폐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부패는 일반적으로 해롭지만, 덜 해로운 부패와 더욱 해로운 부패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웨드만은 발전적 부패와 퇴행적 부패를 구별했음을 앞서 서술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찰해 볼 때, 북한에서의 부패도 구조적이며, 이 구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영속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패의 구조적 원인은 두 가지로 지적되었는데, 그 하나는 부패를 통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행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재산권의 불안 때문에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다시 말해 권력자의 부패와 약탈을 통해 재산권 이전이 발생한다.

북한의 부패는 퇴행적 부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는 경제성장에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정계·재계 공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는 1990년대 이래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의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기관 운영자금과 관료 봉급을 줄 능력이 없는 북한 정권은 부패 권한의 분배와 부패 실태의 묵인을 통해 기관과 관료의 충성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특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정치적 권력, 공적 권한과 자산을 활용 또는 남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되어 있고, 간부 개인들 역시 주어진 공적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봉급을 벌고 있다. 이처럼 부패를 통해 획득된 자금과 자산은 최상층에서는 충성층의 사치적 소비, 기념비적 건축물 건설 등 각종 정치성 소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중하급자의 경우는 자신의 봉급을 마련하고 자금이 남더라도 공식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투자하더라도 정치적 박해나 약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경우는 만연한 부패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한편, 만연한 부패 때문에 경제침체가 영속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퇴행적 부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행적 부패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과 생존구조에 불가결한 일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퇴치되지 못하고 존속할 것이다.

라. 북한의 부패 감축과 정권 생존의 갈등

이상의 서술에서 볼 때, 북한 내부에서 정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퇴행적 부패는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외부자가 여러 수단을 통해 내부 제도 개혁에 미칠 수 있는

I

II

III

IV

V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제 원조 기구의 오랜 경험은 내부 개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외부 개입자의 여러 정책 수단이 대체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빈곤국가 제도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제도에 대한 또는 제도 개혁에 대한 국내적 요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외생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이에겐 두 가지 원천이 있다. 첫째, 외부원조 기관, 원조 제공자 또는 대부자가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대부에 부여하는 여러 조건들이다. 조건부여가 엄격하여 적용된다고 해도 이 때문에 심각한 개혁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일정한 정치권력 구조에 집착하는 것은 빈곤국가 지도자에게 생사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여국 공동체로부터 외부적 공공재 자금은 그 수량이 매우 크다고 할지라도 실제 개혁이 수반할 권력과 위신의 상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다.²⁷⁴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IBRD 등 서방 측이 제시하는 반부패 개혁 정책은 북한 정권의 차원에서 보면 정치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들이다. 반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를 수립하자면, 시장개입의 축소, 독점 촉진 법령과 규제의 해체, 여타 지대창출 특권의 폐지, 재산권 안전보장, 공공재의 효과적 제공,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북한 정권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적어도 앞서 설명한 바 있는 ‘경쟁적 권위주의’ 상태로 변화한 뒤에야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²⁷⁴ Francis Fukuyama,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36~37.

마. 북한 부패 감소를 위한 장기 시야

북한은 정권 생존과 퇴행적 부패가 상호연계되어 있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려면, 정치변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변혁도 당분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부패 감소의 가능성은 현 정권이 빠져있는 악순환의 해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 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가장 해로운 약탈적 부패를 완화하는 데 스스로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도 높지 않다면, 북한에서 시장 확대의 부수 효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적 자본 축적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직접적으로 약탈하는 업무와 관련된 당정 간부가 되는 것보다는 사업가가 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증가할 것이며, 인적 재능 분배가 이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²⁷⁵ 이와 같은 방향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중국에서처럼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추가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대두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 정권 존속의 시활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낙관적 시나리오이다.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시점이 미래의 언젠가에 등장해야 부패문제 그리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정치적 과제로 대두할 수 있을 것이다.

²⁷⁵ Kevin M. Murphy,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The Allocation of Talent: Implications for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2 (1991), pp. 503~530.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용운. 『카오스의 날갯짓』. 서울: 김영사, 1999.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냄, 2004.
-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오오츠키 히사오(大塚久雄), 송주인 역.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서울: 한빛, 1981.
- 이국영.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 서울: 도서출판 양림, 2005.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ARNSTBERG, KARL-OLOV & THOMAS BORÉN.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 SÖDERTÖRN ACADEMIC STUDIES, 2003.

Barbu, Zevedei. *Democracy and Dictatorship: Their Psychology and Patterns of Life*. New York: Routledge, 1998.

Brenner, Robert, 이영석 역. “전산업시대 유럽 농업 부문의 계급구조와 경제 발전.” 『신자본주의 이행논쟁』. 서울: 한겨레, 1985.

Bueno de Mesquita, Bruce and Alastair Smith.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12.

Chavance, Bernar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Westview Press, 1994.

Damus, Renate. *Der reale Sozialismus als Herrschaftssystem am Beispiel der DDR*. Giessen: Focus-Verlag, 1978.

- Dobb, Maurice and Paul Sweezy, 김대환 편역. 『자본주의 이행논쟁』. 서울: 동녘, 1985.
- Elsenhans, Hartmut. *State, Class and Development*. Radiant Publishers, 1996.
- Eyal, Gil, Ivan Szelenyi, and Eleanor Townsley. *Making Capitalism Without Capitalists: Class Formation and Elites Struggles in Post-Communist Central Europe*. London: VERSO, 1998.
- Fukuyama, Francis.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 Gaddis, John Lewis, 강규형 옮김. 『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2004.
- Jantsch, Erich. *The Self-Organizing Universe: Scientific and Human Implications of the Emerging Paradigm of Evolution*. Pergamon Press, 1980.
- Kolodko, Grzegorz W. *From Shock to Therapy: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Levitsky, Steven and 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The Origins and Dynamics of Hybrid Regimes in the Post-Cold War E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Linz, Juan J.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 Miller, John H. and Scott E. Page. *Complex Adaptive Systems: An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Models of Social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Parke, David and Ralph D. Stacey. *Chaos, Management and Economics: The Implications of Non-Linear Thinking*.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94.
- Rigby, T. H. and Ferenc Fehér. *Political Legitimation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 Scott, James C.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72.
- Wintrobe, Ronald.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World Bank.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A Contribution to the Policy Debate*.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 _____.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Progress at the World Bank Since 1997*.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 _____. *Strengthening World Bank Group Engagement on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March 21, 2007.
- Wedeman, Andrew. *Double Paradox: Rapid Growth and Rising Corruption in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2. 논문

-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시스템의 변화와 외화의존도의 증대.” 『수은북한경제』. 봄호, 2008.
-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법학』. 제46권 1호(서울대학교), 2005.
- 김우식. “사회연결망이 뇌물의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제16권 2호(한국부패학회), 2011.
- 김종욱. “북한의 관료 부패 실태와 개혁·개방의 상관관계.” 『통일부 연구보고서』, 2007.
- 박영자. “2000년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민족의식.” 『정책연구』. 제171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 _____.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한국정치연구』. 제19권 3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 _____.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한국정치학회), 2009.

- _____.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Post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통일연구원), 2009.
-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통일연구원), 2011.
- _____.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 2009.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달: 4대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 2010.
- _____.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양문수 엮음.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 _____.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4권 2호, 2011.
- _____. “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 2011.
- _____.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병’.”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11.
- 이영훈.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빈곤의 늪에서의 Big Push?.” 『북한경제의 현황평가 및 향후전망』. The Aisa Foundation and IFES Joint International Workshop Proceedings, 2008.
- _____.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4호, 2005.
-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정은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시장의 자생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 2009.
-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 2009.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홍민. “북한 시장일상생활연구: 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 리명진. “남는 로력동원리용의 필요성.” 『경제연구』.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2009.
- Beblawi, Hazem. “The Rentier State in the Arab World.” Hazem Beblawi and Giacomo Luciani (eds.). *The Rentier State*. New York: Croom Helm, 1987.
- Buchanan, James. “Rent-Seeking and Profit-Seeking.” Gordon Tullock, Robert D. Tollison and James Buchanan (eds.). *Toward a Theory of Rent 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 Charap, Joshua and Christian Harm. “Institutionalized Corruption and the Kleptocratic State.” *Africa Department, Working Paper*. July 1999.
- Cullen, Bradley T. and Michael Pretes. “The Meaning of Marginality: Interpretation and Perceptions in Social Science.”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37, No. 2, 2000.
- Emirbayer, Mustafa and Jeff Goodwin. “Network Analysis, Culture, and the Problem of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9, No. 6, 1994.
- Hellman, Joel S., Geraint Jones and Daniel Kaufmann. ““Seize the State, Seize the Day”: State Capture, Corruption, and Influence in Transi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444*. Washington D.C.: World Bank, 2000.
- Khan, Feisal. “Understanding the Spread of Systemic Corruption in the Third World.” *American Review of Political Economy*, December 2008.

- Khan, Mushtaq H. "Building Growth-Promoting Governance Capabilities."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9: The State and Development Governance, Background Paper*. No. 2, April 2008.
- _____.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Reforms in Developing Countries: Policies, Evidence and Ways Forward." *UNCTAD G-24 Discussion Paper Series*. No. 43, November 2006.
- _____.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imits of Conventional Economic Analysis." Susan Rose-Ackerman (ed.).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Corruption*. Cheltenham: Edward Elgar, 2006.
- _____. "Rents, Efficiency and Growth." Mustaque H. Khan and Kwame Sundaram Jomo (eds.). *Rents, Rent-See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Evidence in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The Efficiency Implication of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8, No. 5, 1996.
- Kolstad, Ivar, Verena Fritz and Tam O'Neil. "Corruption, Anti-Corruption Efforts and Aid: Do Donors Have the Right Approach?." *Research Project (RP-05-GG) of the Advisory Board for Irish Aid Working Paper 3*, January 2008.
- Murphy, Kevin M.,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The Allocation of Talent: Implications for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2, 1991.
- Park, Young-Ja. "Evolutionary Peculiarity between 'the Market System and the Dictatorship' in North Korea." 한국정치학회 2012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2012.8.31.
- Qian, Yingyi. "The Theory of Shortage in Socialist based on the "Soft

- Budget Constrain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1, 1994.
- Qian, Yingyi and Chenggang Xu. “Innovation and Bureaucracy under Soft and Hard Budget Constraint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5, No.1, January 1998.
- Richter, Thoma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me Maintenance in Egypt: Linking External Resources and Domestic Legitimation.” Oliver Schlumberger (ed.). *Debating Arab Authoritarian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 Roland, Gerard and Ariane Szafarz. “The Ratchet Effect and the Planner’s Expectation.” *European Economics Review*. Vol 34, Issue 5, July 1990.
- Sapio, Flora. “Rent Seeking, Corruption, and Clientelism.” Tak-Wing Ngo and Yongping Wu (eds.). *Rent Seeking in China*. New York: Routledge, 2009.
- Schlumberger, Oliver. “Structural Reform, Economic Order and Development: Patrimonial Capit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5, No. 4, October 2008.
- Stefes, Christoph H. “Governance, the State, and Systemic Corruption: Armenia and Georgia in Comparison.”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 No. 2, Spring 2008.
- Tollison, Robert. “Rent-Seeking: A Survey.” *Kyklos*. Vol. 35, No. 4, 1982.
- Wallis, John Joseph. “The Concept of Systematic Corruption in American Histor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rch 2006.
- Wank, David L. “Bureaucratic Patronage and Private Business: Changing Networks of Power in Urban China.” Andrew G.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Change in China and Hung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_____. “Private Business, Bureaucracy, and Political Alliance in a Chinese City.”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3, January 1995.

3. 기타자료

『국민일보』.

『뉴스플러스』.

『동아일보』.

『로동신문』.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열린북한방송』.

『이데일리』.

『중앙일보』.

『DailyNK』.

『KBS 남북의 창』.

『MBC』.

『NK지식인연대』. <[http://www.nkis.kr/board.php?board=kkknewsmain
&command=body&no=348](http://www.nkis.kr/board.php?board=kkknewsmain&command=body&no=348)>.

세계식량계획(WFP). 국제 식량원조 정보시스템(INTERFAIS) 데이터베이스
<<http://www.wfp.org>>.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각 해 년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해 년도.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중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웅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중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중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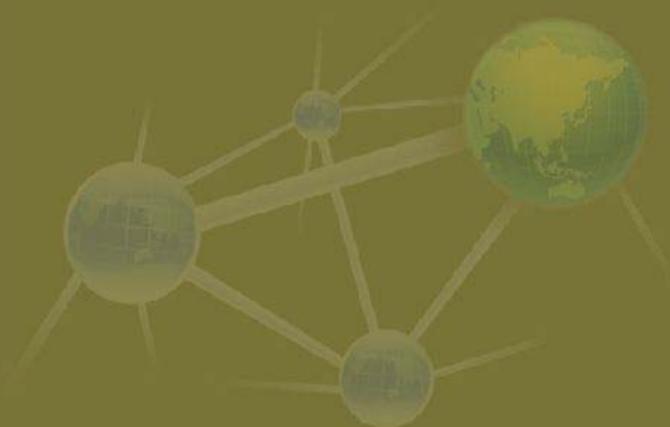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1-02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KINU 통일연구원

www.kinu.or.kr



9 788984 796829

93340

ISBN 978-89-8479-682-9